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차 례

발 간 사 ·····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6

기사심의를 마치면서 ····· 양삼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8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 13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15
제3장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개정 및 제정 ····· 23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 27
1. 주 의 ····· 28
2. 경 고 ····· 30
3. 경고문 게재결정 ····· 35
4. 기 각 ····· 37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 39
1. 중앙일간신문 ····· 41
2. 지방일간신문 ····· 42
3. 시사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 44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 45
1. 기사내용 ····· 45
가. 인물부각
나. 인터뷰
다. 판세분석

2. 제 목 48
3. 사 진 49
4. 여론조사 49
5. 상업광고 50
6. 칼 럼 50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53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60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69
1. 주 의 69
2. 경 고 86
3. 경고문 게재결정 182
제2장 시정요구 191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211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214
• 선거기사심의기준 217
• 서 식 219

발 간 사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기존의 한국 정치가 지녔던 금권선거와 지역대결의 악습은 상당 부분 깨지거나 깨질 조짐을 보여주었으며, 이 점에서 17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선거로 평가받으리라고 봅니다.

균형 잡힌 여대야소, 여성 의원의 양산, 개혁 내지 진보적인 정치 신인의 대거 국회진출로 특징지워지는 4·15 총선에는 예비후보 등록제, 후보선정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선거비용 공개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1인 2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중 위력을 발휘한 것은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투표하는 1인 2표제와 강화된 처벌규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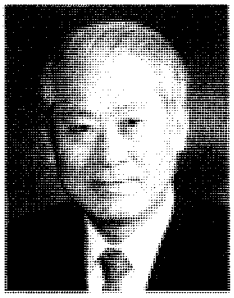
이 두 가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종래의 돈선거·조직선거의 병폐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치러지긴 했지만,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17대 총선의 투표율은 6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8년 13대 총선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총선 투표율이 이번 총선에선 16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지난 2000년 16대 총선때의 57.2%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내용적 민주주의와 함께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선거는 바로 민주시민의 '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불공정한 기사를 가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행태에서 전반적으로 양적 편파성은 지난 선거때에 비해 개선된 면모를 보였으나, 질적인 편파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거보도의 편향성은 때때로 명백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유래하기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하고, 구조적·기술적 제약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정성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실천적 규범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은 나름대로 공정보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실성·균형성·다양성을 포함하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공정성의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백서는 제1부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반 업무현황, 제2부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4·15 총선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3부에 종합평가, 제4부에 심의의결 사례, 제5부에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을 각각 수록했습니다.

아무쪼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립 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 백서가 앞으로 언론의 선거보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우리의 선거문화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기사심의를 마치면서

2004년 제17대 총선 기사심의위원회는 2000년 제16대 총선 기사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4번째로 구성되어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이 대폭 강화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금지되면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야간의 대립 심화와 함께 각 정당들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난 경향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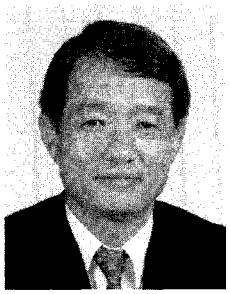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변화와 정치상황에서 어느 선거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과거의 보도 관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다수 신문들이 각 당의 세(勢) 다툼과 지도부의 동정을 다루는데 치중했으며 이벤트성 보도와 흥미위주식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보다는 누가 얼마나 앞서느냐 하는 경마식 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 신문의 경우 지역적 편향성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들 자체의 공정보도노력,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운영 등에 의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나 선거법상 보도를 제한하는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보면 자체심의는 제16대 총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93건 보다 적은 69건에 머물렀고,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제기하는 시정요구는 제16대 총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서 9건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결정유형을 도입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주의, 경고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 삼 승

칼럼은 특정 후보가 정기간행물을 통해 자신의 견해가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타후보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거여견제론'과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진보를 지향하는 일부 언론도 역시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음성적인 편향보도라며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의견개진을 위축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한계를 일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사심의위원님들간에 인터넷매체 등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개방성과 선거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계적인 균형이나 중립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정성의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심의와 제도나 심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모두 12차례의 회의를 가졌는데, 매회의마다 열의와 진지함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혹 언론현실과 법률적 관점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도 있었으나, 신중한 토의를 통해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심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6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 삼 승**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3장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개정 및 제정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1. 설치근거 및 기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04년 4월 15일) 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운영되었다.

2. 구 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는 최현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원석 변호사, 한국신문협회는 이경일 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은 김주언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한나라당은 이동화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새천년 민주당은 김재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보유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들 7명과 함께 양삼승 변호사, 최광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 프레스센터 8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회의 겸 발족식을 갖고 호선에 의해 양삼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유원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첫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의결을 하여 불공정한 기사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둘째,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셋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6대 총선·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16대 대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운영방침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경고문 게재' 결정이라는 새로운 결정유형을 도입하고 '후보자의 칼럼게재에 대한 제한'으로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결정은 법문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행사를 자제하되 사안이 심각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둘째, 경고문 게재결정을 도입하여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토록 함으로써 자체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주의나 경고결정은 후속조치가 없어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문제점과 불공정성이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결정에 그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제재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정정보도 게재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간단치 않고 조사를 위해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해 정정보도 게재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반론보도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결정내용으로 보았다. 다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되어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정정보도 내지 사과문 게재를 원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 게재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비록 시정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내지는 사과문 게재결정이 곤란한 경우 반론보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다섯째,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주의·경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의는 특정인에 유·불리하거나 여론조사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한 경우에, 경고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를 부각시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등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경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섯째,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이 대폭 강화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금지되면서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칼럼을 게재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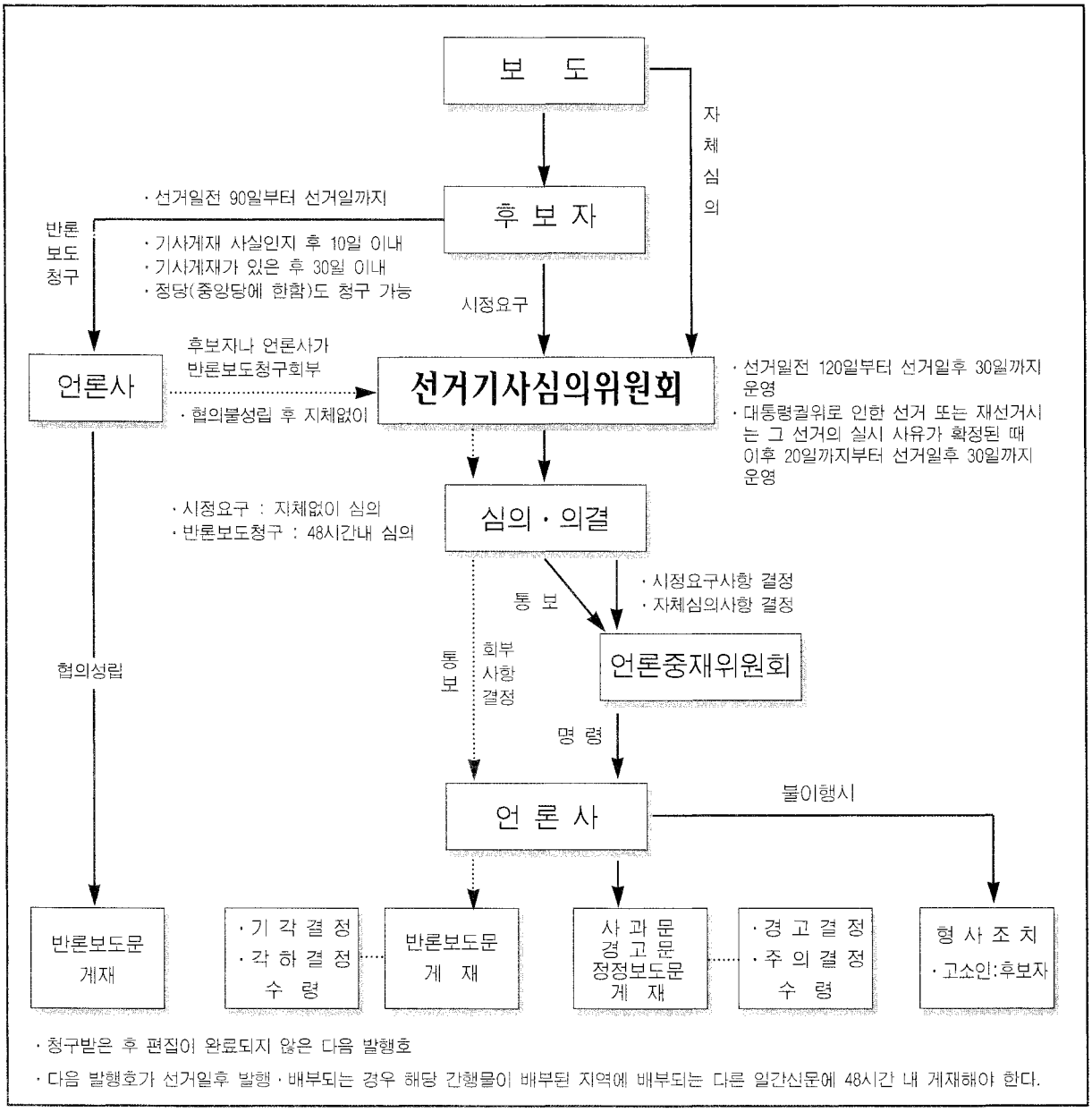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금하는 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칼럼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와 무관한 소재를 다룬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

2. 심의 · 의결 절차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세 갈래의 심의를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1 참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절차

〈표 1〉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한다.

자체심의는 심의위원회 안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 실무팀이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찾아내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안건의 개별 심의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결정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해당 언론사에 발송하였다.

나. 시정요구

시정요구의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건에 대한 결정을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통보하였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사게재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기각 및 각하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그 결정문을 통보한다.

선거법은 또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시한은 후보자의 게재청구를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호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 호가 선거일후 발행·배부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라. 처벌규정

언론사가 사과문·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사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150일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69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9건 등 총 78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는 주의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 5건을 결정하였고 시정요구는 경고 1건, 기각 3건의 결정과 취하 5건이 있었다.

실제 피해구제는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 구독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주의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 5건을 결정하였다. 자체심의 결정된 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1건(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21건(30.4%),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4건(5.8%), 상업광고제한 위반 3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간신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간신문과 시사주간신문 각 11건이었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41건(87.2%)으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6건(12.8%)을 압도했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9건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는 경고 1건, 기각 3건, 취하 5건이었다. 취하된 5건은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등이 게재되어 취하된 사건들이다. 피시정요구인을 분류하면 일간신문 7개 매체(중앙지 6개, 지방지 1개), 지역주간신문 2개 매체로 나타났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반론보도청구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려면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보다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 자체심의 대상매체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600여종의 정기간행물 중에 구독이 가능하고 정치 기사를 게재하는 서울과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등 458종의 인쇄매체와 통신 2종 등 총 46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보도기사를 자체심의했다. 〈표 2·3·4 참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종(일간신문 28종, 통신 2종, 지역주간신문 88종, 시사주간지 31종, 시사월간지 5종), 부산 5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3종), 대구 10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6종), 인천 7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4종), 광주 14종(일간신문 10종, 지역주간신문 4종), 대전 6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2종), 울산 6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3종), 경기 60종(일간신문 15종, 지역주간신문 45종), 강원 12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10종), 충북 23종(일간신문 5종, 지역주간신문 18종), 충남 29종(지역주간신문 29종), 전북 24종(일간신문 8종, 지역주간신문 15종, 시사월간지 1종), 전남 38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36종), 경북 28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26종), 경남 39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35종), 제주 5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2종)이었다.

전체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95종(중앙지 28종, 지방지 67종), 통신 2종, 지역주간신문 326종, 시사주간지 31종, 월간지 6종이었다.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일간신문 및 통신 현황

1. 일간신문 현황 : 총 95종 (중앙지 28종, 지방지 67종) 〈표 2〉

시도별	매 체 명			
중앙지(28)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신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제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굿데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시도별	매 체 명
부 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 구(4)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인 천(3)	경도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광 주(10)	광주매일, 광주일보, 광주타임스, 대한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대 전(4)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남일보
울 산(3)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경 기(15)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시민일보, 아세아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강 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 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한빛일보
충 남(0)	
전 북(8)	매일전북,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매일
전 남(2)	목포일보, 전광일보
경 북(2)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 남(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 주(3)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2. 통신 현황 : 2종 (뉴시스, 연합뉴스)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지역주간지 현황

지역주간지 현황 : 총 326종 〈표 3〉

시도별	매 체 명			
서 울(88)	강남포스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광진신문, 구로타임즈, new용산자치신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서울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우리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성북신문, 송파자치신문, 신용산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은평타임즈,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강서양천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서울송파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 중랑신문, 주간 푸른영등포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중랑구민신문

시도별	매 체 명			
	내일신문 49개(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거제통영, 고양파주, 과천의왕, 광명, 광주, 구로금천, 구미, 군산, 군포, 김제, 김포, 김해, 남수영, 노원도봉, 대구, 대전, 동남구, 마산, 목포, 무안, 부천시민, 북구, 북구사상, 분당, 사천, 성남, 수원, 수지,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일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포항, 해운대)			
부 산(3)	기장뉴스, 부산여성신문, 영도신문			
대 구(6)	달서신문, 대구 푸른신문, 라이프매일, 영남의정신문, 위클리포유, 팔공신문			
인 천(4)	경인열린신문, 계양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			
광 주(4)	광주광산신문, 광주전남 오마이뉴스, 시민의소리, 첨단신문			
대 전(2)	대전타임스, 충청뉴스			
울 산(3)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한울신문			
경 기(45)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고양파주시민연합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과천신문 광명신문,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대안신문,	더 부천,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민안신문, 복지21, 부천신문, 부천자치신문, 북부연합신문, 세종신문, 수원신문, 시티타임즈, 시흥21,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양평백운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의왕신문, 의정부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저널, 자치안성,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포천신문, 풍양신문, 화성오산신문
강 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삼척동해신문, 시민의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 설악신문, 주간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 북(18)	괴산증평신문, 보은신문, 삼군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영동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단양뉴스, 주간 예성신문, 주간 옥천신문,	주간 제천신문, 주간 진천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투데이제천
충 남(29)	뉴스서천, 뉴스청양, 만빛신문, 무한정보신문, 백제사랑백제신문, 보령신문, 서해안신문, 연기신문,	온양아산신문, 주간 공주신문, 주간 금산민보, 주간 금산신문, 주간 금산저널, 주간 당진시대, 주간 문화신문, 주간 보령시민신문,	주간 서령신문, 주간 서천신문, 주간 아산신문, 주간 예산신문, 주간 온양신문, 주간 온주신문, 주간 우리고장당진뉴스, 주간 진악신문,	주간 천안신문, 주간 홍성신문, 천안투데이, 청양신문, 태안신문
전 북(15)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금강뉴스미디어,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신문, 남원민보, 남원시민신문, 남원신문,	부안저널, 빛과소금신보, 새부안신문, 서림신문,	순창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시도별	매 체 명			
전 남(36)	격주간 담양신문, 곡성신문, 광양만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주간신문, 목포저널,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여수로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안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신문, 전남타임스,	주간 강진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목포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진도군민신문,	주간 푸른바다,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청해진신문, 향도신문, 화순군민신문
경 북(26)	격주간 군위신문, 격주간 의성신문, 경북내일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김천문화신문사, 문경신문,	상주신문, 새재신문, 생활타임즈신문, 성주신문, 영일만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주간 경북북부신문, 주간 경북중부신문, 주간 경산신문, 주간 경산자치신문, 주간 고향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영덕신문,	주간 영주신문, 주간 예천신문, 주간 청도신문, 주간 청송신문, 칠곡신문
경 남(35)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경남시사신문, 경남우리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김해신문, 남해뉴스,	남해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연합신문,	와룡신문, Weekly경남, 의령신문, 주간 아림신문, 주간 한산신문, 주간 함양신문, 주간 함주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파인더닷컴, 하동신문, 하동정론, 함안신문, 함양군민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
제 주(2)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투데이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시사주간지 · 월간지 현황

시사주간지 현황 : 총 31종, 시사월간지 현황 : 총 6종 〈표 4〉

분야별	매 체 명			
시사주간지(31)	뉴스매거진, 뉴스메이커, 뉴스위크, 뉴스포럼, 매경 ECONOMY, 민주신문, 시민운동연합신문, 시민의신문,	시사뉴스, 시사문화신문, 시사신문, 시사오늘신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오마이뉴스, 월요신문,	이코노미스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대한, 주간동아, 주간시정신문, 주간저널,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현대, 한겨레21, 한경비지니스, 한국시사뉴스, 한국정치경제신문
시사월간지(6)	시사전북, 신동아, 월간 말, 월간 조선, 월간 중앙, 한국논단			

제3장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개정 및 제정

1. 경과사항

제9조(인용보도)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제한하는 기준을 2004년 5월 12일자로 제정하였다.

2. 개정내용

제9조(인용보도)에서 『개인의 글을 게재할때는』 부분을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으로 개정하였다.

또 위원회는 칼럼을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한 형태로 보고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해 오다가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제2항에 명문화하였다.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주 의
2. 경 고
3. 경고문 게재결정
4. 기 각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방일간신문
3. 시사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1. 기사내용
2. 제 목
3. 사 진
4. 여론조사
5. 상업광고
6. 칼 럼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와 피해자(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로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자체심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실무팀에서 대상매체(일간신문 95개, 지역주간신문 326개, 시사주간신문 31개, 시사월간지 6개, 통신 2개 등 460개)의 선거 관련 기사내용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등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내 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 자체심의 안건 79건을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불문처리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 주의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위반 69건 중 주의는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결정 5건이었는데, 경고가 가장 많아 76.8%를 차지했다. 경고문 게재결정은 경고결정보다 높은 제재조치로서 이번 총선기사 심의에서 처음 도입된 새로운 결정 유형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결과 2000년 16대 총선 때의 위반 기사 93건(주의 35건, 경고 58건)보다 적은 69건으로 줄어든 것은 언론사들이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주의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은 69건의 기사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1건(59.4%)

② 칼럼게재 제한 위반 21건(30.4%)

③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위반 4건(5.8%)

④ 상업광고 제한 위반 3건(4.3%)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현황을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6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주의 1건, 경고 3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주의),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건(경고)이었다. 반면 지방일간신문은 41건으로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경고 16건, 경고문 게재결정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주의 2건, 경고 13건, 경고문 게재결정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3건(주의), 상업광고 제한 위반 3건(경고 2건, 경고문 게재결정 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시사주간신문은 11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0건(주의 2건, 경고 8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건(경고)이었고, 지역주간신문은 11건으로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2건, 경고 9건)이었다. 시사월간지와 통신은 위반 사례가 없었다.

위반유형별 결정내용을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사 7건에 대해서는 주의결정을,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 33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1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후보자의 칼럼은 특정 후보가 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가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후보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18건에 대해서 경고결정을 내렸고, 반복적으로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3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보도하지 않은 기사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으며, 상업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기사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경고, 1건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자체심의 외에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사과문게재 등을 요청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9건이었는데, 일간신문이 중앙지 6건, 지방지 1건으로 7건이었고 지역주간신문이 2건이었다. 시정요구는 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보다 늘어났다.

시정요구 심의결과 경고 1건, 기각 3건 결정을 내렸으며 5건은 취하되었다. 취하된 5건은 해당 언론사가 정정 내지는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를 약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반론보도청구건은 없었다.

1.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69건의 기사 중 15.9%인 11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주의결정이 경고보다 적은 것은 4년 전인 16대 총선 당시와 마찬가지 추세였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2건, 지방일간신문 5건,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11건의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7건(64%)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기사가 4건(36%)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위반 기사의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참조〉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주의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은 중앙일간신문은 7건 중 1건에 불과했으나 지방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지역주간신문이 각 2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선거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강

도가 비교적 약한 것이었는데, 지방의 일간·주간 신문의 경우 '2파전 압축' 이나 '양자대결 구도', '특정후보 독주예상' 등으로 기사를 다루었다. 스포츠투데이는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기발한 선거운동을 소개했으며, 오마이뉴스와 뉴스포럼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주도한 두 야당의 의원 5인은 정계를 떠나라'는 내용의 정치학자 칼럼을 보도하거나 인용보도해 타 정당 후보자들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결여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주 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1	수도권일보	2003. 12. 23.	2면	성남 분당갑 2파전 압축 … 성대결 관심 고조
2004-자심-2	영남일보	2003. 12. 25.	5면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 구도
2004-자심-6	함평신문	2004. 1. 5.	8면	지금은 이낙연의원 독주
2004-자심-24	새거제	2004. 2. 14.~20.	5면	"거제는 김기춘 VS 김현철 빅매치"
2004-자심-61	오마이뉴스	2004. 3. 18.~24.	6면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했다.
2004-자심-62	뉴스포럼	2004. 3. 18.~31.	1면	최병렬·홍사덕·조순형·유용태·박관용 '갑신오적'은 정계를 떠나라 !
2004-자심-76	스포츠투데이	2004. 4. 9.	28면	유종필 "계백장군 납시오"

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사의 기사 대부분이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 여론조사 결과보도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기본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4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신문 1건, 지방일간신문 3건이었다.

조선일보는 서울 48개 선거구 중 접전예상 20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개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해 순위를 매기거나 우세하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주의결정을 내렸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에 의한 주의결정은 16대 총선때는 1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4건으로 줄었고, 중앙일간지의 경우 7건에서 1건으로 줄어든 것은 언론사들이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8	강원도민일보	2004. 1. 12, 16, 19, 26, 28, 30.	각 4면	부동층 40% … 혼전 양상 부동층 50% … 신뢰 확보가 당락 좌우 한나라 강세 … 세대교체 역풍 미지수 부동층 65% … 정당별 지지도 엇비슷 현역 선두 속 2强 후보 '맹추격' 선거구 통합땐 지역대결 양상
2004-자심-69	충청일보	2004. 3. 31.	5면	차세대 리더 "鄭의장" 여론조사 36% 1위
2004-자심-70	경남신문	2004. 4. 1.	1, 3면	한나라 3, 우리당 4곳 우세
2004-자심-71	조선일보	2004. 3. 22.	1면	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곳 우세

2. 경 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69건 기사 중 76.8%인 53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16대 총선 당시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93건 기사 중 62.4%인 58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건수는 조금 줄었으나 비율은 늘어났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4건(7.6%), 지방일간신문 31건(58.5%),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이 각 9건(17.0%)이었다.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전체 위반기사 6건 중 경고 결정이 4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은 전체 위반기사 41건 중 31건이나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13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1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앙이나 지방 구분없이 일간신문은 모두 주의보다 경고결정이 많았는데, 결정 중에서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일간신문(75.6%)이 중앙일간신문(66.7%)보다 더 많았다.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도 주의·경고결정 중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81.8%로 주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은 각 11건의 위반기사 중 9건이 각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때문이었다.

17대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종전과는 달리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보도 행태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신문들은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이나 특정 정당들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 보도 자체심의에서 지난 16대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신문이 경고를 많이 받았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3건(62.3%)으로 가장 많고 ②칼럼게재의 제한 위반이 18건(34.0%) ③상업광고의 제한 위반이 2건(3.8%)이었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참조〉

1)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예정자가 선두라고 보도한 경우
2) 선거 초반부터 양자대결 구도로 보도하여 타 후보들을 불리하게 한 경우
3)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견해를 보도한 경우
4)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만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경우
5)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단독 기자회견·출마의 변 등을 통해 포부·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거나 경쟁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6) 시민단체의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경우
7) 특정 후보자 2인을 특정 광역시의 간판주자로 부각시킨 경우
8) 출마 예정자의 저서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한 경우
9) 후보의 공약을 보도하며 1~2인의 인물사진만 게재하고 경쟁후보들의 사진을 누락시킨 경우
10) 특정 정당대표의 선거지원유세를 보도하면서 부각성 제목을 단 경우

〈경 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3	무등일보	2003. 12. 19, 22, 24, 26.	각 5면	"이정일의원 대항마 관심" 등
2004-자심-5	전북도민일보	2004. 1. 9, 10, 12.	3면 8면 4면	'칼의 힘, 펜의 힘' 내일 출판기념회 펜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흥근 민주 홍보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2004-자심-7	목포투데이	2004. 1. 7.	11면	"우리들 가슴에 꼽은 비수, 표로 심판"
2004-자심-11	뉴스포럼	2003. 12.18.~31. 2004. 1. 8.~21.	각 7, 8면	"정정당당하게 구태정치 깰 터" 등
2004-자심-14	뉴스포럼	2004. 2. 5.~18.	각 7, 8면	"반개혁 심판 386선발대" 등
2004-자심-15	시민일보	2004. 1. 29.	10면	"국민이 새인물 뽑아야 할 때"
2004-자심-16	시민일보	2004. 2. 5.	10면	"소외계층 아픔 살피겠다"
2004-자심-18	주간저널	2004. 2. 10.	24~26면	'성실' 그리고 김해시민에 대한 의리
2004-자심-19	경기신문	2004. 2. 13.	3면	"수원발전위해 출마"
2004-자심-20	아세아일보	2004. 2. 13.	2면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
2004-자심-23	조선일보	2004. 2. 13.	12면	경남 총선 '빅매치 대결' 관심 끈다
2004-자심-32	주간저널	2004. 2. 20.	18~20면	"새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2004-자심-35	주간현대	2004. 2. 29.	54면 55면	안산의 링컨-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2004-자심-39	스포츠투데이	2004. 2. 28.	26면	노웅래 "카메라출동 GO!"
2004-자심-43	오마이뉴스	2004. 2. 19.~25.	15면	김옥두에 도전장 낸 'DJ의 입'
2004-자심-44	시민일보	2004. 2. 18, 23, 26.	각 14면	"무소속 옥중출마 불사하겠다" "총선연대 낙천대상 신중 기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 당 공천은 무겁게 받아들여"
2004-자심-45	함양군민신문	2004. 2. 9.	3면	생활정치 기치, 개혁바람의 주역 "희망의 정치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2004-자심-46	충청리뷰	2004. 2. 28.	1면 9면	"승부는 이제부터!" 홍재형 윤의권 "이제부터 시작하자"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47	강서양천신문	2004. 3. 1.	4면	信念으로 택한 길 총선승리로 보답
2004-자심-50	스포츠투데이	2004. 3. 8.	26면	아침형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
2004-자심-53	주간저널	2004. 3. 8.	24~26면	성공적인 지방자치 행정경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2004-자심-63	경기신문	2004. 3. 22.	3면	"남동공단 리모델링 추진"
2004-자심-64	호남매일	2004. 3. 22.	3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돼야"
2004-자심-65	전국매일	2004. 3. 24.	4면	경기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김석균 후보
2004-자심-66	전국매일	2004. 3. 26.	4면	지역경제 살리기 혼신의 노력 다 할터
2004-자심-68	광주내일신문	2004. 3. 13.	3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 하고싶다"
2004-자심-72	주간 해진신문	2004. 3. 31.~ 4. 6.	1~3면	"새천년민주당 이정일 후보 '탄핵사과·주요현안…" 등
2004-자심-73	여수로신문	2004. 4. 1.	1·8면	큰 등대가 되겠다는 김재출 후보(무소속)
2004-자심-74	매일신문	2004. 4. 5.	4면	대구간판 '西 재섭-東 강철'
2004-자심-75	시사저널	2004. 4. 15.	32~33면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무의미"
2004-자심-77	시민일보	2004. 4. 9.	4면	후보자 주변 썰렁…얼굴 알리기 바빠
2004-자심-78	황강신문	2004. 4. 6.	3면	장날찾아 거리유세, 적임자 강조 지지호소
2004-자심-79	경남여성신문	2004. 4. 15.	1면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나.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4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켰으나 부산일보와 시대일보가 이를 위반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는 광고금지 기간인 2004년 1월 17일자 3면에 부산 수영지역구에서 한나

라당 공천신청을 낸 여의사의 개인경력 광고를 게재했으며, 서울에서 발행되는 시대일보도 1월 28일자 8면에 『박영선 인터뷰 사람 향기』라는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의 저서 광고를 게재했다.

〈경 고〉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9	부산일보	2004. 1. 17.	3면	한국 무궁화회 총재 김정희
2004-자심-12	시대일보	2004. 1. 28.	8면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

다.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5 참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의 칼럼 게재시에는 보통 경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번 총선에서 제재를 받은 새로운 유형이다.

칼럼게재 제한은 상업광고의 제한과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필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내용의 공정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정 칼럼란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칼럼게재 제한으로 경고결정을 받은 경우로 중앙일간신문은 단 1건이었으나 지방일간신문은 16건이나 차지했으며, 시사주간신문은 1건이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지방일간신문은 전민일보로 7건이었고, 전북중앙신문과 시민일보가 각 2건으로 나타났다.

〈경 고〉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5〉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10	전북도민일보	2004. 1. 26.	11면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
2004-자심-13	호남일보	2004. 1. 20.	5면	"참여하는 국민이 새해의 희망"
2004-자심-21	월요신문	2004. 2. 22.	5면	민의 귀 닫고 야합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4-자심-25	매일신문	2004. 2. 18.	7면	석패율제도와 대구시민
2004-자심-26	전북중앙신문	2004. 2. 20.	8면	남북정상회담 보고싶다
2004-자심-29	전민일보	2004. 2. 24.	5면	전통을 살리는 대규모 문화적 상상력
2004-자심-37	전민일보	2004. 2. 26.	5면	전북은 개혁의 텃밭
2004-자심-41	전민일보	2004. 3. 3.	5면	전주·전북 중심시대 준비해야
2004-자심-49	전민일보	2004. 3. 4.	10면	그대에게 다가서고 싶다
2004-자심-51	시민일보	2004. 3. 9.	5면	아! 안희정
2004-자심-52	강원일보	2004. 3. 6.	7면	폐광지역 도약의 새 전기
2004-자심-54	전민일보	2004. 3. 9.	10면	청산되어야 할 패거리문화
2004-자심-55	전민일보	2004. 3. 10.	10면	전북을 신산업 물류중심지로
2004-자심-56	전민일보	2004. 3. 11.	10면	물, 정치 그리고 희망
2004-자심-57	서울경제	2004. 3. 12.	6면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절실
2004-자심-58	전북중앙신문	2004. 3. 12.	8면	국가발전과 출산율
2004-자심-59	전북일보	2004. 3. 16.	6면	대통령탄핵은 신종쿠데타
2004-자심-60	시민일보	2004. 3. 18.	5면	내가 겪은 3·12 쿠데타의 현장

이 밖에 시정요구심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연수저널에 대해 1건의 경고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노인센터 건립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공약사항과 연관된 활동을 보도한 것, 후보자 합동토론회 기사에서 특정 후보가 발표한 국립 예술의 전당 조감도까지 게재한 것은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3. 경고문 게재결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 이번 총선 때 처음으로 '경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유형으로는 선거법상 사과문, 정정보도문만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과문은 1991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정정보도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 규칙에 의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주의·경고 결정만 내렸었다.

하지만 주의·경고 결정은 그 자체로 끝날 뿐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비록 '경고문'이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선거법상 명문화돼 있는 '사과문'보다 제재수위가 낮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고문 게재' 결정은 불공정한 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에 있어서도 적절한 결정유형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은 언론사가 해당 문제 기사의 보도날짜, 제목, 불공정사유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6 참조〉

〈경고문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6〉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31	서울일보	2004. 2. 23, 24.	각 7면	'국민의 선택과 변화' 한국정치현실·民意소재

나.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7 참조〉

〈경고문 게재〉 상업광고의 제한 위반

〈표 7〉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30	서울일보	2004. 2. 23, 24, 25, 26, 27. 3. 2.	7면(2. 23.) 그 외는 각 11면	국민의 선택과 변화

다.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8 참조〉

〈경고문 게재〉 칼럼게재의 제한 위반

〈표 8〉

안건번호	매체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목
2004-자심-28	전북도민일보	2004. 2. 18.	11면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2004-자심-33	전북도민일보	2004. 2. 26.	11면	지역인재풀시스템이 필요하다
2004-자심-34	전북도민일보	2004. 2. 27.	11면	여성의 정치참여없이 정치개혁 없다

경고문 게재결정 5건은 모두 2개 지방일간신문에 대해 내려졌는데, 전북도민일보가 3건, 서울일보가 2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3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3일에 걸쳐 각각 다른 후보예정자 3인의 칼럼을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서울일보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6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광고하고, 같은 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홍보성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경력 등을 이틀 연속 게재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4. 기 각

9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3건이었다. 문화일보가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서대문갑구 한나라당 후보자의 아내 명의 건물 2채에 대해 재산증식 논란이 있으며 경쟁 상대인 열린우리당 후보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공방이 있다며 이에 대한 두 후보자의 해명을 보도하자, 한나라당 후보가 건물 2채는 12년전 과도한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융자받아 지은 것으로 재산증식에 전혀 의혹이 없고 자신과 대비해 열린우리당 후보의 전과기록 공방이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부각 보도했다고 주장, 경고조치와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에서 구체적인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경쟁 상대후보의 민주화투쟁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반드시 그에게 유리한 보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각했다.

또한 부산일보의 『부산 금정구 시민 이슈 토론회』 기사 중 부산 금정구 자민련 후보자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자신이 부유세 도입을 제일 먼저 주장 했는데도 마치 한나라당 후보자가 한 것처럼 기사화 했으며, 자신이 부산항에 관해 발표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언론사에 이미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어 시정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졌고, 언론사의 당해 기사 중의 토론 내용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적시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의사표현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산항에 관한 발표를 게재했으므로 전혀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남 양산 민노당 후보자가 신청한 지역주간신문인 양산신문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기각되었다. 민노당 후보자는 양산신문이 『입후보자 지상토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객관적 기준 없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개최해 보도한 것과, 다른 날 『총선후보 유세현장 이모저모』 제하의 기사에서 8명 후보 중 자신을 제외한 7명 후보의 유세동향만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문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크기의 기사내용을 동일 지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양산신문이 토론회에 참석할 인물을 선정함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준용하여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 3명, 직전 선거인 16대 총선 출마자 중 득표율이 5%가 넘는 2명, KBS 여론조사 결과·부산일보·경남신문 보도를 참고로 해 인물 적합도를 감안한 후보 1명 등 총 6명의 후보를 토론회 참석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양산신문이 시정요구인에게 유세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전화통보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아 시정요구인의 유세동향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양산신문이 밝혀 왔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총 460개로 일간신문 95개(중앙지 28개, 지방지 67개), 시사주간신문 31개, 지역주간신문 326개, 시사월간지 6개, 통신 2개였다.

이 중 중앙일간신문 3개, 지방일간신문 21개, 시사주간신문 6개, 지역주간신문 11개 등 모두 41개 매체가 선거기사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주의·경고·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매체 비율은 8.9%로 16대 총선 때의 17.5% 보다 감소하였다.

중앙일간신문은 심의대상 28개 매체 중 3개가 지적돼 10.7%의 비율을 보였는데, 3개 신문이 6건을 위반해 주의 2건, 경고 4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은 심의대상 67개 매체 중 21개가 지적돼 31.3%의 비율로 위반, 21개 신문이 41건을 지적받아 주의 5건, 경고 31건, 경고문 게재 5건의 결정을 받았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31개 매체 중 6개가 지적돼 19.4%의 비율로 위반한 시사주간신문은 6개 신문이 11건을 지적받아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을 받았는데 칼럼게재 제한 위반 1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지역주간신문은 326개 매체 중 11개가 지적돼 3.4%의 비율로 위반, 11개 신문이 1건씩 모두 11건을 지적받아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11건 모두가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표 9·10 참조〉

간행형태별 위반현황

〈표 9〉

구분 / 간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일간신문	중앙	6	4	1			1		4	2
	지방	41	16	3		3	19	5	31	5
시사주간신문		11	10				1		9	2
지역주간신문		11	11						9	2
총 계		69 100.0%	41 59.4%	4 5.8%		3 4.3%	21 30.4%	5 7.2%	53 76.8%	11 15.9%

매체별 위반현황

〈표 10〉

간별	매체명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고	주의
중앙일간신문	조선일보	2	1	1					1	1
	서울경제	1					1		1	
	스포츠투데이	3	3						2	1
	소계	6	4	1			1		4	2
지방일간신문	강원도민일보	1		1						1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2	2						2	
	경남신문	1		1						1
	매일신문	2	1				1		2	
	무등일보	1	1						1	
	부산일보	1				1			1	
	서울일보	2	1			1		2		
	수도권일보	1	1							1
	시대일보	1				1			1	
	시민일보	6	4				2		6	
	아세아일보	1	1						1	
	영남일보	1	1							1
	전국매일	2	2						2	
	전민일보	7					7		7	
	전북도민일보	5	1				4	3	2	
	전북일보	1					1		1	
	전북중앙신문	2					2		2	
	충청일보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일보	1					1		1	
	소계	41	16	3		3	19	5	31	5
시사주간신문	뉴스포럼	3	3						2	1
	시사저널	1	1						1	
	오마이뉴스	2	2						1	1
	월요신문	1					1		1	
	주간저널	3	3						3	
	주간현대	1	1						1	
	소계	11	10				1		9	2
지역주간신문	강서양천신문	1	1						1	
	경남여성신문	1	1						1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상업광고제한	칼럼게재제한	경고문 게재결정	경고	주의
지역주간신문	광주내일신문	1	1						1	
	목포투데이	1	1						1	
	새거제	1	1							1
	여수로신문	1	1						1	
	주간해진신문	1	1						1	
	충청리뷰	1	1						1	
	함양군민신문	1	1						1	
	함평신문	1	1							1
	황강신문	1	1						1	
	소계	11	11						9	2
총계		69 100.0%	41 59.4%	4 5.8%		3 4.3%	21 30.4%	5 7.2%	53 76.8%	11 15.9%

1. 중앙일간신문

중앙일간신문은 스포츠지 1개, 경제지 1개를 포함해 3개 매체가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해 4건을 위반, 3분의 2(66.6%)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지적됐다.

스포츠투데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해 3건의 지적을 받았고, 조선일보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각 1건씩 지적됐다. 서울경제는 칼럼게재 제한 위반 1건이 지적됐다.

스포츠투데이는 2월 28일자 26면에서 서울 마포갑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노웅래 전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 팀장의 이색 경력과 정치적 포부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또 3월 8일자 26면에서 서울 동작을 후보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의 정치입문 동기 및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했는데, 당시 베스트셀러 처세서적을 연상시키는 『아침형 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는 제목을 달아 사원 시절부터 새벽 6시에 출근한 아침형 인간의 원조격이라고 추켜세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신문이 4월 9일자 28면에서 민주당 후보 6인의 기발한 선거운동 사례를 보도한 것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지적을 받았지만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 후보들로서 서울 관악을 유종필 후보가 갑옷을 입은 계백장군 모습으로 유세에 나서는 등 장금이를 비롯한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2월 13일자 신문에서 경남 창원갑, 창원을, 남해·하동, 통영·고성, 거제 등 5개 선거구별 유력 후보예정자 2인의 경력과 최근 행적을 밝히면서 선거가 그들만의 경쟁으로 치러지는 양 추측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돼 경고결정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또 3월 22일자 1면 『서울 접전 예상 20곳 판세-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곳 우세』 제하의 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17개 지역구에서(오차범위 내는 6개 지역구), 한나라당이 3개 지역구에서(오차범위 내는 3개 지역구) 우세하다고 보도했는데,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하더라도 순위를 매기거나 우세하다는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오도할 우려가 있어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혔으나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 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된 것이다.

서울경제는 칼럼게재 제한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3월 12일자 오피니언란에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절실』이란 제목으로 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후보예정자인 박금자 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의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예방책을 제시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 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2. 지방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은 21개 매체에서 모두 41건을 위반했는데, 그 중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19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그 다음인 16건(39.0%),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와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각 3건(7.3%)을 차지했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의 경우 중앙일간신문이 1건(16.7%)인데 비해 지방일간신문은 19건(45.3%)이나 되어 대조적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방일간신문에 내린 결정은 경고 31건(75.6%), 주의와 경고문 게재결정이 각 5건(각 12.2%)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신문은 전민일보로 모두 7건이 칼럼게재 제한 위반으로 지적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공약과 포부를 내용으로 하는 칼럼을 필자의 주요 경력과 함께 고정칼럼난에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7건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받은 시민일보는 총 6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2건이었다. 전북도민일보는 위반 5건 중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4건이었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 총 19건 중 전북 전주에 있는 4개 지역일간신문이 14건을 차지했다.

지방일간신문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사례는 주로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지방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인천·경기지역과 전북지역이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와 대구·경북지역이 각 3건, 강원지역이 2건, 충북, 경남, 부산지역이 각 1건이었다. 대전·충남, 전남, 울산, 제주지역은 1건도 없었다. 〈도표 1 참조〉

지방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일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전남 함평·영광 선거구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초선인 이낙연 의원이 당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 의원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서 출간과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 3일에 걸쳐 집중보도,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릴레이 인터뷰'라는 표기하에 최근 1개월 동안 두 지역구에서 단 두 후보예정자만 다루면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두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을 각각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또 총선연대의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후보예정자 중 특정 후보예정자 3인만의 공천 부적격사유에 대한 해명을 얼굴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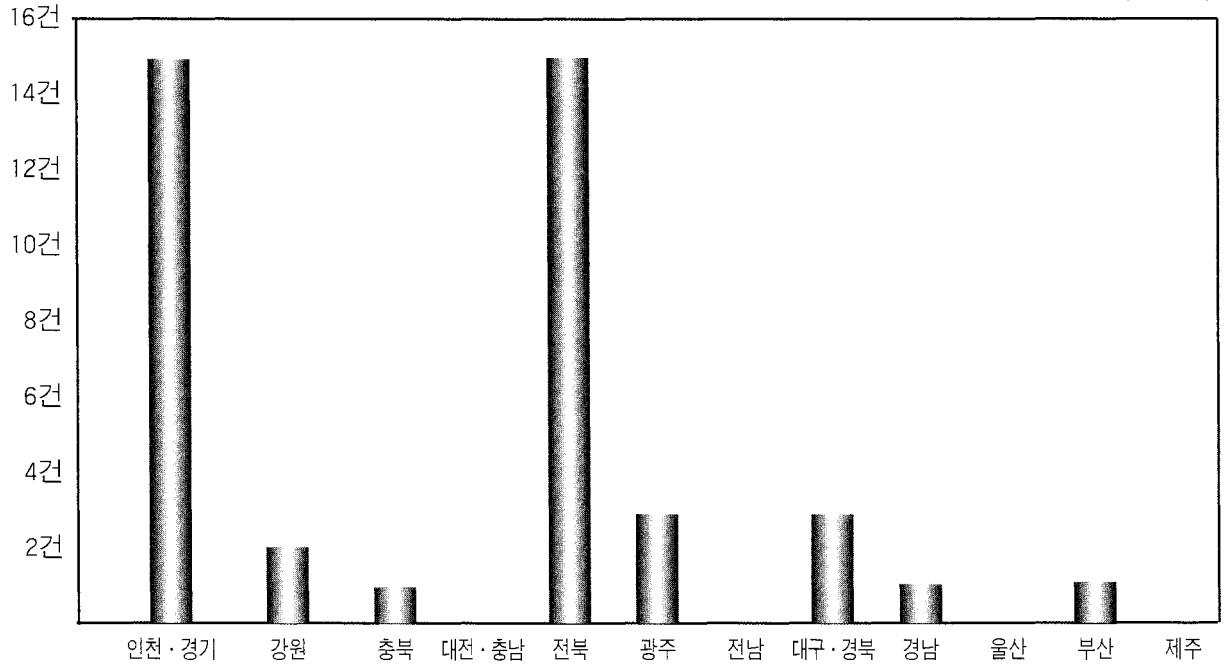
서울일보는 경기도 평택갑 후보예정자인 모 대학교수의 저서를 그의 인물사진·경력 등과 함께 광고 금지기간에 6일 연속 광고하고, 그 저서에 대한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경력 등을 이틀 연속 보도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경기신문은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인천 남동을 지역구의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과 공약사항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매일신문은 특정 후보자 2인을 대구지역 '간판주자'로 부각시키면서,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정권실세'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 여타 후보자들에

지방일간신문의 지역별 위반건수

〈도표 1〉



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수도권일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성남 분당갑의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3. 시사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시사주간신문은 31개 매체 중 6개 매체가 11건을 지적받았는데, 1건의 칼럼게재 제한 위반을 제외한 10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으며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주간저널은 세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세 차례나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사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간현대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안산의 링컨,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등 찬사일변도의 내용을 양면에 걸쳐 5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주도한 최병렬·홍사덕·조순형·유용태·박관용 등 갑신오적 5인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는 정대화 칼럼을 보도,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어 타 정당후보들과의 공정성 결여로 주의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326개 매체 중 11개 매체가 1건씩 모두 11건을 지적받았는데, 모두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고 주의 2건, 경고 9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내용은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그의 정견·경력·인물사진 등을 게재한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특정 지역구에서의 양강 구도 압축 보도였다. 그 밖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독주 예상보도, 특정 후보예정자만의 공약에 대한 상세 보도, 특정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견해 보도, 특정 정당대표의 선거유세활동에 대한 부각성 제목의 보도 등으로 각각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됐다.

지역주간신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서양천신문은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경력과 정견, 인물사진 등을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충청리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천자들의 양강구도가 확실히 이뤄졌다며 선거판세를 두 후보 위주로 분석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여수로신문은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 및 활동상황을 촛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제재조치를 내린 대상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제목·내용·사진 등과 여론조사의 요건을 미비한 기사 그리고 선거일전 90일부터 게재되는 후보자의 칼럼이었다.

그 중 기사내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후보자의 칼럼게재 21건, 제목 5건, 여론조사관련 4건, 상업광고 3건, 사진 2건의 순이었다. 기사내용을 위반 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20건, 인터뷰가 10건, 판세분석이 4건이었다.

제재결정된 기사와 칼럼 등은 크게 보아 특정 후보예정자와 후보자를 부각시키거나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보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경고 및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린 대상들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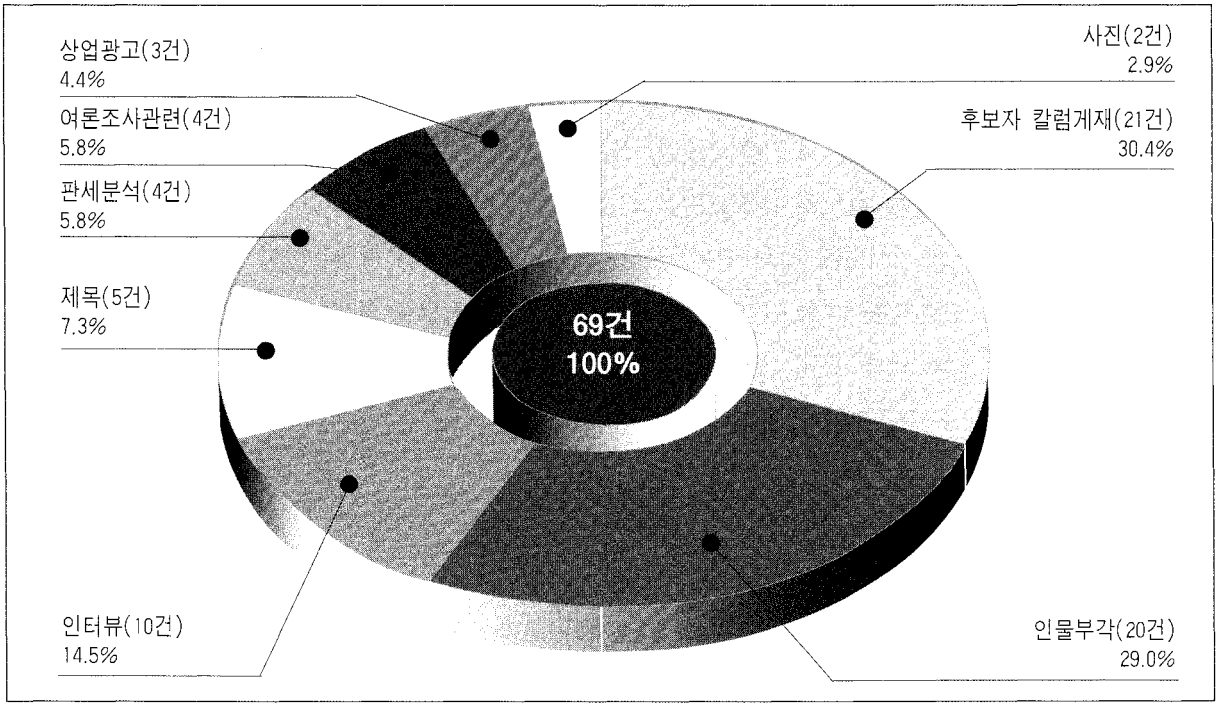
1. 기사내용

가. 인물부각

선거기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기사 내

위반 유형별 분포도

〈도표 2〉



용이다. 언론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인물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면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지적을 받았다. 언론사가 특정 인물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보도하는가 하면 연속 2~3일에 걸쳐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사례는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스포츠투데이가 유일했고, 대부분 지방일간신문·시사주간신문·지역주간신문에서 지적됐다.

인물부각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투데이는 서울 마포갑 후보예정자인 노웅래 전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 팀장의 이색경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소개하고, 또 서울 동작을에서 출마할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을 아침형 인간의 원조격이라 추켜세우면서 그의 정치 포부를 부각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에서 출마할 오홍근 민주당 홍보위원장의 저서 『칼의 힘, 펜의 힘』 관련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연3일(1월 9, 10, 12일)에 걸쳐 집중보도하여 경고결정을 받았다. 출판기념회에는 중앙당 간부들과 출입기자들이 대거 참석, 그의 당내 입지를 실감케 했다며 저서 내용과 저자의 경력도 게재하였다.

서울일보는 경기 평택갑 후보예정자인 김성수 한양대 교수의 저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에 대한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 경력 등을 2월 23일, 24일 이틀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주간저널은 2월 10일자에 경남 김해 지역구 후보예정자들을 거론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인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데 이어, 2월 20일자, 3월 8일자에도 경남 밀양·창녕과 창원갑 지역구의 한나라당 후보예정자 정용해 변호사, 열린우리당 후보예정자 공민배 전 창원시장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역시 3면에 걸쳐 각각 부각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주간현대는 2월 29일자 '인물탐구'란에 『안산의 링컨 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라는 제목 하에 경기 안산 지역구 후보예정자인 노영철 안산시 중소기업발전연구소장의 경력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미주한인총대학생연합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 선봉', '국제적 감각과 전문 경영능력의 소유자',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 '안산 발전을 견인할 최적의 인물' 등과 같은 찬사 일변도의 내용을 양면에 걸쳐 5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시사저널은 4월 15일자 2개면에 걸쳐 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 열린우리당 이광재 후보(전 국정상황실장)의 정견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주간 해진신문은 전남 해남·진도 민주당 이정일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4월 6일자 3개면에 걸쳐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나. 인터뷰

정당 공천을 전후해 매체들은 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곤 한다. 인터뷰 기사 중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지적된 경우는 중앙일간신

문은 한 건도 없었고 모두가 지방의 일간신문 혹은 주간신문이거나 시사주간신문이었다.

위반사례를 보면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릴레이 인터뷰·인터뷰 시리즈로 예고해 놓고도 특정 인물 1~2인의 인터뷰 기사만 게재해 다른 후보들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지방일간신문은 경기신문, 호남매일, 전국매일 등이었고, 시사주간신문은 시사저널, 지역주간신문은 광주내일신문이었다.

인터뷰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민일보는 '릴레이 인터뷰'란 표기 하에 1월 29일과 2월 5일 사이에 특별한 계기도 없이 2개 지역구에서 단 두 후보예정자의 출마의 변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해 지적을 받았으며, 함양군민신문은 '선택 2004-함양·거창지역 총선 주자들①'이라는 인터뷰 시리즈 기사 게재를 밝히면서도 정작 특정 후보예정자 1인만의 출마변과 경력, 얼굴사진 등을 부각 보도한 경우였다.

뉴스포럼은 2003년 12월 18일~2004년 2월 18일 사이의 인터뷰 기사에서 다룬 후보예정자 30명 중 26명이 열린우리당 인물이어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자신들이 정한 일정 절차(출마 오디션)를 거친 후 자체 기준에 부합한 후보예정자들에 한해 뉴스포럼에 인터뷰기사를 게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정당과 유력 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정기준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특정인의 인터뷰가 결정된다는 것은 후보예정자들의 정책성향과 비전에 따라 기회의 차등을 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다.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판세분석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판세보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며 또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의 자체분석, 현지취재 등에 근거해 선거 판세분석 보도를 한다. 그러나 그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할 때 보도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판세분석 보도행태는 흔히 후보 우열 보도, 즉 누가 얼마나 앞서느냐 하는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데, 2파전이니 양강구도니 하는 두 후보 위주로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 독주니 하며 한 후보를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후보 간 '우세·열세' 이외에 '경합·혼전·접전', 나아가 '박빙의 승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흥미위주의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후보 우열 보도는 선택할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우세'한 후보를 찍게 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일간신문들은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기간(선거기간 개시일~투표일) 이전에는 물론이요, 금지기간에도 여론조사기관의 분석과 각 정당의 자체분석을 토대로 정당과 후보의 우열을 보도했다. 금지기간 전과 후의 보도행태가 다른 점은 금지기간 전에는 '%'로 지지도 숫자

까지 표시했으나 후에는 '우세·경합' 등으로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언론사의 총선 판세보도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했다면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 분위기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판세분석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일보는 각각 다른 날짜 보도에서 전남 4개 지역구의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두주자로 부각시켰다. 함평·영광에서는 "일단 이낙연 의원 독주", 해남·진도에서는 "이정일 의원 대항마 관심", 보성·화순에서는 "박주선 의원 누가 맞서나", 무안·신안에서는 "민주 경선 한화갑 뿐"이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을 받았다.

언론사의 현지 취재에 의한 판세분석은 특정 지역의 민심에 근거한 보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민심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택시기사, 시민들이다. 1월 7일자 목포투데이는 목포지역에서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만을 게재해 경고결정을 받았다.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심의기준은 규정하고 있다.

2. 제 목

아무리 선거기사라 해도 유권자들이 모든 기사를 다 읽는 것은 아니며 자기에게 관심있는 기사만 읽는다는 사실은 제목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다. 눈을 끄는 제목이면 읽게 되기 때문이다.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다 보니 기사 내용보다 과장·축소되거나 특정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번 총선 기사 자체심의에서 제목이 공정성에 위반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16대 총선 때는 4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이 3건, 지역주간신문이 2건인데, 수도권일보·영남일보·무등일보·함평신문·경남여성신문이 각각 1건씩이었다. 위반 제목은 특정 후보예정자 1인을 부각시키거나 2파전 압축 혹은 2자 대결자 이름을 명시하거나 특정 정당대표를 부각시킨 것 등이었다.

위반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일보의 경우 선거일을 3개월여나 앞둔 시점에서 『성남 분당갑 2파전 압축』이란 제목을 달아 주의결정을 받았다. 영남일보도 같은 경우로서 선거일을 3개월이나 남겨놓고도 『문경·예천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구도』란 제목을 달았다. 무등일보도 선거일을 비슷하게 앞둔 시점에서 본문 내용과 함께 『함평·영광 일단 이낙연 의원 독주』란 제목을 달았는데, 앞의 두 신문보다 높은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인 함평신문도 전남 함평·영광에서 초선인 이낙연 의원이 당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어 현재로선 이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금은 이낙연 의원 독주』란 제목을 붙였다.

경남여성신문은 선거유세 활동을 벌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부각시킨 경우이다. 이 신문은 4월 15

일자에서 "박근혜 대표 체제 이후 첫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은 이날 대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나라당의 아성임을 실감케 했다"면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짙게 배여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박 대표에 대한 인기는 무척 높은 편이었다"고 보도했고,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숨죽이던 텃밭 깨우는 박 대표 대구 방문 '환대'』란 제목을 특히 부각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3. 사 진

사진의 불공정 사례는 같은 날짜 지면의 한 기사 속에서 여러 장 쓰는 방법, 한 기사 속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쓰거나 반대로 다른 경쟁 상대들의 사진은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인터뷰 기사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여러 컷 게재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기사 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나 일부 지방일간신문과 시사주간신문이 특정 후보의 사진을 크게 게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16대 총선 때 조치된 위반 사진은 11건이었다.

이번에 지적된 지방일간신문인 시민일보의 경우, 4월 9일자에서 서울 영등포갑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 민주당 김민석 후보, 열린우리당 김명섭 후보의 공약사항 등을 게재하면서 김명섭 후보의 사진을 누락시켜 경고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신문인 황강신문은 반대로 각 후보의 선거연설을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 한 사람의 사진만 게재한 사례다. 이 신문은 4월 6일자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각 후보들의 장날 거리유세 내용을 보도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 한 사람의 사진만 게재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4. 여론조사

대부분의 언론사는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나타난 조사결과를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몇 차례 보도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보도시 필수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4건에 대해 모두 주의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1건, 지방일간신문 3건이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에 의한 주의결정은 16대 총선 때는 1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위반사례는 16대 총선 때는 7건이었으나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보도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 중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을 기본요건으로 정해 심의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서울의 접전 예상 20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3월 22일자에 보도하면서, 기본요건은 밝혔으나 열린우리당 6곳, 한나라당 3곳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고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보도시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우세하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심의기준

제8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주의결정을 내렸다.

지방일간신문인 경남신문·충청일보·강원도민일보는 모두 여론조사보도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3월 31일자 충청일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 중 차세대 리더로서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 의장이 36.1%로 박 대표(21%)와 추 위원장(4.7%)을 압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조사지역만을 밝히고 나머지 공표준수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5. 상업광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상업광고는 지난 16대 총선 때는 단 1건이었으나 이번에는 3건으로 늘어나 경고 또는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지방일간신문으로 부산일보·서울일보·시대일보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산일보는 1월 3일자 3면에 부산 수영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낸 여의사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의 개인경력 광고를 5단으로 게재했으며, 시대일보도 1월 28일자 8면에 후보예정자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저서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를 광고했다.

특히 서울일보는 2월 23~27일, 3월 2일에 걸쳐 경기 평택 지역구 후보예정자인 김성수 한양대 교수의 저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을 인물사진·경력 등과 함께 연속 6회 광고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6. 칼 럼

칼럼게재 제한 위반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위반유형으로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다음으로 많은 21건이 지적됐다. 위반사례는 중앙일간신문인 서울경제 1건을 제외한 20건은 지방일간신문, 시사주간신문이 차지했으며, 3건이 경고문 게재결정을 받았다.

칼럼게재 제한 위반에 대해 21건 중 18건에 대해서 경고결정이 내려졌으며 3건은 경고결정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칼럼을 게재하여 경고문 게재결정이 내려졌다.

칼럼게재 형식을 보면 고정칼럼난에 게재된 후보예정자의 칼럼이 가장 많았고, 기고 3건, 제언 2건도 있었다. 칼럼의 내용은 대부분 후보예정자의 정책제시, 공약성 글이었는데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라 하더라도 선거시점에서는 다른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 칼럼의 내용이 선거와 전혀 무관한 소재라 하더라도, 후보예정자의 PR로 이용될 수 있기에 내용을 불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편, 전민일보의 경우 칼럼 속에 필자인 후보예정자의 주요 경력을 상세히 게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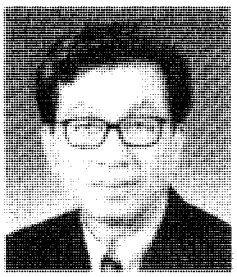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의 평가

선거기사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김 영 호
선거기사심의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선거 때마다 편파보도 성행하여 선거보도 심의 필요성 대두

선거기사심의는 어떤 형태이든지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정당성-필요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같은 논란이 없다는 것은 선거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사회가 동감한다는 뜻이다. 선거때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언론현업단체들도 나서 선거보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데서도 그 같은 뜻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언론의 자유를 간섭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언론이 공정보도-진실보도의 사명을 다할 때가 오면 이런 제도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어쨌든 선거법이 선거기사 심의를 규정한 것은 언론계가 자초했다고 보아야 한다. 1997년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편파보도, 왜곡보도가 자행되는 가운데 치러졌다. 당시 보도내용이 심의대상이었던 방송은 집권당을 두둔한 편이었지만 그 같은 장치가 없던 신문의 경우 일부 매체는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 그것은 권력화한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여론조사 결과도 특정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보도하지 않고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특정인의 득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사례도 많았다.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특정인이 선두에 달린다, 양강구도로 압축되었다니 하여 여론조작을 예사로 알았던 것이다. 또 특정인에게 유리하면 과장보도하고 불리하면 축소보도하는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반대파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격을 일삼

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 언론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던졌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본격적인 언론운동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언론의 눈치를 보아오던 정치권도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2000년 2월 국회는 제16대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언론을 두려워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활자매체의 선거기사도 심의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선거방송과 마찬가지로 신문, 잡지 등 활자매체의 보도내용도 선거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년)에 이어 네 번째 설치된 셈이다. 방송에 대해서는 이미 제15대 국회선거(1996년),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년)에 걸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를 심의해 왔다.

사과문 게재결정은 자제하기로, 벌칙조항은 추후 법개정을 통해 위헌소지를 없애야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과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요지의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사과문 게재 요구와 관련한 민법조항에 대해 "사과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심의위는 사과문 게재결정은 헌재결정을 존중하여 행사를 자제하고 정정보도 게재결정은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간단치 않고 조사를 위해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언론사가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공정보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단심제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규정은 선거활동을 감시하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로서는 심의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피해구제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보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추후 법개정을 통해(형사처벌조항을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로 완화시키는 방안 등) 위헌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의 성격 지녀 외부간섭 안 받아

선거법 제8조 3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지녀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이므로 사무기능이 없어 편의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할 뿐이지 중재위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심의위원도 선거법에 따라 언론단체, 시민단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대한변호사회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심의하기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150일간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600여종의 정기간행물 중에서 구독이 가능하고 선거기사를 게재하는 매체를 자체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지방에서 발행하는 지방일간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주간지-월간지, 지방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월간지 등 인쇄매체와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모두 460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기사를 자체 심의했던 것이다. 또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시정요구도 심의했다.

선거기사 심의는 특정후보에 유-불리 여부와 공정성-형평성을 따지는 일

심의의 주요한 잣대는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특정정당,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이다. 편파보도-왜곡보도를 통해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업광고 게재제한, 후보자 칼럼게재 제한도 따지고 보면 공정성-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요건을 꼭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역시 여론조사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선거기사심의는 자체심의, 그리고 피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심의로 나누어 심의한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특정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다. 또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하여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했더라도 기사를 비교적 작게 취급하였고 의도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의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체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심의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래서 심의위는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경고문 게재'를 신설했다. 사과문 게재결정은 위헌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면서 징계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경고문 게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네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징계는 경고, 주의에 그쳤다. 하지만 신문사의 입장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불공정한 정도가 큰 선거기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해당 신문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주의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자체심의 69건, 시정요구심의 9건 등 모두 78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의 의결내용을 보면 경고문 게재 5건(7.2%), 경고 53건(76.8%), 주의 11건(15.9%)이었다. 피해자의 시정요구는 9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에서 5건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하되고 4건은 심의하여 경고 1건, 기각 3건을 결정하였다. 자체심의를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는 경고 4건, 주의 2건인데 비해 지방일간지는 경고문 게재 5건, 경고 31건, 주의 5건으로 지방일간지의 위반사례가 월등히 많았다.

또한 경고문 게재 5건이 모두 지방일간지에 해당한 징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2개 신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일보 2건, 전북도민일보 3건 등이 그것이다. 서울일보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물사진, 경력 등과 함께 광고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여 징계를 받았다. 또 전북도민일보는 후보예정자들의 칼럼을 실어 경고문 게재라는 징계를 받았다. 칼럼을 게재한 경우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통 경고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심의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여 징계를 한 단계 높였다.

지방일간지가 중앙일간지보다 징계를 더 많이 받은 것은 매체수가 수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불공정보도가 훨씬 많은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일부 지방일간지는 평소 지역유지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보도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매체는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미는 편파적 행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6대 총선 때보다 불공정보도 줄었으나 일부 지방지 홍보물 같은 기사 실어

또 주간신문의 불공정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신문과 지역주간신문은 각각 경고 9건, 주의 2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매체는 주로 지방일간지-주간신문이었다. 경고를 받은 일부 매체의 경우 특정후보의 인터뷰나 소개기사를 크게 실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선거홍보물에 가까워 언론보도라고 보기 어려웠다. 출마자들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살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도행태가 반복적으로 자행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경쟁후보에 관한 기사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한 사례 중에서 경고를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을 보면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기사를 전면에 걸쳐 보도한 경우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경우 ▲편파적 기사와 함께 특정후보의 개인사진이나 특정정당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만 게재한 경우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16대 선거 때처럼 특정후보를 두둔하면서 경쟁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리의혹을 오히려 억울한 것처럼 묘사하여 지역정서를 자극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16대 총선거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불공정보도가 크게 줄어 선거보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활동기간 중에 자체심의를 통해 93건의 위반사례를 의결했다. 그 중에서 경고는 61.7%인 58건이었고 나머지는 주의가 35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76.3%인 7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5.1%인 14건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7.5%인 7건 ▲상업광고 제한 위반이 1.1%인 1건이었다.

중앙일간지는 1건을 제외한 11건이 여론조사 요건미비 및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7건 중에 6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를 결정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마식 보도라는 보도관행에

따른 단순한 사안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17대 총선의 자체심의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모두 69건 중에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41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보자 칼럼게재가 21건(30.4%)이고 이어서 여론조사 요건미비 4건(5.8%), 상업광고 게재 3건(4.3%) 순이었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는 공정성-형평성 위반 4건, 여론조사 요건미비 1건, 후보자 칼럼게재 1건이었다. 반면에 지방일간지는 공정성-형평성 위반 16건, 여론조사 요건미비 3건, 상업광고 게재 3건, 후보자 칼럼게재 19건으로 많았다. 또 시사주간신문은 공정성-형평성 위반 10건, 후보자 칼럼게재 1건, 지역주간신문은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1건이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와 비교해서 17대 총선 선거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매체의 경우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징계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모두 4건을 위반했는데 조선일보가 1건이고 스포츠 투데이가 3건이나 위반하여 경고 2차례와 주의 1차례를 받았다. 종합일간지는 위반사례가 거의 없는데 스포츠신문이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또 2건 이상 위반한 매체를 보면 지방일간지의 경우 시민일보 4건, 경기신문 2건, 전국매일 2건 등이다. 또 시사주간지는 뉴스포럼 3건, 주간저널 3건, 오마이뉴스 2건 등이고 지역주간지는 11개의 매체가 각 1건씩 위반했다. 위반건수가 일부 매체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편집방향과 유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징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사례는 줄었으나 경마식 보도관행은 여전해

17대 총선보도의 특색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사례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요건미비는 4건에 불과했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법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사실이 언론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마식 보도로 인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사례가 줄었다고 해서 경마식 보도가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당의 지지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당권싸움까지 겹치자 과거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마다 정당별 지지도를 알아보려고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또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당의 판세분석에 따르면』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는 기사가 많았던 점이 그것을 입증한다. 다만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기술적으로 갖추어 위반을 피해 갔을 뿐이다.

탄핵정국에 파묻혀 언론사들이 정당 지지도를 알아보려는 여론조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당간의 정책대결이 증발되어 버린 것이 17대 총선보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의 선거에서도 언론은 정책검증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그 같은 노력마저 보기 어려웠다. 이런 보도는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도 없이 거의 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를 승부의 게임으로 보다보니 이런 보도행태가 성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당파성에 매몰되어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특정정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 있는 기사가 많았다. '거

여견제론'이니 '거야견제론'이니 하는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자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이런 유형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공정성-형평성을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매체는 근거가 희박한 여론조사까지 인용하여 누가 누구를 앞섰다는 식의 보도를 즐겨했다. 선거법이 여론조사의 조사요건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이용해 유권자를 오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장치다.

언론이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정책검증 이외에도 인물검증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신상내역을 발표했지만 신고내용의 정직성-정확성을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산형성의 투명성, 학력-경력의 진위, 병력미필의 정당성 등과 함께 납세실적과 전과내역 등을 거의 따지지 않았던 것이다.

후보자의 칼럼게재 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는 더욱 교묘해져

이번 기사심의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출마자의 칼럼을 게재하는 사례가 유난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선거법이 합동유세를 금지하는 등 각종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칼럼을 이용하려는 출마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어떤 칼럼들은 선거와 무관한 소재를 택해 심의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러는 경쟁정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후보자 칼럼게재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모두 21건이었는데 그 중 19건은 지방일간지가 위반했고 나머지는 중앙일간지, 시사주간신문이 각각 1건이었다.

칼럼 게재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일간지의 위반건수가 19건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2개의 신문이 차지했다. 전민일보는 무려 7건을 게재하여 7차례나 경고를 받았다. 또 전북도민일보가 4차례나 게재하고 전북중앙신문도 2차례나 실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의 경우는 서울경제가 칼럼을 1건 실어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지방지의 경우 전체지면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이 넘쳐 났다. 선거양상이 지역구도에 의해 확연히 구획되고 그것이 그대로 언론보도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영남지역 매체의 한나라당 기관화, 호남지역 매체의 민주당 기관지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보도행태가 많이 줄어든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지역마다 시민단체들이 총선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데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색이 희박한 열린우리당이 출현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행태가 훨씬 교묘해졌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박근혜의 '박풍', 추미애의 '추풍', 정동영의 '노풍' 따위가 그것이다. 정당대표들이 시장바닥을 누비고 거리에서 큰절하는 모습을 연일 담아내면서 무슨 무슨 바람이 분다고 보도했다. 그런 보도행태는 은근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했다. 어느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수 없었던 것이다.

노골적인 편파 · 왜곡 보도는 줄어, 선심위 활동기간은 늘려야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편파보도-왜곡보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정당-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편파보도-왜곡보도는 공정성-형평성의 잣대만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거기사심의제도가 지닌 한계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하겠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일 120일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곡된 정치현실과 잘못된 보도관행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내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뛰고 있다느니 누가 유력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언론보도가 그치지 않는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누가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식의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장치도 없다. 심의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매체-신문-방송 선거보도심의 일원화하여야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매체는 돌풍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로 부상했다. 이와 같이 언론환경이 급변하여 인터넷 매체가 뉴미디어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 매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어떤 형태의 정부개입도 반대한다는 논리로 선거와 관련된 보도내용의 심의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기사심의의 목적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데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선거결과에서 실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거선거에서 공영방송은 집권당을 두둔하고 일부 신문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편파보도를 일삼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불공정 보도가 표면적으로는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보도행태가 더욱 교묘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보도행태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심의기능은 필요하다.

각종 선거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파보도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위헌소지를 없애고 미비점도 정비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심의기능을 포함하여 3개 매체의 심의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판단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와 선거기사심의위가 다르게 다룬 사례가 더러 있어 징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거보도와 관련한 심의는 어떤 형태이든지 정부개입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언론이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날까지는 선거보도의 심의는 시민사회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옳다. □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일 시 : 2004년 5월 12일 오후 4시
장 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실

참석자(선거기사심의위원)

- 양 삼 승 (梁三承, 위원장, 사회)
- 유 원 석 (柳元錫, 부위원장)
- 김 재 곤 (金在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이 경 일 (李耕一, 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 이 동 화 (李東和,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 최 광 일 (崔光一, 언론중재위원)
- 김 영 호 (金榮豪,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 주 언 (金周彦,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15일자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활동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활동을 결산평가하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 날 좌담은 처리결과의 원인분석, 제17대 국회의원선거보도의 실태, 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등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보도와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자평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위원장 : 오늘은 그 동안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는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를 위해 5개월 동안 운영하여 자체심의 69건, 시정요구 9건 등 총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 93건, 시정요구 4건, 반론보도청구회부 1건 등 총 9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자체심의 결정건수가 줄어들었고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자체심의 건수가 줄어들고 시정요구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 자체심의건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첫째, 언론사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제16대 총선과 비교하여 볼 때 14건에서 4건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위반이 7건에서 0건으로 감소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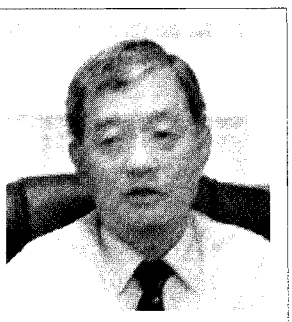
둘째, '2004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의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편향 보도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언론은 각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 검증보다 대통령 탄핵과 각 정당 지도부의 동정 보도에 더욱 치중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기사가 양적으로 많이 감소한 점도 그 원인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 이에 반해 시정요구 건수는 제16대 총선과 비교하여 4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권리의식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통산 4번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제도상의 미비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하고 심의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 위원회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대한 지침을 어느 정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 삼 승**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들은 대통령 탄핵 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는데, 탄핵에 대한 보도도 선거에 대한 보도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탄핵에 대한 반대 내지 찬성 보도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이는 각 정당 후보자의 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위원장 유 원 석

에 대한 인식이 4년 전보다 제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는 한 건도 접수가 안되었는데 이는 후보자가 반론보다는 정정이나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향과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15 선거보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금지되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미디어 선거운동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거운동에서 인터넷 매체와 방송이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정책검증 보다는 각 당의 지도부의 동정을 다루는 이벤트성 보도와 흥미위주식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립과 갈등의 폭이 깊었으며 언론사는 탄핵 관련 보도에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음성적으로 특정 정당을 비판 내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영호 위원 : 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보면 여론조사 요건미비는 4건에 불과했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언론종사자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사실을 널리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당의 지지도가 급변함에 따라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마식 보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여견제론'이니 '거야견제론'이니 하는 등의 특정정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 있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김재곤 위원 : 일부 중앙지들이 사설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탄핵에 대한 정당성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편파보도를 하였다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처럼 사설에서 언론사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언론사들이 교묘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 독자를 오도하는 폐단을 막고, 중립성과 객관성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의 판단을 돕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며, 각 정당의 후보자와 정당이 정책대결을 하는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는 다음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만 5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이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에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선거기사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 재 곤 위원

과 같은 이유로 아직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에 사실관계와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설도 당연히 심의하여야 하며 선거법 제8조의 3에서도 선거기사에 사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셋째, 외국의 언론환경과 달리 우리나라는 편집권 독립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기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반적인 선거문화의 개선과 언론환경의 변화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특정 후보지지 허용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대부분의 언론사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예전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겠지만, 일부 지방지의 경우 여전히 특정후보의 인터뷰나 소개기사를 크게 다루어 지방지와 특정 후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언 위원 :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위원회의 제재조치로서 사과문과 주의·경고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사를 신중히 하기로 하였고 주의나 경고 결정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 있는 심의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매우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후보자의 상업광고를 수차례 게재하여 불공정성이 심하거나 경고결정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미있는 결정형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재곤 위원 : 이번 선거에서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금지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면서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가 자신의 견해를 부각시킴으로써 여타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금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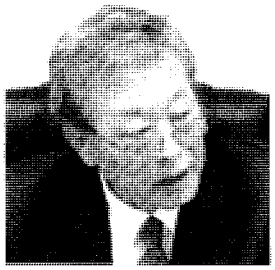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후

중앙지들이 음성적으로 또는 교묘히 특정 정당 내지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를 하여 저희 심의기준으로 제재하기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 일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저희 위원회에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언론감시 사회단체에서 심의를 의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 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 동 화 위원



현재 심의 제재건수에서 지역에서 상정된 건수는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간신문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심의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 광 일** 위원*

보자의 저술을 금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세웠다고 할 것입니다.

이동화 위원 : 저희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저희 위원회에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와 2004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등 언론감시 사회단체에서 심의를 의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 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주장과 상대를 존중하는 회의진행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 위원 : 이번 자체심의 제재건수를 보면 중앙지는 6건에 머물러 지방지에 비해 불공정 보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중앙지가 중립을 가장해 편파보도를 일삼았으며, 그 불공정성이 지방지에 비해 덜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들이 음성적으로 또는 교묘히 특정 정당 내지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를 하여 저희 심의기준으로 제재하기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영향력이 막강한 것을 감안하면, 중앙지의 이러한 음성적인 보도형태에도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야 요식행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선거기사 심의가 될 것입니다.

김주언 위원 : 그런 중앙지의 음성적인 보도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각 언론사가 보여준 정당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비판 내지 지지의 보도형태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편파 보도를 일삼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 공정보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곤 위원 :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만 5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이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에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선거기사를 심

지난 선거 내내 언론사는 박풍(朴風), 추풍(秋風), 노풍(老風)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감성정치를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부각시켰으나, 이러한 보도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잣대로는 위반으로 삼기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김 영 호** 위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매우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미있는 결정형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 주 언** 위원*

최광일 위원 : 이번 선거 중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처럼 상설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기사의 심의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유원석 부위원장 : 제가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들은 대통령 탄핵 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는데, 탄핵에 대한 보도도 선거에 대한 보도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탄핵에 대한 반대 내지 찬성 보도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이는 각 정당 후보자의 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에는 탄핵 관련 보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자체심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자체심의에 대한 전문심의원의 자격, 필요한 인원수,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칙으로 마련해서 자체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도입한 경고문 게재결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신설한 칼럼게재 제한은 현재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근거는 있지만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동화 위원 : 자체심의와 관련하여 지난 제16대 총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전문위원 3인과 전문심의원 6인 그리고 지역사무소에서 지역심의원 6인 등 총 15인이 매체를 모니터하여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는 지역심의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서울에서 전문위원은 2인으로, 전문심의원은 4인으로 감소하여 과거보다 매체를 모니터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법적 기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상의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 선거기사심의기준으로는 크게 공정성·형평성과 여론조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의 잣대로는 선거기사심의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난 선거 내내 언론사는 박풍(朴風), 추풍(秋風), 노풍(老風)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감성정치를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부각시켰으

나. 이러한 보도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잣대로는 위반으로 삼기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보면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고문 게재결정을 도입하였는데, 그 외에도 추후 이러한 불공정한 보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제재강도를 마련해서 선거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는 현재 정기간행물은 저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심의위원회로 운영되면 매체의 성격과 위원구성의 상이함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한 쪽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불문으로 처리하는 경우처럼 결정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선거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3개의 심의위원회가 운영 기간 중 의견을 조율하여 될 수 있는 한 같은 사안에 대해 결정형태가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3개의 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선거기사심의에 있어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광일 위원 : 지방일간지는 서울에서 전문위원과 전문심의원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사무소에는 지역심의원이 지역주간신문에 대해서만 안건을 상정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심의 제재건수에서 지역에서 상정된 건수는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간신문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심의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건이 적을 경우라도 회의를 자주 열어 운영과 심의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통산 4번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제도상의 미비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하고 심의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 위원회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대한 지침을 어느 정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노력을 계속해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1. 주 의
2. 경 고
3. 경고문 게재결정

제2장 시정요구

제1장 자 체 심 의

1. 주 의

안 건 번 호 : 2004자심1

언 론 사 : 주식회사 수도권일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923-9
대표이사 김 환 진

주 문 : (주)수도권일보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3년 12월 23일자 2면 『성남 분당갑 2파전 압축…성대결 관심 고조』라는 기사제목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성남 분당갑)가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제목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성남 분당갑 2파전 압축… 성 대결 관심 고조

분당신도시는 중산층이 대거 이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신청치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 지역연고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또한 유권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관계로 후보자의 개혁성, 도덕성 등 인물기준이 후보자 선택의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젊은층의 표심 공략여부도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 지역이 건전한 보수 비판세력의 야당을 선호하는 정치성향으로 지역정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재선고지를 향해 표밭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자신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를 꺾었던 전력과 고 의원이 여의도 입성 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경력 등이 유권자들에게 이번에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허운나 전 의원(비례대표)은 여성과 '교육공학박사'라는 인물론을 내세워 최근 지구당을 창당, 그동안 가동했던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구내 부녀회, 자생단체 등 여성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고흥길 의원과의 성대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분당사태 이후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17대 총선에서 후보자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지역출

신 인사 영입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출마예정자로 하나로 국민연합의 강대기 위원장과 경기도 의원 출신의 정원섭씨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도 지역 노동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

언 론 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성 낙 오

주 문 : (주)영남일보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3년 12월 25일자 5면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 구도』라는 기사제목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영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북 문경·예천)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양자대결구도로 압축되고 있다고 제목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신영국-신국환 양자대결 구도

문경-예천은 신영국 한나라당 의원과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던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겨냥, 지명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신영국 의원 외엔 이렇다할 대타가 아직 부상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영국 의원의 경우 특유의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저변을 훑고 있으나, 주위에선 우리의 정치현실을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신 의원은 여론 주도층을 공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원 한나라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이러한 틈새를 등에 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당에 대한 기여도를 앞세우고 있으나 지역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는 게 지역민들의 얘기. 이는 문경-예천 지역의 조용한 선거전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신국환 전 산자부장관은 지난 20일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박인원 문경시장과의 관계도 원만해 경북지역 열린우리당의 정서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현안과 북부권 개발전략

신영국 의원은 "문경의 경우 폐광 이후 급속히 위축된 문경 경제의 회복이 시급하고, 예천은 관광개발 및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하는 한편 유교·불교 문화권의 추가개발을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

단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폐광 이후 급격한 침체로 인한 경제 재건이 시급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를 지금보다 20%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장관은 문경 리조트사업의 성공,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 경도대학·문경대학의 정상화 등을 현안으로 거론하며 "자연환경 및 유·불교문화 유적 등을 활용한 내륙관광지 개발과 친환경적인 바이오 벤처 등 첨단산업 유치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문화 개혁은

신영국 의원은 지구당과 후원회 제도의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각 선거구선관위 차원에서 총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후보의 약력과 공약, 연설 장면을 비교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 안 드는 선거' 차원에서 주장되는 미디어 선거는 대선과 같이 전국적인 동일 이슈에는 도움이 되나 지역별로 나뉘는 총선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의식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정경유착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선거자금에 대한 잡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국환 전 장관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당·정치 구조의 개혁과 함께 선거공영화 등 선거제도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단점과 경쟁력 있는 상대

신영국 의원은 정치자금을 아예 받지 않는 깨끗함, 개인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소신과 원칙, 검소한 생활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이러한 장점의 이면으로 '깐깐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젊고 깨끗한 실물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신중한 점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신영국 의원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나, 신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경대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사업체 부도 등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국환 전 장관은 경제 전문 관료로서의 경륜, 정·재계의 광범위한 인맥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부각한 반면 지역에서의 활동경력 부족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신영국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활동 기반이 충분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업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신영국 의원은 '1촌(村) 1품(品)운동'과 같은 소지역(마을 혹은 면 단위)별 상품개발, 소득유망작목과 풍토에 적합한 우수 상품 생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비롯한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 마케팅 강화, 농가부채의 조속한 해결 등을 과제로 들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역별로 많은 특화작물을 생산, 현지에서 가공하고 상품화해 농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신국환 전 장관은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농업개방에 대비한 농업정책 수립, 친환경·고기술·고부가가치 위주의 전업농의 육성 및 지원, 농업과 산업의 융합에 의한 농외소득 확충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권자 선택기준과 이슈는

신영국 의원은 청렴도, 정치개혁도, 지역기여도 등이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대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과 정치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지역의 정서상 한나라당을 선택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대선자금의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스럽다"고 답변했다.

신국환 전 장관은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 인물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주의 탈피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단체장 등과 바람직한 관계

신영국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며,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맡은 영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서로 융화단결로 상부상조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개선·시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규정했다.

신국환 전 장관은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발전과 생산적인 정치실현에 주력하고,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역문제 해결에 진력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

언 론 사 : 주식회사 함평신문사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
대표이사 신 안 자

주 문 : (주)함평신문사가 발행한 함평신문 2004년 1월 5일자 8면 『지금은 이낙연의원 독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함평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영광)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지금은 이낙연의원 독주

이낙연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도전이 예상됐던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지역민들의 총선에 대한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함평·영광에서는 지난 16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아깝게 고배를 마셨던 장 현 호남대 교수와 이석형 함평군수 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장 교수는 광주 서구에서 출마를, 이 군수는 불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아 현재는 이낙연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김연관 민주당 인권위부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이나 열린우리당 출마에 뜻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이낙연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탁월한 브리핑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노무현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관계로 민주당 분당 이후 열린우리당측으로부터 입당을 꾸준히 제의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의원은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어 민주당 사수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최근에는 총선에 대비해 틈틈이 마을단위 보고회와 지역민원수렴, 지구당 조직을 정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한·일의원연맹 간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당 제1정조위원장과 대변인 등을 거쳐 당내외에서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 지역숙원사업인 옥동교 개설, 손불 월천방조제 항구복구,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 국군 통합병원 유치,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 진례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56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구당 조직 활동에 함평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여론이 분분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지역인사들을 찾아 고충을 토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폭넓게 더 많이 뛰면서 민주당이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선의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김연관 민주당 인권위부위원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당 경선과 열린우리당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함평과 영광에서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고향은 영광 염산이다.

민주당 경선과 우리당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부위원장은 조만간에 입장정리가 끝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의원과 당내경선 또는 당 대 당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32세에 국회의원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뒤 총선 때마다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17대 총선에 임하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정양섭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지역 정서상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반문한 뒤 "당에서 출마를 권유하면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17대 총선에서 '다크호스'로 평가 받았던 이석형 함평군수는 "함평군민들의 오랜 소원인 지역 국회의원 만들기 심정은 이해한다."하지만 "군수로서 군정에만 충실히 해 살기 좋은 선진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8

언 론 사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주 문 : (주)강원도민일보가 발행한 강원도민일보 2004년 1월 12일자 4면 『부동층 40%…혼전 양상』, 동년 동월 16일자 4면 『부동층 50%… 신뢰 확보가 당락 좌우』, 동년 동월 19일자 4면 『한나라 강세… 세대교체 역풍 미지수』, 동년 동월 26일자 4면 『부동층 65%… 정당별 지지도 엇비슷』, 동년 동월 28일자 4면 『현역 선두 속 2强 후보 '맹추격'』, 동년 동월 30일자 4면 『선거구 통합땐 지역대결 양상』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강원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강릉, 속초·고성·양양·인제, 동해·삼척,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 영월·평창 등)와 관련해 지역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판세를 분석·보도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지역만을 밝히고,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은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부동층40%… 혼전 양상 (2004년 1월 12일자 4면)

이른바 부동층(浮動層) 40%.

아직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결정되지 않았고 몇몇 입지자들은 출마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응답층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이변이라면 이변이다. 그만큼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강릉시 총선여론은 최돈웅의원이 대선자금과 관련 출마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를 틈타 최욱철 전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에 육박하는 지지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다른 후보군이 거센 추격을 벌이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기대하고 있는 7~8명의 후보군들은 나름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여전히 바닥을 훑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연말 강원사회조사연구소의 강릉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군 중에는 이훈 도의회 의장과 심재엽 전 부지사, 나름의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김남훈 동해발전연구회 이사장의 선전이 엿보인다.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군 중에는 최 전의원의 독주속에 개혁당 출신의 신진정치인인 신건승씨가 세대교체의 바람을 타고 거센 추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타 지역과 다른 정당지지세도 강릉 총선여론의 관전포인트다. 한나라당이 비교적 많은 지지(20.8%)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12.6%)과 민주당(11.8%)의 지지세는 조금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투표예정 정당에 대한 태도도 한나라당이 28%로 민주당 15.4%, 열린우리당 18.6%보다 높은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타지역보다 인색하다. 8%만이 '잘했다'고 응답한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4%에 이른다.

(후략)

부동층50%… 신뢰 확보가 당락 좌우

(2004년 1월 16일자 4면)

복합선거구인 속초-고성-양양-인제지역 총선여론은 어느지역보다 뚜렷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지지도에서 앞서고 있고, 민주당은 재선의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새로운 인물들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역시 만만찮은 기세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강원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현역인 송훈석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이 도전하고 있는 타당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선에 도전하는 송훈석 의원은 85%의 인지도에 25%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문헌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도 공천을 전제한 조사결과 15%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돼 적지 않은 지지기반을 보였다.

또 열린우리당 공천을 희망하는 장종수 전 국정원기조실장과 MBC 신창섭 부장도 열린우리당 공천을 전제한 조사에서 10%가 넘는 지지세를 보여 역시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특히 이들은 현역의원보다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특정정당 공천을 전제로 한 지지도 치고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들 후보의 인지도는 급상승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50%에 달하는 무응답층의 존재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은 아직 이렇다할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지지도도 중요한 변수다. 지지도 면에서 한나라당이 17.8%로 가장 앞선 가운데 민주당 11.9%, 열린우리당 10.9%를 보이고 있다. 현역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을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표예정 정당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28%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5.8%의 지지로 민주당 11.9%보다 3.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총선여론은 매우 높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어느정당, 어느후보가 신뢰감을 확보

하느냐가 총선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도 총선 판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나라 강세… 세대교체 역풍 미지수

(2004년 1월 19일자 4면)

동해-삼척지역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27.1%다. 도내 평균지지도 18.0%보다 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정당만을 놓고 투표할 경우 한나라당이 35.6%로 독주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16.9%, 민주당 8.5%, 민주노동당 4.2%, 자민련 0.8% 분포를 보여 역시 한나라당의 독주를 따라잡기는 힘겨워 보인다.

지난 연말 강원도민일보사 강원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우위의 정당 지지세와 함께 이 지역에서 거명되고 있는 총선 입후보자의 지지경향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확실시 되는 최연희의원의 지지도가 30%를 웃돈다. 무응답 55%를 감안하면 응답자의 60%이상이 최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해-삼척지역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적 특성과 3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최연희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아직 후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두 사람이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아직은 이들 지지세가 최의원의 지지를 따라잡기는 버겁기 때문이다. 또 타지역에서 나름의 지지기반을 보이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세도 아직은 미약해 보이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것을 가정한 조사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40%를 넘어서는 최의원의 지지세에 나머지 후보는 겨우 10%대에 머물고 있다.

또 도내 평균 단 2.0%만이 한나라당에 대해 우호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지역은 5.0%를 넘어선다. '잘못하고 있다' 역시 60%대의 도내 평균보다 12%포인트 적은 48%에 그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한나라당의 우위를 점칠 수 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층 65%… 정당별 지지도 엇비슷

(2004년 1월 26일자 4면)

홍천-횡성선거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그간의 선거에서 도내 타 지역과는 다른 투표양태를 보여왔다. 15대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예상을 깨고 선두를 차지한 것을 비롯 16대 총선에서도 횡성에서 몰표를 받은 민주당 유재규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지난 연말 강원사회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부동층이 무려 65%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이 지역 유권자의 감춰진 표심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많은 부동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별 지지세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 공천이 유력한 황영철 후보가 10%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현역인 민주당 유재규 의원의 지지세도 이에 못지않다.

하지만 현역이라는 프레미엄을 감안한다면 재선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른 관심사는 홍천-횡성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변수다. 평창이 이 지역구와 합쳐지게 되면 총선여론은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홍천-횡성지역 출신 입지자와 평창출신 입지자간의 기세싸움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당별 지지판도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지정당 없다'가 61.8%에 달하는 가운데 한나라 11.8%, 민주당 10.0%, 열린우리당 9.1%의 분포로 서로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7.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도 이 지역의 의외성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투표예정정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20.9%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15.5%, 민주당 12.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역시 섣부른 판세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감이 유달리 높은 것도 관심사다.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50%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60%가 넘어서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특이한(?) 태도를 보여온 이 지역의 총선판세가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역 선두 속 2강 후보 '맹추격'

(2004년 1월 28일자 4면)

대표적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 선거구는 현역인 이용삼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4선에 도전하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대 총선당시 치열한 격전을 펼쳤던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장의 기세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유일한 양구 출신으로 출마결심을 굳힌 정만호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가세도 이지역의 총선판세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강원사회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의원의 선두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공천을 전제로 한 박위원장과 정 비서관의 추격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 지지도는 아직은 이 의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인지도 대비 지지율을 분석하면 이들의 지지세도 두자리수로 나타나 이용삼 의원이 4선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들을 상대로 숨 가쁜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당지지도 추세 역시 다른 지역과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무당파'가 50.5%에 이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6.8%로 선두에 나섰고 민주당이 15.8%로 다음을 이었다. 한나라당은 도내평균 지지율 18.4%에 훨씬 못 미치는 11.9%에 머물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현역의원 소속정당이 민주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후보의 소속정당이 한나라당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정당지지도 추세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표예정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린우리당 15.8%, 한나라당 10.9%순이었다. 이 결과 역시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나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에 대해 도내 타지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각각 50%와 60%에 이르는 도내 평균치보다는 훨씬 낮은 30%, 50%만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후략)

선거구 통합땐 지역대결 양상

(2004년 1월 30일자 4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영월-평창선거구는 분리되거나 혹은 다른 지역과 함께 한 선거구를 이루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가변적인 선거구 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강원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혼란속에서 현역인 김용학의원이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800여표 차이로 차점 낙선한 염동열 전석탄공사감사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여기에 평창출신으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광재 전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인지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형국이어서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혼전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월-평창선거구만을 놓고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용학의원이 20%를 훨씬 상회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염동열, 이광재씨의 추격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영월-평창선거구의 존속을 가정할 때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리, 혹은 타지역과의 통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수치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평창이 홍천-횡성선거구에 편입된다면 홍천-횡성지역 입지자와 평창출신 입지자간 지역을 근거로 한 한판 지역대결 가능성이 높으며, 영월-평창선

거구에 정선이 통합된다면 이른바 '영-평-정' 간 지역 대결 양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이 지역의 평가도 관심사다.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45%가 불신감이 드러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55%가 불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도내 평균보다 양측 모두에 10%포인트정도 낮은 수치여서 관심을 끈다.

또 이 지역 유권자의 각 정당에 대한 태도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세가 20%로 민주당(10%), 열린우리당(14%)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다.

결국 지역 출신에 대해 적극적 지지경향을 보이는 이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인해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각 후보의 지지세의 우열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4

언 론 사 : 주식회사 새거제
경남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943-14
대표이사 유 진 오

주 문 : (주)새거제가 발행한 새거제 2004년 2월 14일~20일자 5면 『거제는 김기춘 VS 김현철 빅 매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새거제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제)와 관련해 특정 언론의 보도를 인용, 특정 후보예정자 2인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그들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고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거제는 김기춘 VS 김현철 빅 매치"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에서 거제지역은 김기춘의원과 김현철 거제미래발전연구소장이 2강 구도를 형성, 불꽃튀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3일자 「경남총선 빅매치 대결 관심을 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는 지난 1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YS의 차남 김현철 소장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며 사실상 거제총선의 후보자 구도는 두 사람간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보도는 지난해 3월 거제시 신현읍으로 이사한 김 소장이 거제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 지역민심을 샅샅이

뚫고 있으며, 이번 총선을 통해 2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거제의 자존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서가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1

언 론 사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5층
대표이사 오 연 호

주 문 : (주)오마이뉴스가 발행한 오마이뉴스 2004년 3월 18일자~24일자 6면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가결과 관련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예정자인 특정인들에 대해 정치모리배, 갑신오적으로 단정하고, 이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방한 특정인의 칼럼을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2항, 동기준 제9조(인용보도)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했다

아~아~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렇다. 결단코 이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3월 12일을 민주주의의 국치일로 만들고, 우리 정치를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려버린 의회 쿠데타의 이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의 부패하고 파렴치한 정치모리배들로 인해 한국민주주의가 다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그 자체 위기다.

정치모리배들로 인해 한국정치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된 3월 12일의 거사장면은 할리우드 영화의 블록버스터 액션 신보다 훨씬 생동감있는 활극이었다.

그러나 그 활극은 신나는 활극이 아니라 부패한 차떼기 활극의 후속편인 추악한 활극이었다. 할리우드 액션폭력 영화의 소재로 전락해버린 이 참담한 정치현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갑신 쿠데타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토론은 시간을 두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첫째, 갑신 쿠데타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부패정치세력의 총선전략의 일환이며, 길게 보아서는 권력탈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가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국회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탄핵정국의 성격을 결정하는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 그 자체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부패한 세력이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며, 부당한 논리를 견강부회하면서 오직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들은 3·12쿠데타의 성공에 만세를 불렀으며, 민의가 도적질당한 그 현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군사독재 권력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안쓰러워 국민들이 보듬어 안아주었던 그 국회가 이제 거꾸로 국민의 가슴팍을 내려짓밟은 것이다. 그들이 흥겨워 만세삼창할 때 국민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을까?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3·12쿠데타의 현장에서 본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일단의 무리들이었다. 우리는 그 무리들의 뒷머리에 80년대 광주학살의 주역들의 얼굴이 덧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을 짓밟은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회를 점거한 군사독재의 망령들이었으며 5·16쿠데타의 망령도 여기에 합세했다. 우리는 3·12쿠데타에서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았던 군사독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친일청산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독재의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다시 국민들의 등짝에 비수를 들이댄 것이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야음을 틈타 총칼을 들이대며 권력을 찬탈했던 지난날의 쿠데타가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일어났다는 정도이다.

아무튼 제1막은 그대들의 승리로 끝난 듯하다. 그러나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이 그대들을 버렸다. 그대들이 즐겨 찾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들을 버렸음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척결의 구호가 그대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법조계도, 언론도 그대들을 버렸다.

한나라당의 고향인 영남도, 민주당의 고향인 호남도 그대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그대들은 갈 곳 잃은 정치적 고아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낡고 썩은 정치를 매장해 놓은 역사의 창고뿐이다.

그대들의 거사는 비극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사이기에, 거사가 성공한 그 순간 이미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대들이 성공의 축배를 드는 그 순간, 그대들의 입술에 닿은 향기로운 축배가 사실은 독배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몰락의 축배이다. 이제 국민들은 80년대부터, 아니 60년대부터 주욱 피곤하고 지친 그대들을 위해 제2막을 준비하려 한다.

그리하여 일단의 정치모리배들이 저지른 3.12쿠데타는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독재의 잔재와 마지막 부패정치세력의 사망을 예고하는 조종이 될 것이다.

그대들의 거사가 그대들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짧은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머잖아 그대들은 그대들의 머리위에 떨어질 불벼락을 보게 될 것이며, 그대들의 정치적 영정에 각인된 '근조' 두 글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충고한다. 한국정치사에서 3월 12일을 민주주의의 국치일로 만든 갑신 쿠데타의 주역들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조순형과 유용태, 한나라당의 최병렬과 홍사덕,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 박관용 등 '갑신오적'은 지금 이 순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정계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 그대들의 죄상과 경력을 나열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아깝다. 앞으로 국민들이 그대들의 죄상을 일일이 열거해줄 것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과거 한 순간의 일천한 민주화 경력으로 국회 수장의 자리에 올라 동료 국회의원들을 동태짐짝처럼 본회의장 밖으로 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한 그 죄상을 어느 샛강에서 다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육두문자로도 그 죄상을 나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회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경위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박관용은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머리 조아려 백배 사죄한 연후에 떠나라.

안 건 번 호 : 2004자심62

언 론 사 : 주식회사 뉴스포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4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905호
대표이사 이 경 섭

주 문 : (주)뉴스포럼이 발행한 뉴스포럼 2004년 3월 18일자~31일자 1면 『최병렬 · 홍사덕 · 조순형 · 유용태 · 박관용 '갑신오적'은 정계를 떠나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가결과 관련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예정자인 특정인들에 대해 정치모리배, 갑신오적으로 단정하고, 이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방한 특정 언론에 게재된 특정인의 칼럼을 인용 · 보도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2항, 동기준 제9조(인용보도)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최병렬 · 홍사덕 · 조순형 · 유용태 · 박관용 '갑신오적'은 정계를 떠나라!

아~아~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렇다. 결단코 이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3월 12일을 민주주의의 국치일로 만들고 우리 정치를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려버린 의회쿠데타의 이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의 부패하고 파렴치한 정치모리배들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그 자체의 위기다.

정치모리배들로 인한 한국정치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전달된 3월 12일의 거사장면은 할리우드 영화의 블록버스터 액션 신보다 훨씬 생동감있는 활극이었다.

그러나 그 활극은 신나는 활극이 아니라 부패한 차떼기 활극의 후속편인 추악한 활극이었다. 할리우드 액션폭력 영화의 소재로 전락해버린 이 참담한 정치현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국민들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 그 자체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부패한 세력이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며, 부당한 논리를 견강부회하면서 오직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거사의 주역들은 쿠데타에 성공했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켰다. 절치부심 은인자중하던 그들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3 · 12쿠데타가 성공한 직후 환호작약하고 희희낙락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그들은 3 · 12쿠데타의 성공에 만세를 불렀으며, 민의가 도적질당한 그 현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아무튼 제1막은 그대들의 승리로 끝난 듯 하다. 그러나 그대들의 잔치는 3일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이 그대들을 버렸다. 그대들이 즐겨 찾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들을 버렸음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척결의 구호가 그대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법조계도, 언론도 그대들을 버렸다.

그대들의 거사가 그대들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짧은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머잖아 그대들은 그대들의 머리위에 떨어질 불벼락을 보게 될 것이며, 그대들의 정치적 영정에 각인된 '근조' 두 글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충고한다. 한국정치사에서 3월12일을 민주주의의 국치일로 만든 갑신 쿠데타의 주역들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조순형과 유용태, 한나라당의 최병렬과 홍사덕,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 박관용 등 '갑신오적'은 지금 이 순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정계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 그대들의 죄상과 경력을 나열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아깝다. 앞으로 국민들이 그대들의 죄상을 일일이 열거해줄 것이다.

육두문자로도 그 죄상을 나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회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경위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박관용은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머리 조아려 백배 사죄한 연후에 떠나라.

안 건 번 호 : 2004자심69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이사 서 정 옥

주 문 : (주)충청일보가 발행한 충청일보 2004년 3월 31일자 5면 『차세대 리더 "鄭의장" 여론조사 36% 1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요 3당의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적합성을 보도하면서 조사지역만을 밝히고 공표준수사항인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차세대 리더 "鄭의장" 여론조사 36% 1위

국민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 중에서 누구를 더 차세대 리더로 적합하다고 생각할까.

정의장이 36.1%로 박대표(21.0%)와 추위원장(4.7%)을 압도했다.

그러나 정의장은 유독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세대서는 60세 이상, 계층별로는 월소득 99만원 이하에서 박대표에게 밀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의장과 박대표에서 대한 성별 선호도가 엇갈려 나타난 점이다.

정의장은 여성(30.3%)보다 남성(42.1%)이, 박대표는 남성(18.8%)보다 여성(23.1%)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위원장은 남녀별 선호도가 4.7%로 같았다.

지역별 지지도는 박대표가 강원(29.6%)과 대구·경북(27.7%)에서, 정의장은 호남(57.4%)과 서울·강원

(37.7%)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박대표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도는 8.7%. 정의장에 대한 대구·경북의 지지도는 21.1%로 나타났다. 추의원은 호남(8.7%)과 서울(4.8%)에 서만 평균치를 웃돌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박근혜(61.8%). 정동영(8.1%). 추미애(3.0%). 우리당 지지자는 정동영(62.3%). 박근혜(9.2%). 추미애(4.3%) 의원 순으로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근혜(19.8%)나 추미애(15.7%)보다 정동영(33.0%) 의원을 더 선호했다.

민노당 지지자들도 정동영(39.3%). 박근혜(15.4%). 추미애(11.2%)순으로 대답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0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신문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김 상 수

주 문 : (주)경남신문이 발행한 경남신문 2004년 4월 1일자 1면『한나라 3, 우리당 4곳 우세』, 동년 동월 동일자 3면『60대 이상·여성표 노려라』제하의 기사에 대하여「주의」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남도내 17개 지역구)와 관련해 지역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판세를 분석·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만을 밝히고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2항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한나라3, 우리당 4곳 우세 (2004년 4월 1일자 1면)

경남신문-경남리서치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이 3곳, 열린우리당이 4곳, 민주노동당이 1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9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17대 총선에서 경남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 대결구도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인 민주당, 자민련을 제치고 3위를 보이는 등 약진하는 가운데 경남 전체 평균 부동층이 46.5%에 달해 당락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개 선거구중 한나라당 후보는 진해, 사천, 산청·함양·거창 등 3곳에서, 열린우리당은 창원갑, 김해갑, 김해을, 양산 등 4곳, 민주노동당은 창원을 1곳에서 각각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세를 나타냈다. 마산갑, 마산을, 진주갑, 진주을, 밀양·창녕, 거제, 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통영·고성 등 9개 선거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전 지역도 한나라당 후보가 5개 선거구, 열린우리당이 4곳에서 각각 오차 범위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이다.

"60대이상 · 여성표 노려라" (2004년 4월 1일자 3면)

(전략)

□ 판세분석

경남의 총선판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자대결'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세지역은 열린우리당이 4곳, 한나라당이 3곳, 민주노동당 1곳이며 오차범위내 접전지역 9곳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우세지역= 한나라당이 우세한 곳은 진해와 사천, 산청 · 함양 · 거창 3곳이다. 이 3곳에는 모두 현역의원이 출마한 곳이다.

진해는 당초 김학송 후보와 무소속 김우석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최충옥 후보를 지난주 공천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 정가의 유력한 분석이다.

김학송 후보가 22.5%의 지지를 얻어, 최충옥 후보(13.8%), 김우석 후보(11.8%)를 8.7%p, 10.7%p 차이로 따돌고 우세를 보였다. 이는 최 후보와 무소속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천에서는 이방호 후보가 32.4%의 지지를 얻어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이다. 열린우리당 한영성 후보가 18.5%로 추격을 벌이고 있다.

산청 · 함양 · 거창에서는 이강두 후보가 28.9%로 열린우리당 변범식 후보(12.5%)를 16.4%p 차이로 따돌렸다.

◇열린우리당 우세지역= 창원갑과 김해갑 · 을, 양산 4곳에서 열린우리당이 우세를 보였다.

창원갑에서는 공민배 후보가 32.2%로 한나라당 권경석 후보(17.9%)를 14.3%p 차이로 앞섰다. 이는 창원시장을 역임하는 등 공 후보 개인의 지명도와 탄핵정국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 갑 · 을에서는 김맹곤 후보가 39.0%, 최철국 후보가 43.5%의 지지도를 받아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15.2%)와 정용상 후보(19.6%)를 23.8%p, 23.9%p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김해이고 현역 김영일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산에서는 송인배 후보가 20.0%로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8.6%) 보다 11.4%p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이곳에는 나오연 현역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영진 후보, 무소속 김동주 전 의원 등 8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또 부동층이 61.6%나 돼 변수가 많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노동당 우세지역= 민주노동당은 도내에서 7곳에 후보를 내 권영길 대표가 창원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권 후보는 34.9%의 지지도를 받아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19.8%보다 15.1%p 차이로 앞섰다. 지난주말 뒤늦게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은 박무용 후보는 16.0%의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의 출마로 창원을에서 '열린우리당 바람'을 불 것인지 관심이어서 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합지역= 도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9곳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우세한 곳은 5곳이며, 열린우리당이 앞선 곳은 4곳으로 양분됐다.

특히 가장 치열한 곳은 남해 · 하동 0.5%p, 거제 0.6%p, 밀양 · 창녕 0.8%p 3곳으로 1%p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후략)

안 건 번 호 : 2004자심71

언 론 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주)조선일보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4년 3월 22일자 1면 『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

곳 우세』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48개 선거구 중 접전 예상지역 20개 지역구)와 관련해 오차범위 이내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 정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였더라도 이는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3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4조(기사제목)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열린우리당 17곳 한나라 3곳 우세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9~20일 서울 48개 선거구 중 접전 예상지역 20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17곳, 한나라당 후보가 3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우세한 17곳 중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확실한 선두 지역은 11곳에 달했지만, 한나라당이 우세한 3곳은 모두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다.

조사대상 20곳 중에서 탄핵가결 이전인 지난 9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실시한 7곳의 변화를 보면, 열린우리당 후보의 지지도는 불과 열흘 사이에 모두 18%포인트 가량 수직 상승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도는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조사대상 선거구 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종로·용산·동대문을·도봉을·서대문갑·마포갑·구로을·영등포을·동작을·강동갑·강동을 등에서 10~30%포인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중구·광진을·은평을·양천갑·서초갑·강남을 등에서는 오차범위내인 4~8%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강남갑·서초을·송파갑 등에서 모두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열린우리당 후보와 선두 경쟁을 벌였다.

1인2표제로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할 정당'으로는 열린우리당이 20곳 평균 43.9%로 한나라당(22.9%) 및 민주당(6.1%), 민주노동당(4.4%) 등을 크게 앞서, 정당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의원 확보도 열린우리당의 우세가 전망됐다.

선거구별로 유권자수 비례 무작위로 20세 이상 500명 이상씩 표본을 추출해 실시한 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4.4%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6

언　론　사 : 주식회사 스포츠투데이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5 명지빌딩 15층
대표이사 조 희 준

주　　문 : (주)스포츠투데이가 발행한 스포츠투데이 2004년 4월 9일자 28면 『유종필 "계백장군 납시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른 정당의 기발한 아이디어 선거운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기발한 아이디어 선거운동만을 부각 보도하여 여타 정당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유종필 "계백장군 납시오"

'계백 장금이 뽀빠이 각설이 그리고 랩송'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톡톡 튀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특히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 후보들이 막판 대역전을 위해 체면불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민주당 유종필 후보는 영화 '황산벌'을 패러디한 포스터 제작에 이어 갑옷을 입고 지역구 유세에 나서고 있다. 유후보는 "민주당의 상황이 아주 어렵다. 황산벌의 계백과 마찬가지로 신림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갑옷을 입었다"며 "민주당의 아들 '계백' 유종필을 지지자들이 살려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박금자 후보(서울 영등포을)는 '의녀' 장금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후보는 유세 때마다 장금이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서고 있다. 서울 금천에 출마한 장성민 후보 역시 '금천의 장금이'라는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정창교 후보는 '뽀빠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후보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닮아 뽀빠이라고 불렸다"며 "시금치(국민의 사랑)를 먹고 올리브(국민)를 구하는 뽀빠이가 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후보는 "또래인 30~40대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 '올리브! 시금치를 주세요'라고 말하면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경기 고양-일산갑에 출마한 박태우후보는 각설이 타령으로 유명한 허상민씨와 함께 유세를 다니고 있다. 박후보 측 관계자는 "각설이 복장의 허씨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분위기를 잡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한 김영호 후보는 랩으로 로고송을 만들어 화제를 뿌리고 있다. 김후보는 "서태지의 등장이 가요계의 판도를 바꿨듯이 부패한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뜻에서 랩로고송을 만들었다"며 "막판 대역전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돈과 조직 선거가 줄어든 탓인지 톡톡 튀는 홍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 경 고

안 건 번 호 : 2004자심3

언 론 사 : 주식회사 무등일보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0
대표이사 오 종 택

주 문 : (주)무등일보가 발행한 무등일보 2003년 12월 19일자 5면 『이정일의원 대항마 관심』, 2003년 12월 22일자 5면 『박주선의원 누가 맞서나』, 2003년 12월 24일자 5면 『민주경선 한화갑의원 뿐』, 2003년 12월 26일자 5면 『일단 이낙연의원 독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무등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해남·진도, 전남 보성·화순, 전남 무안·신안, 전남 함평·영광) 후보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에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을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이정일 의원 대항마 관심

(2003년 12월 19일자 5면)

재선을 노리는 이정일 의원에 맞설 경쟁력이 있는 대항마가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경선 도전자와 무소속,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항상 후보군 1순위에 속하며 변수로 떠올랐던 민화식 해남군수가 최근 '군정에만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출마를 포기해 수면아래 잠겨있던 몇몇 입지자들이 부상하는 등 후보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정일 의원에 맞서 민상금 연수원 부원장이 경선 도전의사를 피력해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역 바닥 민심을 다지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오길록 전 국민회의 민원종합실장과 이석재 전 도의회 부의장 등이 '불공정 경선 우려'를 이유로 민주당 간판이 아닌 무소속 출마를 벼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고 홍광표 전의원의 아들로 국회 보좌관 출신인 홍성권 전 국민경제연구원장과 지난 15, 16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종백 농어촌발전연구소장 등이 우리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남·진도는 현역의원인 이정일 의원이 지금까지 당원과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일단 유리한 입장이지만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변화와 개혁'차원에서 물갈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원이 막판까지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이 의원이 황산면, 오길록 전 실장이 산이면, 이석재 전 부의장이 송지면, 우리당 후보들은 해남읍 등으로 출신지가 달라 지역표가 분산될 것으로 점쳐져 후보 단일화 여부 및 진도지역 민심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이정일의원은 한 때 신당행을 놓고 저울질했으나 '지역여론'을 이유로 민주당 잔류를 공식화하고 재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이의원은 주민과의 약속대로 민주당 입당뒤 지난 4년동안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며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자체평가다.

이 의원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비롯해 국회 재정경제위 간사, 재해대책 특별위 간사, 농어가부채대책특별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부채경감과 조류발전소 등 대체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을 서남해안 중추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의원에 맞서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한 민상금 연수원부원장은 "지난 71년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조직팀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30년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중앙행정과도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민들을 위해 일해온 만큼 마무리 차원에서도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정회 부회장과 한국토지공사 감사, 대우조선 상임고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부원장은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갖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외길 정치인생을 걸어왔다"며 "고장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타도 이정일'을 외치며 고향 표밭을 다지고 있는 오길록 전 국민회의 민원실장은 "현역의원이 사실상 대의원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은 무의미한 만큼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 변을 전했다.

오 전 실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민들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민들도 그런 나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현역에 맞서 불공정 경선을 우려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중인 이석재 전 도의회부장도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토박이 입장에서 부패정치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돈 선거와 관계없이 능력있는 후보를 지역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우리당에서도 홍성권 전 원장과 박종백 소장이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홍 전원장은 "국회 보좌관 생활을 경험하면서 12년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공기업 감사 2년 등 누구보다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며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과 탈법, 금권선거를 타파하고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원장은 "국회생활동안 제2진도대교 건설, 남해안고속도로, 땅끝 관광지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돈과 조직을 동원한 선거문화에서 비롯된 고비용 정치를 청산하고 소신과 정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백 소장은 "참여정부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우리당을 선택했다"며 "지역민들은 기성정치인들의 부패에 신물을 느끼며 어느때보다 참신한 인물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무너져가는 농어촌의 아픔을 알고 있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 이를 대변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뉴욕대학 한국외대 객원교수와 경희대 대학원 겸임교수 출신인 양동주 지구당위원장이 '무능정치 타파와 지역발전도모'를 외치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주선의원 누가 맞서나"

(2003년 12월 22일자 5면)

보성·화순 선거구는 박주선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대항마'가 나서지 않고 있으나 경선 도전자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총선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예비경선과 당 대 당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에 맞서 김학주 인권특별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경선 도전 의사를 피력했고, 우리당에서는 홍기훈 전의원과 문두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선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성·화순은 현재 인구상하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 여부가 변수로 점쳐지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복합선거구 탓에

양 지역간 소지역주의 양상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의원이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정치인의 인권탄압'과 '대가성 자금이 아니다'며 떳떳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결과 또한 내년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먼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구 민원사업 등에 앞장서는 등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과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제1정조위원장과 기획조정위원장,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을 맡으며 앞장섰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17대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막바지 정치개혁법안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화순에 읍단위 최초로 도시가스 공급, 소도시육성사업 후보지와 폐광진흥지구사업지 선정, 보성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된 국민관광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 힘을 쏟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누구보다 한국정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왔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아 정치개혁과 지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재선의 의지를 다졌다.

한 측근은 "다양한 활동중에서도 지난 2002년 3월 당선 이후 첫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 전액을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대 비자금 건은 영수증 처리해 합법적 후원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입장이고, 나라종금건은 '대가성 자금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검찰의 표적수사에 다름 아니다"며 "당에서도 검찰의 부당수사진상규명특위 구성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아성에 맞서 당 경선을 고려중인 김학주 인권특별위 상근부위원장은 "박의원과 대적하기에 인지도는 낮지만 참신한 이미지와 오랜 당료경험을 무기로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출마변을 전했다.

평민당 시절 김대중 전 총재의 직접 면접을 통해 공채로 합격한 뒤 정당정치에 뛰어든 김부위원장은 이후 평민당 정책위 전문위원과 국민회의 정책실장, 부대변인, 민주당 대표 비서실 차장 등을 역임, 당내에서는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올해 화순에 정책연구소를 개설하고 활동에 돌입한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 '김삿갓 기념사업회'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광주 지하철 연장과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 학군제 폐지 등을 통해 지역현안을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홍기훈 전의원과 문두식 전 기무사령관이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예비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3, 14대때 국회에 진출했던 홍기훈 전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 인사들이 국민통합추진위를 구성하면서 기획조정실장과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며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인사가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출마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당시 홍 전의원은 노 대통령 등 뜻있는 몇몇 인사들과 함께 정치 사랑방인 '하로동선'식당도 함께 운영했고, 낙선 후 나주 동신대에서 석좌교수를 역임하며 후배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권토중래의 의지를 다졌다.

홍 전의원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정말 깨끗한 정치를 위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겠으며, 고교학군제 부활과 교육발전 제도개선, 화순 문화도시 육성, 청소년 전용회관 건립, 축구전용구장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당 입당을 공식선언한 문두식 전기무사령관은 정치학 박사로 경남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몇 안되는 군사통일 전문가로 통한다.

문 전 기무사령관은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구 획정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출마설이 나돌았던 박찬주 변호사는 "우리당 후보들이 광주일고 후배여서 함께 경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광주 남구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영애 전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지

역여론 등을 이유로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경선 한화갑의원 뿐

(2003년 12월 24일자 5면)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4선을 넘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도전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리틀 DJ'로 통한 한화갑 의원이 김대중 총재 특보에서부터 원내총무, 사무총장, 대표최고위원, 당 대표 등을 거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 경선도전에 나서려는 인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에서는 '인물교체' '정치개혁' '국민통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윤석 전 도의회의장과 박석무 전의원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벌써부터 본선보다 예비경선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무안·신안은 한의원이 신안출신인 반면 박 전의원과 이 전의장은 무안출신으로 지역간 대결양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당 두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도 일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점쳐진다.

또 민주당과 우리당 후보간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경우 '지역발전'과 '세대교체'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내년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당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앞장섰고, 50년 정통야당의 맥을 지켜오면서 어느덧 3선의 중진급 의원으로 성장했다.

총 사업비 2조원이 넘는 신안지역 연륙·연도교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도서종합개발비, 무안국제공항, 특별교부세 연평균 13억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해결에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국정혼란을 바로잡고 나라의 비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의 화두를 뛰어넘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출마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한화갑은 칭찬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도 이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태어날 각오"라며 지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했다.

한 측근은 "국회와 중앙정치 무대의 바쁜 일정 때문에 지역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과 분당의 아픔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의원에 맞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윤석 전도의회 의장과 박석무 전의원이 경선도전의사를 강력 피력하고 있어 후보선출을 위한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의장은 지난 5, 6대 도의회 의원과 운영위원장을 거쳐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최근 당적 변경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의장 사퇴 요구 등으로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일에는 "인간의 고통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하는 듯한 시험받는 기간이었고 아팠지만 값진 경험이었다"는 고별사와 함께 의장직에서 물러나 동료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 전의장은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게는 지역구도 타파와 참신한 정책준비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무안에 새시대농어민연구소를 개소하고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전의장은 "경선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당의 정치적 가치를 알리고 싶고, 참여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무안국제공항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3, 14대에 국회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석무 전의원은 두 번의 의정활동경험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대학 출강,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초청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발판으로 '권토중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 전의원은 "정치권의 부패와 타락은 이제 치유할 수 없는 극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개혁, 지역

갈등 타파,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올곧은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의원은 "야당의 입장에서 정치를 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이제 힘있는 여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현안사업인 국책사업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여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현명한 유권자는 최후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바탕으로 양심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박 전의원은 "조직과 금권이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몸과 행동으로 유권자들의 신뢰와 애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희석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지난 91년 14대 때부터 4차례의 총선출마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당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연수원 부원장, 총재 정무특보, 정개특위 위원, 지난 대선 전남선대본부장 등 당력도 튼튼하다.

안 위원장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호남지역 선거구 중 10% 최다득표 기록을 보유한 터라 내년 총선에서도 최다득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감정을 벗어난 인물위주의 선택을 지역민들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낙연의원 독주 (2003년 12월 26일자 5면)

이낙연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도전이 예상됐던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아직까지 총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는 잠잠한 편이다.

당초 함평·영광에서는 지난 16대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아깝게 고배를 마셨던 장 현 호남대 교수와 이석형 함평군수 등이 꾸준히 거론됐으나 장 교수는 광주 서구 출마쪽으로, 이군수는 불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이낙연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연관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이 정치적 도약을 위해 민주당 경선이나 열린우리당 출마를 벼르고 있어 변수로 점쳐진다.

먼저 이낙연의원은 초선인데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한·일의원연맹 간사,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당 제1정조위원장과 대변인 등을 거쳐 당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기간동안 탁월한 브리핑과 날카로운 분석력이 돋보여 노무현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고, 이 때문에 민주당 분당 이후 열린우리당 측으로부터 입당을 꾸준히 제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원은 그러나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어 민주당 사수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최근에는 총선에 대비해 틈틈이 마을단위 보고회와 지역민원수렴, 지구당 조직 정비 등에 열을 올리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때 지구당 조직 활동에 함평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여론이 분분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지역인사들을 찾아 고충을 토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또 지역숙원사업인 국군통합병원 유치, 치매 환자 요양병원 건립, 옥동교 개설, 손불 월천방조제 항구복구,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 진례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56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더 넓게 보고, 더 높게 꿈꾸며, 더 많이 뛰면서 민주당이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재선의지를 다졌다.

이의원의 아성에 맞서 김연관 민주당 인권위부위원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민주당 경선과 우리당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광 염산이 고향으로 함평과 영광에서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부위원장은 "32세에 국회의원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뒤 총선때마다 공천신청을 했지만 낙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경선과 우리당 출마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입장정리가 끝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의원과 당내 경선 또는 당 대 당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양섭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지역 정서상 결과가 뻔한 상황인데 출마를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출마를 권유하면 나서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았던 이석형 함평군수는 "함평군민들의 오랜 소원인 지역국회의원 만들기에 대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밝혔듯이 군수로서 군정에만 충실할 생각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불출마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4년 1월 9일자 3면 『'칼의 힘, 펜의 힘' 내일 출판기념회』, 2004년 1월 10일자 8면 『펜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04년 1월 12일자 4면 『오홍근 민주 홍보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전주시) 출마예정자인 특정인의 저서관련 기사를 연 3회에 걸쳐 사진과 함께 집중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칼의 힘, 펜의 힘' 내일 출판기념회

(2004년 1월 9일자 3면)

오홍근 민주당 홍보위원장(전 국정홍보처장)이 10일 오후 5시30분 전주코아호텔별관 문화홀에서 자신의 칼럼집 '칼의 힘, 펜의 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칼의 힘, 펜의 힘' 칼럼집은 DJ정부에서 초대 국정홍보처장 및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오 위원장이 지난 31년동안 언론인으로서 정론을 펼쳐왔던 정치·사회평론집이자 2004년 새해 벽두에 이 나라의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문화와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던지는 고언이기도 하다.

총 4부로 나누어진 1부에서는 암울했던 80년대 군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군사문화의 청산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라는, 그 시절 어떤 언론인도 다룰 수 없었던 주옥 같은 칼럼이 실려 있다.

2부에서는 그로부터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남정권의 폐해가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권력을 향해 아낌없이 충고한다.

3부에서는 DJ 정부 탄생을 전후한 선거문화와 이른바 조·중·동 중심의 언론 횡포를 낱낱이 고발하고

역사의 순리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정부 탄생의 필연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4부에서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왜곡되고 굴절되었던 언론 보도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특히 필자는 지난 군사 독재 권력에 의하여 백주에 테러를 직접 겪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공직자로서 이 책이 우리 사회의 균형과 형평성을 갖추는 상식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타후보에 비해 총선전에 늦게 뛰어든 오 위원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주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속상해 하는 여론을 본격 수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펜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04년 1월 10일자 8면)

『'이제 포도주가 반 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각과, '아직도 포도주는 반 병이나 남았다'고 하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반 병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깝고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넉넉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어우러져사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비관과 낙관, 부정과 긍정,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세상에 가득차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도 이와 같다.』 -저자 서문 중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오홍근(61)씨가 칼럼집 '칼의 힘 펜의 힘'(도서출판 산해·1만원)을 출간했다. 10일 오후 5시 30분 전주 코아호텔 별관 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

그는 권두에 '아직도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개탄한다'는 말을 실음으로써 책의 발간 동기와 4·15총선 출마 계기를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68년 T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이래 저널리스트로 살아온지 30년. 칼럼집은 그가 회고한 언론인으로서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 정치 상황 및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결코 녹록치 않은 지난 날들,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으며 그가 느낀 삶의 편린들이 책장 속에 가득하다.

"지난 세월 언론계에서 일하면서 또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가스 안전공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보람 있는 일이 주어지는 현실에 늘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의 경험이 과거와는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며 이 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읽게 했습니다."

오 전 국정홍보처장은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칼럼집을 통해 피력했다. 저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일에 대한 성실성, 치밀한 사태 분석과 그 대안 제시 등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겸비한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게다가 그것을 자신의 후배들에게 무언중에 교육하는 능력 또한 대단했단다.

칼럼집은 총 4부로 구성, 기자로서 재직 시절 겪어야 했던 언론 탄압상과 다시 펜을 들게 된 계기, 국정홍보처장 재직 시절 당한(?) 언론사의 압력과 극복과정 등을 싣고 있다. 끝으로 오 전 처장은 '펜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의지를 역설하며 'IPI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 일행과의 대화'를 게재했다.

지은이 오홍근씨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북중과 전주고를 거쳐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수료하고 일본 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68년 TBC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그는 정부의 TBC 강제 통폐합 정책에 의해 중앙일보로 옮겨 사회부장, 부국장 등을 거치며 30여년간 언론인으로 재직했다. 언론인 재직 당시(88년 9월) 3명의 괴한으로부터 회칼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적도 있다.

그는 또 99년 5월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홍보처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공직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 곡필사' 집필을 위해 자료수집 중이며 부인 송명견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오홍근 민주 홍보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2004년 1월 12일자 4면)

오홍근(전 국정홍보처장) 민주당 홍보위원장의 칼럼

집인 '칼의힘, 펜의힘' 출판기념회가 1천여명의 축하객들이 대거 참석하는등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전주코아호텔 별관 문화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김태식 국회부의장을 민주당의 김경재·장재식 상임중앙위원, 강운태 사무총장, 장성원 정책위의장, 이낙연 기획조정위원장, 최재승 의원 등 중앙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중앙당 출입기자들이 대거 동행 취재, 출판기념회가 아닌 당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방불케 했으며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영입되자마자 당에서 홍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오 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실감케 했다.

필자의 고교은사 양동식씨는 "88년9월의 오홍근 테러사건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강한 펜으로 5, 6공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온 그 정신을 끝까지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평(書評)에 나선 서승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은 "오홍근 기자의 글은 우리가 우리사회와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평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

언 론 사 : 주식회사 목포투데이사
전남 목포시 산정3동 280-1
대표이사 정 태 영

주 문 : (주)목포투데이사가 발행한 목포투데이 2004년 1월 7일자 11면 『우리들 가슴에 꼽은 비수, 표로 심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목포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을 계기로 노대통령에 대한 목포지역민심을 전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부정적 견해("모르긴 해도 열린 우리당 지지율이 목포에선 10%도 안나올 것이다",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내년에 출마한 사람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될 것" 등)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10조(인터뷰기사)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우리들 가슴에 꼽은 비수, 표로 심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95%를 보여주며 노무현 당선의 저력을 보여줬던 목포민심이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화됐을까?

특히 96.9%의 지지율을 보이며 목포 26개 동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삼학동의 민심은 그동안 어떤 심경의 변화를 보였는지 지난 1년간 목포민심 변화추이를 알아봤다.

특히 "호남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겠느냐",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으로 '호남 소외론'을 다시 일으키며 호남인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다는 노대통령의 발언들은 목포민심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민심이 달라지고 세상이 움직입니까? 노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지 그렇다고 오늘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이 열린우리당 지지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목포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목포 포럼 손순호 사무국장은 "아마 모르긴 해도 열린 우리당 지지율이 목포에선 10%도 안나올 것이다"고 분석했다.

시민개혁.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외치는 386세대들은 그러나 아직도 노대통령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다.

고완영 신흥동 주민자치위 간사는 "정치적 지지기반도 약했고 정계에 등용할 주변 인재발탁의 어려움 등 국정현안 자체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수행능력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냐"며 "목포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겠지만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과 호남인들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에 심한 적대감을 보이는 시민들도 상당수였다.

"한두번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호남사람들 무시하는 발언에 이젠 이골이 날 지경"이라는 조성오 목포 산악회장은 "나 좋아서 찍었겠냐는 발언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지지해준 호남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표시는 못할망정 이젠 민주당의 모태가 된 호남을 향해 민주당을 등지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기도 했다.

대선 전날 정몽주씨가 지지를 철회하자, 다급한 마음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고 설득시켰다는 김환 목포백년회 이사장은 "이젠 노대통령이 누구랑 대화만 한다고 해도 또 무슨 말로 세상사람들 간담을 서늘하게 할까 고민이 먼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노대통령에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것이고 이런 실망감은 목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결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노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직분을 버리고 자기 생각만으로 자꾸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노대통령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모두 싫은 소리를 내뱉는다"는 이수남 맹수한의원장은 "목포에서는 노대통령의 특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석은 젊은 층과 비교적 접촉이 많은 학계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으면 민주당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생각을 해야지 매일 파벌형성하고 계파 따지면서 내편 네편 가르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젊은 제자들마저도 자유롭게 발언하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우리보다 더 막말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말해 젊은 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임송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협의회장은 "사석의 발언이라 해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을 거부하고 비하하는 발언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김모씨는 "취임 초에는 특검법 만들더니 이젠 민주당 찍지 말자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꼴"이라며 "노대통령이 아무리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 지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열린 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내년에 출마한 사람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의감을 보였다.

문창부 중소기업인증센터 전무이사는 "서울 쪽 민심도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고 서울쪽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9

언 론 사 : 주식회사 부산일보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0
대표이사 김 상 훈

주 문 : (주)부산일보가 발행한 부산일보 2004년 1월 17일자 3면 광고 『한국 무궁화회 총재 김정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부산일보가 위 심의대상광고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한 특정 후보예정자의 개인 경력을 광고를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한국무궁화회 총재

- 김정희 성형외과·산부인과 원장
- 김정희 장학회 이사장
- 부산여성지도자포럼 회장
-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포럼 "전진포럼"공동대표
- 부산대 여의사회 회장/부산의사문우회 부회장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시지회 운영위원
- 고신의대 외래교수/복음병원 암예방 홍보대사
- 안민정책포럼 회원/21세기 정치학회 회원
- 경기여고 총동문회 이사/부산NGO포럼 회원
- 부산대 총청년동문회 초대회장, 총동문회 부회장

※여의사로는 처음으로 제20회 의학대상 수상

- 부산수정초등학교·경남여중 졸업
- 경기여고 졸업(서울)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졸업(성형외과 의학박사)
- 인제대학교 대학원 수료(보건학 박사 수료)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행정관리자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여성교육지도자과정 수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 지역대학원 최고국제경영자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21세기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전문과정 수료
- 신라대학교 21세기 여성지도자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N.G.O 기본과정 수료
- 경성대학교 제1기 경성정보대학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N.G.O 심화과정 수료

박정희가 아닌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

의학대상 수상한 최초의 여의사 김정희
김정희의원은 수영구 수영동에 있습니다.
수영로타리(지하철 2호선 수영역 2번출구)
■주소:부산 수영구 수영동 446-14
김정희 의원(성형외과·산부인과)

제46회 나라꽃 무궁화 사진 전시회
• 일시: 2004.1.1~3.31
• 장소: 김정희 의원
• 전화: 051)751-0321 • FAX: 051)752-0321
• E-mail: choosa88@hanmail.net

안 건 번 호 : 2004자심10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4년 1월 26일자 11면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전북도민일보는 ▲ 지난 1월 9일자, 10일자, 12일자의 특정 후보예정자 부각 보도로 당위원회로부터 경고결정(2004자심5)을 통보받은 바 있고 ▲ 그러한 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태조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오 홍 근 J&J Network 대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어렵고 까다로운 이론으로 정평이 나있다. 자연과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무릎 위

에 안고 있으면 두 시간이 지나도 힘든 줄 모르지만 뜨거운 난로 앞에 있자면 1분도 못 견디는 것, 이것이 상대성 원리다.

프로들의 정치시대 끝나

요즈음 우리의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로 이 상대성 원리를 생각해 본다. 대선비자금 파동으로 시작된 정국의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민심은 정치권의 돈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정치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경제는 곤두박질 쳐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청년실업이 예사롭지 않다. 드디어 대학교수 411명이 서명한 '이제는 경제'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교수의 본분은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판에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심 추스르기에 온갖 꾀를 다 내고 있다. 말로는 정치도 경제도 모두 순항을 해 금방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곧 도래 할 것 같다. 낙관적이다.

물론 정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말 속에는 할 말과 안할 말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다 듣다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 되었다.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의 기본은 믿음이다.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 땅의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한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럼 없다고 강변하지만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갈 때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얼버무린다. 누가 그들을 믿을 것인가?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똑 부러지게 해내는 일이 있다. 이중의 잣대로 사정없이 서로 헐뜯는 일이다.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TV앞에만 나서면 '독야청청'이고 '상대방은 반개혁'이라고 외쳐대는 비겁한 사례도 보인다. "안 그래도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그건 아마추어의 순진한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프로들이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정치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프로들은 민생 같은 것은 뒷전이고 오직 총선에만 매달려 온갖 말장난으로 상대방만 쓰러뜨리면 된다는 것인가?

모름지기 그런 프로들의 정치시대는 갔다. 정치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국민을 향해 단순해져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일을 챙기면 된다.

잘못된 선택 대가 치러

장군이 전투에는 관심이 없고 열병식만 즐긴다면 그 군대는 전투에서 지기 마련이다. 우리 정치가 그 꼴이다. 당장 국민 편에서 돈 안 드는 선거제도,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교육의 개혁, 중소기업 대책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도 어려운 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군 병에 걸린 프로들의 정치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정치 초년생들의 행태다. 아마추어다우면 될 터인데, 어느새 실패한 프로들을 빰치고 있다.

어떤 나라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밖에는 소유할 수 없다. 잘못된 선거를 해놓고 국민들은 뒤늦게 후회한다. 그리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지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오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한국경제의 정체성과 성장 동력을 되찾고 계층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그 시금석이 될 17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11

언 론 사 : 주식회사 뉴스포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4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905호
대표이사 이 경 섭

주 문 : (주)뉴스포럼이 발행한 뉴스포럼 2003년 12월 18일~31일자 7, 8면 『정정당당하게 구태정치 깰 터』등의 제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정한 일정 절차(출마 오디션)를 거친 후 자체기준에 부합한 후보예정자들에 한해서 뉴스포럼에 인터뷰기사를 게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정당과 유력 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정기준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특정인의 인터뷰가 결정된다는 것은 후보예정자들의 정책성향과 비전의 차이에 따라 기회의 차등을 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뉴스포럼이 위 절차를 통해 선정된 특정인들에 한해 위 심의대상기사에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로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 (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뉴스포럼 제3호
(2003년 12월 18일~2003년 12월 31일자 각 7, 8면)

· "진보, 보수 건강한 경쟁을 위하여" 제하의 기사
(서울/인천판)
- 서울동작갑 김학규 출마예정자 인터뷰(민주노동당)
(기사원문 생략)

· "정정당당하게 구태정치 깰 터" 제하의 기사
(서울/인천판)
- 용인을 정소앙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강릉을 정치개혁의 선두에" 제하의 기사
(대전/강원판)
- 강릉시 신건승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개혁을 위해 뛰는 과학기술 정치인" 제하의 기사
(대전/강원판)
- 대전 서구을 여인철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열혈 네티즌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제하의 기사
(대구/경북판)
- 안동 김수동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검증 받은 깨끗한 정치 자신" 제하의 기사 (대구/경북판)
- 대구남구 박형룡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부산다움 회복 새정치 밀알의 꿈"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동래 김정기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자치운동 경험 정치현장으로 확대"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 사하갑 윤준호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열린 정치로 함께 사는 정치 만들고파"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광주동구 이윤정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농업문제 농민의 정치세력화로 푼다"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완주 임실 하연호 출마예정자 인터뷰(민주노동당)
(기사원문 생략)

○뉴스포럼 제4호

(2004년 1월 8일~2004년 1월 21일자 각 7, 8면)

· "개혁 중 으뜸은 언론개혁이다" 제하의 기사 (서울/인천판)
- 서초을 이지숙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빈민여성운동가에서 나라의 일꾼으로" 제하의 기사 (서울/인천판)
- 인천부평갑 홍미영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더 큰 미래를 위한 더 큰 일꾼 자신" 제하의 기사 (대전/강원판)
- 대전 서구을 구논회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부정부패 없는 나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제하의 기사 (대전/강원판)
- 강원 원주 김종견 출마예정자 인터뷰(한나라당)
(기사원문 생략)

· "개혁이 승리하는 역사 만들 것" 제하의 기사 (대구/경북판)
- 포항시 남구·울릉군 유성찬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시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제하의 기사 (대구/경북판)
- 대구 달서을 권형우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정치개혁 실천"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 중구동구 이해성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습관성 국민 무시증 프로정치인 응징을"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 남구 박재호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호남 일당독재 시민의 힘으로 '끝'"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순천시 안세찬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낡은정치, 주민과 더불어 정면돌파"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북제주군 현길호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안 건 번 호 : 2004자심12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대일보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995-10
대표이사 김 종 욱

주 문 : (주)시대일보가 발행한 시대일보 2004년 1월 28일자 8면 광고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시대일보가 위 심의대상광고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광고한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예정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

우리가 통상 미디어에서 접하는 유명인들의 모습 뒤에 숨은 인간적인 냄새를 잘 포착해 과장 없는 솔직한 필체로 적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세 번 울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독자 이석우 님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려고만 하는 대화부재의 시대에 진정한 대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 독자서평

이 책의 곳곳에는 노련한 기자로서의 인터뷰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아 읽는 것도 이 책의 즐거움 중에 하나다. -인터넷서점 YES24 독자서평

안 건 번 호 : 2004자심13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일보
광주시 북구 두암동 851-10
대표이사 박 성 렬

주 문 : (주)호남일보가 발행한 호남일보 2004년 1월 20일자 5면 『참여하는 국민이 새해의 희망』 제하의 호일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

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호일칼럼

참여하는 국민이 새해의 희망

전갑길〈민주 광주광산 국회의원〉

새로운 해가 또다시 시작 된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다.

해마다 우리는 정치의 개혁과 안정, 균형을 통해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도덕성 회복으로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더욱 컸었다.

진보진영의 재집권으로 우리 사회가 떨쳐버리지 못한 부정부패와 구태, 제도적 모순이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기반을 잡아 안정감 있는 생활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가 펼치는 불안정한 정국운영으로 정치공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민생현안을 뒤로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모습들이 재현되는 그럼으로써 더욱 불신이 가중되는 사회상이 연출되고야 말았었다.

어디 이뿐인가?

국내적으로 대형 사건 사고에다 사회적 갈등과 혼선이 깊어졌고 부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빚어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무려 192명이나 목숨을 잃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고, 일주일 뒤 우울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와 개혁'을 내걸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으나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6년간 사라졌던 화염병이 다시 난무하고 사제총까지 동원된 격한 시위가 잇따랐으며 위도 원전센터 건립과 새만금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은 혼선을 거듭하며 상당기간 표류했다. 급기야, 새만금 사업은 공사 중단 판결까지 겹치면서 장관이 사퇴했고, 위도 원전센터는 전면 백지화됐다.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며 사상 최대의 실업률은 '이태백', '사오정'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서민을 실의와 절망에 빠뜨렸으며, 청년 실업율은 8.3%로 IMF당시 수준에 육박했으며, 신용 불량자 4백만명이 카드빚에 허덕이던 민생고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나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남북,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의 리더쉽은 위협받았고, 떨어진 지지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금기시 돼 온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일명 차떼기 전달로 한나라당은 망신살이 뻗쳤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노 대통령 또한 측근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는 작금의 정치적 공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며, 제도 개혁을 기다리기에 앞서, 남이 나서길 바라기 전에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국민만이 새해의 희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있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가름하는 실험의 무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금품과 향락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출마예정자의 출신지역을 능력보다 우선시하는 고질적 병폐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여망에 귀기울이지 않는 기성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국민 개개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는 한 꽃(世界一化)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올해도 변함없이 세계화·국제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더욱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그 길을 재촉해야 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14

언 론 사 : 주식회사 뉴스포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4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905호
대표이사 이 경 섭

주 문 : (주)뉴스포럼이 발행한 뉴스포럼 2004년 2월 5일~18일자 7, 8면 『반개혁 심판 386선발대』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1. 당위원회는 뉴스포럼이 지난 3, 4호에서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들 위주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불공정 보도로 판단하고 경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뉴스포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또다시 특정 정당소속 후보예정자들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인터뷰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위 보도가 당위원회의 지난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편집완료된 점을 감안해 차후 보도에 있어서는 공정성, 형평성 유지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 주요 기사내용

○뉴스포럼 제5호

(2004년 2월 5일~2004년 2월 18일자 각 7, 8면)

· "반개혁 심판 386선발대" 제하의 기사(서울/인천판)
- 서울 서대문갑 우상호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국민을 위한 갈등해결 자신있다" 제하의 기사 (서울/인천판)
- 경기 과천·의왕 신창현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개혁으로 승부하는 당당한 정치인 될터" 제하의 기사 (충남/충북판)
- 충남 보령서천 이근호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아름다운 정치로 행복한 변화를" 제하의 기사 (충남/충북판)
- 청주 흥덕구 노영민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부패정치의 끝장은 유권자의 몫" 제하의 기사

(강원/대구판)
- 불출마 선언한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 인터뷰
(기사원문 생략)

· "대구에 부는 개혁풍 '기대해도 좋다'" 제하의 기사 (강원/대구판)
- 대구 북구을 배기찬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택시모는 호텔 사장 서비스정치 현장으로"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 해운대구 기장을 강진수 출마예정자 인터뷰 (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국민이 원하는 것 먼저 챙기는 정치를" 제하의 기사 (부산판)
- 부산 수영구 허진호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노사모 전사에서 개혁의 홍보 도우미로"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광주 광산구 현해성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 "변화와 개혁의 전도사 되겠다" 제하의 기사 (전남/제주판)
- 전남 순천을 서갑원 출마예정자 인터뷰(열린우리당)
(기사원문 생략)

안 건 번 호 : 2004자심15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1월 29일자 10면 『국민이 새인물 뽑아야 할 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계기도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인터뷰 총선 출사표

"국민이 새인물 뽑아야 할때"

문부촌 민주 광명시(을)지구당 수석부위원장

"광명시 초대민선 시의원과 도의원 4, 5대를 역임한 축적된 노하우를 되살려 광명시 발전을 위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17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천년민주당 광명시(을)지구당 문부촌 수석부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협의회장)의 간절한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닫는다.

30대에 정치에 입문한 문 수석은 조용하면서도 한번한

말은 책임을 지는 사나이로 주변에 익히 알려진 인물.

그러면서 체육에 남다른 소질과 취미를 갖고있어 광명시 체육회 이사를 시작으로 체육계에 첫발을 내디딘후 광명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광명시 배드민턴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축구인 육성에도 남다르게 정력을 쏟아냈다.

초대민선 시의원 역임

그래서 요즘처럼 강추위에 한번도 쉬지 않고 조기축구모임에 참가해 젊음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원 4-5대를 할 때는 광명연소초등학교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도비 5억원을 들여 건립, 선수들을 육성했으며 7억원의 도비를 따내 광명중학교에 기숙사를 건설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문 수석은 또 북한문제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도의회 남북교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002년 6월 20일-29일까지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이때 김정일 고향인 삼지연읍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10억원을 전달했으며 월드컵축구경기 유치기념으로 축구공 2002개를 전달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월드컵사절로도 한몫을 했는가 하면 남북한 화해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축구인 육성에 한몫

문 수석은 조기청소에도 적극적이어서 서민들로부터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양천주변을 비롯해 도덕산, 구름산 등지를 다니며 쉬지 않고 청소를 하는가하면 광명약수터를 관리인처럼 아끼고 주변을 단장해 약수터 산증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문 수석은 또 지역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지역민을 위해 무엇이든 맡겨주면 해내는 남다른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

문 수석은 이 때문에 조세형 전 의원의 특별보좌역을 할 때는 중앙당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모두 처리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거물급 인물로 인정받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했으며 민주당 광명시(을)지구당 17대 총선에 출마의사를 표명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 없이 중앙당에 등록하는 영광으로 출사표를 던져 광명시민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지역발전에 한몸 바칠터"

특히 문 수석은 노인문제에도 관심이 커 광명시 노인복지상조회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두루 살피는 파수꾼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앙심이 많은 문 수석은 양로원을 찾아가도 가능한 남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문부촌 수석은 "사회에 그늘진 사람들이 많은데 당리당략에 치우쳐 50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며 "국민이 새 인물을 뽑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문 수석은 부인과 슬하에 1남 1여가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16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2월 5일자 10면 『소외계층 아픔 살피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계기도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릴레이 인터뷰

"소외계층 아픔 살피겠다"

총선 출사표 던진 김철수 양지병원장

"우리 이웃과 사회를 건강한 복지가 흘러넘치는 양지로 만드는 일, 그것은 저의 오래된 화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화두를 풀기 위해 17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선 이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관악을 후보로 나서기 위해 뛰고 있는 김철수(사진) 박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지나왔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형태로 이어지는 인생사 태반이 '사회복지'라는 동일 주제로 집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병든 사회, 그늘 속의 이웃을 햇빛 쏟아지는 양지로 걸어 나오게 하는 세상 만들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기도 한다.

바야흐로 정치권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경영'으로 바뀌면서 '전문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부상하고 있는 때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살려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다.

"타성과 독선으로 빗나간 정책과 제도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서민생활과 청년의 꿈,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여성의 복리와 권익의 확산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지를 양지로 만드는 개혁과 변화의 따뜻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노약자·장애인·여성복리 정책개발에 주력할 터"

김박사가 정치권 진출을 꿈꾸는 이유는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 때문이다. 정치권이야말로 이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법이 가능한 통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도 김박사를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들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중앙정치가 국정을 돌보는 것이라 해도 관악지역만큼은 지역 특성상 민생을 직접 챙기는 생활정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배려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타성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성 정치권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못가지고 덜 가진 사람들의 희생을 외면해왔습니다. 잘못이 분명한 정책과 제도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것도 소외계층의 아픔과 눈물을 살피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없었던 탓입니다."

김박사에게는 지난 75년 관악구 신림동에 양지병원을 개업하면서 연을 맺은 이 곳이 고향과 다름없다. 이곳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키워냈다. 그로서는 자신의 청춘을 묻은 곳이다. 30여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 온 주민들은 이제 그에게 육친의 그것보다 더 뜨거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남 못지않은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됐다.

그는 그동안 의술을 펼치는 의사로서,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학자로서, 각종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과 정당활동 그리고 여러 의료관련 협회 활동 등 활발하고 열정적인 삶을 꾸려왔다. 관악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청을 비롯, 방의협의회,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문화원 등 지역의 어느 곳에서든 소임을

맡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다.

주위사람들은 그런 그를 '관악의 슈바이쳐'로 부르며 '관악의 음지'를 '양지' 바꿀 수 있는 적격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가 아픈 사람의 가슴을 열었던 노하우를 더 크게 활용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18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콘솔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74-14
대표이사 손 대 근

주 문 : (주)한국콘솔이 발행한 주간저널 2004년 2월 10일자 24~26면 『성실! 그리고 김해시민에 대한 의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주간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김해)와 관련해 후보예정자들을 거론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성실! 그리고 김해시민에 대한 의리

(전략)

열린우리당 쟁쟁한 지역출신 인물 8명 출사표 던져

최근 발생한 한나라당 지역구 현역의원의 불법대선자금 사건은 치열한 접전지인 김해지역의 민심과 직결돼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일각에서는 과반수까지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어 열기는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대 분구인 김해지역은 열린우리당만 해도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김맹곤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태화 김해참여정책연구소장, 김갑영 전 경기대교수, 정노찬 변호사, 정영두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양수대 (주)풍광 회장, 최철국 김해발전연구소장 등 총8명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지역은 한나라당대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후보들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3일에는 '열린 우리당 김해시지구당 창당대회'를 열어 4·15총선 준비가 본격화됐음을 알리기도 했다. 참가한 총선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새로운 선거풍토를 김해에서 일궈내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30년 긴 여행의 종착역 김해

그 중에서도 30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다 이젠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열린우리당 김해지역 경선후보로 나선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73년 행시에 합격해 국세청 세무서 과장을 시작으

로 부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국세청 직세·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국세청 차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정치입문을 선언한 곽진업씨.

그의 30년 간 긴 공직생활의 최종목표는 국세청장이 되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어주는 담이 낮은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모주간지에 "능력으로 보나, 조직 장악력으로 보나 곽진업씨가 차기청장이 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당선자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곽씨가 배제된다면 오히려 역지역차별일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말이 보도됨으로 인해 청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후 그는 두 기수 행시 후배인 이용섭 국세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사표를 냄으로써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꿈 많던 학창시절을 김해에서 보낸 그는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고향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이제는 유년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준 고향 김해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곽 전 차장은 현재 재경김해향우회 회장, 동아고 총동창회 회장, 김해사랑 한마음 회장을 맡아 김해발전 방안을 모색하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떠오른다며 멋쩍은 미소를 건넨 그는, 지난 1974년 국세청 소득세 사무관 시절 종합소득세법 개정 후 세무서를 순회하며 1만 6천여명의 국세무공무원을 교육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를 기억할 만한 것은 부산지방 국세청장 재직시 부산지역 파이낸스업체를 특별조사함으로써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한 일이다. 성실한 공직생활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 등 다양한 수상을 하기도 했다.

김해발전을 막고 있는 근본요인

40만의 인구와 463㎢(경남의4.4%)면적, 4,446개의 기업체를 안고 있는 김해는 유소년 층의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로 가용토지지자원과 광역교통체계로 인접 대도시의 기업·인구의 지속적 유입,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높은지지, 경제 및 생활권의 광역화로 동남경제 및 문화의 중추도시로의 발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도시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은 인구와 제조업의 급속한 유입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난개발', '유입인구의 정체성 부족', '도시·농촌통합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미흡', '국제화·미정보화·시민참여 등의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미흡', '여성·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미흡', '장기비전계획의 미수립으로 통합된 도시로의 발전방향 부재' 등의 약점을 안고 있다.

곽 전 차장은 김해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친환경적 개발부족, 난 개발, 주거지역과 공장지대의 병존으로 인한 생활여건문제, 교통불편, 저소득층 주거문제, 중소기업 자금·임금·판로개척의 문제"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물론, 가야문화 복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김해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민주택 해결이 김해발전의 가장 급선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그만의 김해 현안문제 해결방안은 이렇다.

유동인구가 많은 김해에 양질의 저렴한 서민주택을 건설해 인구 정체성을 향상과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주택문제가 해결되면 풍부한 인력이 공장의 유입을 부르고 이것이 김해 인구 증가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많은 인구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게 되면 학원, 상가, 극장 등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김해의 교육, 문화는 자연스럽게 발전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뤄야 할 것이 교통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다.

곽 전 차장은 "김해 중소기업 최대문제인 자금난·인력난·판로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기업인이 신명나게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장유~창원간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제2의 터널 개통과 IC개설 등의 제반민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도시차원을 넘어 김해를 부산경남 중추도시로 발전시켜야"

'김해는 부산의 위성도시'라는 개념이 사실은 강하다. 그러나 그는 김해 발전을 위해서는 위성도시 차원을 넘어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중추도시'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김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의 중요성이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고 근시안적인 사고로 도시계획을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착공에 들어간 경전철보다 부산의 지하철이 김해를 거쳐 창원, 마산까지 이어진다면 부산-경남간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 전 차장은 "부산·마산·창원이 대도시이며 김해 또한 대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부산지하철의 창원까지의 연장은 실현 가능한 제안이므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산에서 김해까지는 지하철, 창원에는 지상철, 도로가 복잡한 마산은 지하철로 연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김해를 통한 부산지하철의 광역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인지도가 높다고 지지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김해에 내려와 4.15총선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곽 전 차장은 다년간의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인지도와 지지도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30년간 국세청에 몸담았다는 게 시민들에게 거리감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콩잎무침과 장터소고기국밥을 즐겨 찾는 곽 전 차장의 소박함과 온화함은 그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정도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30년 공직생활 동안 쌓은 인맥의 힘을 빌려서라도 국회를 민생을 위한 의결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한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에 맞게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정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김해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리 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19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기신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김 화 석

주 문 : (주)경기신문이 발행한 경기신문 2004년 2월 13일자 3면 『수원발전위해 출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경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수원) 후보예정자인 특정인의 출마변을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예정자들을 비방하는 발언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언한 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지도를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

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인터뷰

"수원발전위해 출마"

김종열 수원시의회 의장

김종열 수원시의회 의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4일자로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의장은 한나라당의 공천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영통구에서 출마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직 사퇴 이유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기초의회 의원직을 역임하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점도 많았다. 특히 평의원일때보다 시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말뿐인 빈껍데기 지방자치제를 통감했다.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내가 출마하는 영통2동은 상주인구가 5만3천명인데도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분동이 좌절됐다. 또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려해도 지방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수원의 발전을 위해 더 확실히 일할수 있는 국회의원을 목표로 의장직을 사퇴했다.

-한현규 부지사에 밀려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누구에게 밀려서 탈당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수원에서 한 부지사를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지만 오랜 봉사활동을 해오고 초등학교때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김종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부지사도 나를 찾아와 "손학규 도지사가 강권해 출마하게 됐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공천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탈당한 것이다.

-전통적 민주당 열세지역인 수원에서의 가능성은.

▲당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라는 배경으로 선거 치를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나같은 강력한 지지세력을 가진 사람이 당에 들어간 것으로 민주당이 큰 덕을 본 셈이다.

무슨 당이냐 보다는 개인적인 경쟁력과 지역을 위한 진실한 봉사마인드로 선거에 나서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한다.

반드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믿는다. 누구보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국회에 입성해 지역사회와 수원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거론되는 경쟁자는 김진표 전경제부총리와 한현규 전도정무부지사 등이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두 분 다 수원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다. 소위 '낙하산 인사'다. 당선되더라도 선거이후 수원에 남지 않고 중앙에 머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 분들이 총선에 나온 것은 수원 영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잦은 당적 변경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기초의회 의원에서 당적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 수원시의회 의장시절 한나라 소속이였지만 당에 아무런 당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당적이나 당의 어떤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냐.

당을 등에 업고 선거 치를 마음은 전혀 없다. 단지 선거가 엄연한 현실인만큼 최소한의 당적 보유자가 갖는 유리한 점이 있어 당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주위의 민주당 후보들과 연계해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은.

▲임 전지사 등 주위의 훌륭한 민주당 후보들과 연계해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다. 단지 임 전지사와는 오산과 영통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연계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번이나 했던 시의원, 그리고 시의장직을 그만두는 감회는.

▲마치 고향을 떠나는 것 같다. 김용서 시장과는 물론 동료 의원들과도 당을 떠나서 친분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마음은 늘 동료, 선배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든 안되든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의 발전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

안 건 번 호 : 2004자심20

언 론 사 : 주식회사 아세아일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6
대표이사 권 기 호

주 문 : (주)아세아일보가 발행한 아세아일보 2004년 2월 13일자 2면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아세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수원) 후보예정자인 특정인의 출마변을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예정자들을 비방하는 발언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언한 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지도를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

수원시의회 김종열의장 총선 출마 발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에서 수원을 대표하는 참신하고 깨끗한 일꾼으로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워 드릴 각오가 돼있습니다"

수원시의회 김종열 의장(53)이 제 17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

김의장은 12일 오전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수원시의원직과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의장 출마의 변에서 "그동안 수원 시의원들과 지역구인 영통 주민·수원시민들께서 보여주신 후의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시의원직과 의장직은 떠나지만 언제까지나 수원시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의장직 사퇴의 이유는?

▲ 그동안 4번에 걸쳐 기초의회의원직을 역임하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점도 많다. 특히 평의원이었을 때보다 의장직을 맡으면서 더욱 답답함을 느낄때가 많았다. 시의장은 시 발전을 위한 책임은 늘어난 반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게 현실이다. 작금의 지자체는 말뿐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고장 수원의 발전을 위해 더 확실하게 일하고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

-한현규 부지사에 밀려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데 사실인가?

▲ 누구한테 밀려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분은 그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나는 나대로 더 확실한 장점이 있다. 수원에서 한 부지사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지만 김종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밀려서 탈당하다니… 나는 단지 한나라당의 공천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탈당한것이며 나의 정치적 소신일 뿐이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데?

▲ 당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덕보면서 선거 치를 생각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나 때문에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웃음)

일단 나 자신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당선을 자신하는지?

▲ 물론이다. 일전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가 27%가 나왔으니 다른 후보들 다 합친것보다 높았다. 반드시 승리한다.

-상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쟁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한현구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이다. 소위 낙하산 인사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선거 이후에는 수원에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는 그 점을 지적한다. 그분들이 총선에 나오는 것은 수원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이다. 그점은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것으로 믿는다.

-임창열 전 도지사 등 주위의 민주당 후보들과 연대할 계획이라도?

▲ 물론이다. 임 전지사는 훌륭한 분이고 다만 오산과 영통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연계에 그칠것으로 본다. 다만 정책개발 등에 대해서는 전임 부총리이며 도지사였던 만큼 자문을 구할 생각이다.

-끝으로 4선 의원으로 시의장직을 그만 두는 감회는?

▲ 마치 고향을 떠나는 기분이다. 김용서 시장이 의장 시절 시의원으로 지역발전에 호흡을 맞췄던 기억이 난다. 시장은 물론 동료의원들과는 당적을 떠나서 친분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늘 동료, 선배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김종열은 수원에서 꼭 아름다운 승리를 일구어 낼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1

언 론 사 : 주식회사 월요문화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7 경인빌딩 3층
대표이사 차 원 기

주 문 :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4년 2월 22일자 5면 『민의 귀 닫고 야합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

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월요칼럼

민의 귀 닫고 야합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임 종 석

"한나라당-민주당 공조,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통과.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부실 청문회"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던 2004년의 첫 임시국회에서 지난 한 주간 벌어진 일들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추태를 보이는 것 같아 정치인으로서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이다.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의석수만 믿고 국민의 바람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보수도, 현 정권에 대안세력도 아닌 거대야당 한나라당에 대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여 여러 대안들이 공존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던 국민들은 마지막 기대조차 접어버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거대야당을 과시하며 장관들을 해임하더니 급기야는 3권 분립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고 '탈옥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정치인을 석방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 이라크 파병문제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여당의 책임을 문제 삼으면서 부패 정치인을 석방시키는 일에는 왜 그리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그러다보니 '정치적 탈옥'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지도부 사퇴론이 대두되고 원내총무와 주요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내분과 혼란이 증폭되면서 해체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주당이 주장하여 실시한 불법대선자금 규명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 설명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증거나 특별히 새로운 의혹도 없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력을 남발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다 10일~12일 열린 청문회 결과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과 근거 없는 폭로, 당리 당략적 정치공세로 부실청문회가 되고 말았고 국민의 정치 혐오만 가중시켰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미 밝혀진 150억 이외에 지난 대선에서 삼성으로부터 170억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문회를 통해 "차떼기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보려 했던 의도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고 현 정권에 대한 증거 없는 비난만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지지세력들 조차 점점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지금 4·15총선을 벼르고 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선진 대한민국 도약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정치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철저히 고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시점에서 모든 감각을 국민을 향해 열어도 부족할 시간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수(數)의 정치의 함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3

언 론 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주)조선일보가 발행한 조선일보 2004년 2월 13일자 12면 『경남 총선 '빅매치 대결' 관심 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조선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창원, 남해·하동, 통영·고성, 거제)와 관련해 각 선거구별 유력 후보예정자 2인의 경력과 최근 행적을 밝히면서 해당 선거가 그들만의 경쟁으로 치러지는 양 추측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경남 총선 '빅매치 대결' 관심 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경남지역 공천자가 속속 발표되면서 후보간 대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도내 16개 전 선거구를 석권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 지가 최대 관심이다.

특히 창원갑·을 선거구를 비롯, 남해·하동, 통영·고성 등 5~6개 선거구는 유력 후보간 '빅매치'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원갑=공민배(50) 전 창원시장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권경석(58) 전 경남부지사가 대항마로 나설 예정이어서 전직 부지사와 창원시장간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권 전부지사는 김혁규 전경남지사의 두터운 신임속에 5년3개월여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4년여 남겨놓고 "아름답게 물러나고 싶다"며 부지사직에서 용퇴(勇退)했다. 반면 공 전 시장은 민선 창원 시장을 두 차례 역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혁규 전 지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읍을 비롯, 북·대산면 등 농촌지역의 한나라당 정서도 이전만 못하지만 무시못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창원을=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주영(53) 의원에게 5000여표 차로 석패한 민주노동당 권영길(63) 대표가 설욕을 벼르고 있다.

창원을은 전체 유권자 16만여명 가운데 창원공단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5만~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이어서 비슷한 조건의 울산 북구와 더불어 민주 노동당 후보의 사상 원내 진입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남해·하동=한나라당 박희태(66)의원과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열린우리당 김두관(53) 전 행정자치부 장관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이다.

지난 13대 총선때 민중의 당 후보로 나서 남해중

20년 선배인 당시 민정당 박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김 전장관이 몸집을 불리고 16년만의 설욕에 나선다. 그러나 5선 고지등정에 나서는 박 의원 내공도 만만찮아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영·고성=최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정해주(62) 진주산업대총장에 맞서 한나라당에서는 30대의 김명주(37) 도의원이 나선다.

두 후보 모두 통영고,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정 총장이 김 도의원의 통영고교 23회 선배다. 특허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 총장의 경력도 화려하지만 창원지법판사 등을 역임한 김도의원의 경력도 만만찮아 동문 선·후배간 대결에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제=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는 YS의 차남 현철(45)씨가 1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 한나라당 김기춘(65) 의원과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3월 거제시 신현읍으로 이사한 현철씨는 거제미래 발전연구소를 설립, 지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 현철씨는 이번 총선을 통해 2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됐으며, 김전대통령의 후광이 미칠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의원은 3선 고지 등정에 나선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5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신문
대구시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대표이사 정 재 완

주 문 : (주)매일신문이 발행한 매일신문 2004년 2월 18일자 7면 『석패율제도와 대구시민』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특별기고

석패율제도와 대구시민

최 재 욱 전 환경부장관

17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전용 선거구」 외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결정을 했다. 그것은 바로 석패율(惜敗率)제도의 도입이다. 이 문제는 특히 4·15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판단을 요구당하고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아야 할 미묘한 함의를 갖고 있다. 석패율 제도는 소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례대표에도 또 입후보시켜(2중 등록) 그 후보자가 설사 소선거구 개표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은 독일 전 총리 콜이다. 그는 지역구 선거에서 연패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매번 구제됐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큰 정치」때문이었는지 그는 독일 통일을 이룬 총리가 됐다. 만년에 부패문제가 불거져 망신을 당했지만 큰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석패율 제도는 독일의 이 2중 등록 제도에 경쟁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일본이 지난 94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 어느 순위 명단에 지역구 출마자 1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구의 출마자 여러 명을 함께 적어 그중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 제도와 대구는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대구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을 떠나 전지(轉地)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곳이다. 시민들로서는 그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자는 의견, 자기가 무슨 권리로 대구시민을 시험하느냐는 의견 등등 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가운데 이 석패율제도가 등장했다. 이것이 법제화되어 조 대표가 민주당의 다른 대구출마자들과 함께 비례대표에 2중 등록된다면 조 대표는 지역구 1등 당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례대표 당선은 땅짚고 헤엄치기다. 비례대표 상위순위에 대구 출마자 그룹을 올려놓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조 대표의 권한이고 또 대구의 민주당 출마자 중 조 대표가 득표율이 가장 높을 것 또한 의심할 바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해서 조 대표가 17대 의원이 됐다치자.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인가. 제도 하나만 고치면 될 것을 대구시민은 그동안 공연한 정신력 낭비만 한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대구시민중에 조 대표의 뜻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조 대표의 대구출마를 살신성인의 숭고한 자세로 보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그의 기득권 포기는 감동할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석패율 제도의 도입으로 조 대표의 대구출마는 「이래도 당선, 저래도 당선」이라는 의미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 대표는 서울출마보다도 훨씬 안전한 금배지 수성(守城)길을 택한 셈이 되었다. 서울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밀리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조 대표는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험지역 탈출을 한 일면도 없지 않다.

조 대표로서는 이러한 지적이 퍽 억울할지도 모른다. 또 살신성인의 초심은 변함없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조대표에게 약간의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 자신의 진심을 펴보이지 못하게 하는 석패율 제도 자체를 채택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정당수뇌부의 전횡과 신진세력의 봉쇄라는 부작용도 갖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작년 7월 초 한나라당 최병렬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11월 14일 관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은 아무런 호응이 없었고, 드디어 12월 8일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열흘 후 조 대표가 12월 19일 대구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시사(示唆)도 없더니 갑자기 16·17일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그것도 4당합의로였다. 조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인가. 몰랐다면 소속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자신이 있는가. 이에 성공한다면 대구시민은 조 대표의 진심을 진정으로 알아줄 것이다.

둘째, 이 제도가 이럭저럭해서 실시된다면 조 대표는 원 지역구인 서울로 조용히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살신성인이나 지역주의 타파라는 뜻있는 국민들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소망스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선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한때나마 대구를 생각했던 조 대표가 대구시민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도리이기도 하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6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16
대표이사 이 관 승

주 문 : (주)전북중앙신문이 발행한 전북중앙신문 2004년 2월 20일자 8면 『남북정상회담 보고싶다』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제 언

남북정상회담 보고싶다

장 영 달 국회 국방위원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차 북핵 6자회담은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가 조성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가 실현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회담이다.

북한은 1차 회담 후 줄곧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자는 '동시행동원칙'을 주장해 왔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순차적 해결방식'을 주장해 왔다.

이렇게 서로 맞서 왔던 양측이 이번에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한 것만도 커다란 진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회담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회담이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맞서고 있는 데다, 최근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을 계기로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커넥션이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북핵 6자회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미북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회담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파키스탄과 유사한 방식의 핵 보유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높아지고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되,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한다는 것 등 북핵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initiative)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획기적

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반세기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이 역사적인 회담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게 되었으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올해로 벌써 4년째다.

이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제2차 정상회담을 할 때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그 시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기운은 무르익고 있다.

장관급회담이 기왕에 열렸고, 이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려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치권의 대선자금 비리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요즘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라는 가슴벅찬 소식을 듣고 싶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싶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29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2월 24일자 5면 『전통을 살리는 대규모 문화적 상상력』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전통을 살리는 대규모 문화적 상상력

김 현 종 민주당 도지부 부지부장

드라마 '대장금'이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기호가 넘치는 시대인 점을 생각하면 경이적인 기록인 셈이다. 드라마에 선보인 '감식초' 판매가 덩달아 늘고, 같은 이름의 쌀이 출시되는 등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했다. 짐짓 돌아보면 '허준'이란 드라마도 만만치 않은 시청률을 자랑했고,

'장희빈'이란 여자도 수차례 등장했지만 늘 화제가 된다. 모두 사극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선후기 한국화 문화유산 포진

치국(治國)하고자 입신(立身)의 뜻을 품고 수십 년 만에 귀향하는 이들도 공통점이 있다. 귀향을 알리는 서언(緖言)에는 '예전 마을 어귀에는 어머니 같은 정자나무가…'라던가 '집 앞 맑은 시내는…'같은 어귀가 수식처럼 붙어있다. 고향이 신작로를 내느라 그들의 아름다운 추억 속 정자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탓하는 듯해 조금은 씁쓸하다. 한때 필자도 그러했음을 숨길 수 없으니 긴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다. 다만 과거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고 있는 영동(楹棟)들이 좀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 사극처럼 우리주변의 유구한 문화적 전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연치 않게 천년 전 처음 전라도를 구분하고 전주를 중심도시로 정한 고려 현종이 필자의 이름과 같은 덕분에 일찍부터 전주에 산재한 전통의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왔다. 서울과 평양을 제외하고 1천년에 걸쳐 권역의 중심도시로 기능한 전주. 계층적으로는 양반문화와 서민문화, 형태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을 관통하는 유산이 포진해 있다. 이점에서 전주는 조선후기 한국화 문화유산이 치중된 광주, 조선조 양반문화 중심의 안동과 비교해 탁월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안동 유교문화권 사업에는 10여개 대형 국책사업에 4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도민의 세금으로 소리축제를, 전주시민의 혈세로 문화이벤트를 벌이며 자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주권을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문화 유산도시로 재구축하고 인정받기 위해 신기원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국내외 집중적 홍보, 도민의 참여의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구로서 '전주 문화도시성장촉진 특별법'이 절실한 것이다. 이미 제주국제자유무역도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이 시행중이며, 현 정부 들어서 부산국제항만물류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교동, 전동, 풍남동 일대의 구도심권 30만평을 핵심지역으로 한 현 도청부지와 재래시장, 인접사찰이 포함된 1백만 평에서 이 지역 전통문화 공간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문화-주거 공간의 구축이 바로 '전주특별법'이다.

문화도시성장촉진 특별법 필요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전통문화를 복원,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올망졸망한 단위 사업이 아니라 일거에 전주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문화적 상상력과 이를 강력히 추진할 법제도가 선행되야 한다. 전주권 전통문화도시 성장촉진 특별법은 전주의 관광인프라 장점 극대화, 중복투자와 시멘트개발 최소화, 이를 매개로 한 민간의 대대적 참여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대형 공장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북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현종 부지부장(43)은 해성고, 전주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기자, 청와대 정무1국장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초청연구원활동과 집필을 위해 유럽 32개국을 순방한 뒤 지난 2001년부터 고향인 전주에서 지역경제부흥을 위해 '이마트지역법 인화운동'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32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콘솔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74-14
대표이사 손 대 근

주 문 : (주)한국콘솔이 발행한 주간저널 2004년 2월 20일자 18~20면 『새희망의 정치를 실

천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주간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밀양·창녕)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새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전략)

총선관련 취재를 위해 예비후보자를 물색하던 중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정용해 변호사가 한나라당 공천에 근접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취재에 나섰다.

정 변호사의 선거준비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활기에 차 있었고, 바쁜 가운데서도 취재진을 따뜻하게 맞아 주던 정 변호사는 시종일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한나라당 개혁공천의 적임자

"60여년의 역사를 통해 고착화된 패거리 정치,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개혁의 새바람을 몰고 와야 진정한 민주정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용해 변호사는 1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에 애정을 가지고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인권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지난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남지역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도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노쇠정당,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 두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다며 이제는 정치에 대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실천자가 되기 위하여 한나라당 밀양시창녕군 지역구에 공천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물이 한나라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힘주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한나라정치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정치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부패방지대책위원회 등 도정에 참여하였으며, 밀양대학교 겸임교수, 밀양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실에도 관심을 가지고 늘 비판에 앞서 대안을 준비하는 자세로 정치참여의 길을 모색해 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것, 내가 아는 한의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한 언제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라는 에이브람 링컨의 말처럼 정 변호사는 "정직과 끈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새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우선의 합리적 정치, 지방을 우선시하는 정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정치적 포부를 밝혔다.

정치개혁은 상향식 생활정치로부터

한국 근대정치는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그리고 최근 참여정부를 거쳐오면서 겉으로는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패와 권위주의라는 내부적 결함은 아직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의 정치적 성향은 발전한 것에 반해 후진적 정치구조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서민들과 동떨어진 양심 없고 부도덕한 정치꾼들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역민들과 함께 숨쉬며 그

들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살아있는 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과 동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국민우선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의 참여에 의해 형성된 여론을 정책에 잘 반영시켜 지역민들에 의한 상시 심판을 통해 부패정치도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그는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묻는 취재진에게 평소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구상해 왔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현재의 밀양, 창녕은 농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FTA와 쌀시장 개방 등의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조류독감 등의 여파로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밀양, 창녕에 대해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및 국도 24호선 확장 개통, 고속철도의 밀양정차로 밀양, 창녕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특화된 영농단지 조성에 힘쓰면 밀양, 창녕은 어느 도시보다 농업, 공업,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경남지역정책 공약을 만들며 주장했던 경남문화예술대학교 유치가 이회창 후보의 낙선으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적극적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의 상권을 보호하고 밀양연극촌(부북), 영화촌(하남), 가인예술촌(산내), 미리벌민속박물관(초동)과 연계하여 밀양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영남물류의 중심도시로 변모

경부고속철도 및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24호선 확장 및 능동터널 개통 등으로 향후 밀양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40분 이내의 거리에 부산, 울산, 대구, 마산·창원 등의 대도시를 두게 됨으로써 영남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용해 변호사는 밀양에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울산-마·창, 대구-부산 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민자유치를 통한 20만평 규모의 영남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국가주도로 5만평 규모의 영남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가 또 한가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업생산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그는 밀양, 창녕을 농업과 공업생산이 조화를 이룬 생산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사포지방산업단지를 종남산터널을 통해 남산리, 조음리, 남전리 일대까지 확대, 4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계성·영산·남지 준공업지역, 성산면 후천리, 대지면 본초리, 대지면 효정리, 계성면 사리 기업체유도지역에 전자·기계 부품생산공장 중심의 기업 유치에 심혈 기울여 농업생산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규인력의 고용창출로 현재의 청년실업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영남작물시험장과 연계해 첨단농법을 도입하고, 지역상품을 브랜드화 해 농업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쌀시장 개방에 대비, 쌀전업농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중·대규모 농장을 조성하고 유기농법과 기능성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창녕 화왕산, 우포늪, 부곡온천, 밀양 가지산, 얼음골, 표충사를 연결하여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휴양림, 펜션 등 자연친화적 숙박시설의 확충, 민속마을 복원,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등을 통하여 휴양 및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밀양, 창녕을 영남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복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盡人事待天命

정 변호사는 밀양, 창녕이 농업과 공업,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민들과 하나되어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좌우명인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한다.

정치에 첫발을 디딘 한나라당이 미래지향적인 개혁정당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나라당을 통하여 정치에 입문하고 싶다는 그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번 공천과정에서 반영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로 진출하게 되면 과거의 구태의 연한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실천하며, 언제나 지역민들 곁에서 심판받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고 싶어하는 정용해 변호사.

주위에서 '용하다 용해 정용해'라며 그를 응원하는 밀양·창녕주민들의 기대에 진정 부응하는 정치인이 될런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35

언 론 사 : 주식회사 펜그리고자유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주 문 :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 현대 2004년 2월 29일자 54, 55면 『안산의 링컨-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후보예정자의 경력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찬사일변도의 내용('안산의 링컨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미주 한인총대학생연합회 회장으로 민주화 운동 선봉', '국제적 감각과 전문경영능력의 소유자',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 '안산발전을 견인할 최적의 인물' 등)을 양면에 걸쳐 5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안산의 링컨-노영철 한국의 희망을 일군다

노 영 철 박사 현안산시 중소기업발전연구소 소장

(2004년 2월 29일자 54면)

노영철 박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기업으로서 개혁을 잘했다는 평을 얻었다. 사업본부장 시절 공기업 구조조정 1위 달성으로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백억여원의 만성적자에 헤매던 공단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1천억여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 배후에는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 노영철(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 사장 역임) 등 개혁적인 인물등이 경영일선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듭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노영철 박사는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해양관광산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소년이 독학으로 중·고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학생·시민운동 주역으로 성장해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 사장을 역임한 노영철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진 그는 만성 적자였던 국영회사를 흑자운영으로 되돌렸으며 국내 최초의 경정 사업을 맡아 모터보트 경주장과 수상장비, 운영 시스템과 매뉴얼 등을 100% 국산화하여 개장에 성공함으로써 21세기 한국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67년 서울 우이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다. 생활고 때문이었다.

신문을 팔고 배달하면서 말 그대로 '주경야독'으로 공부한 그는 19세 때 미국 LA로 건너가 일하면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여 8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가며 공부해야했기 때문에 공장에서부터 접시닦이까지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의 대학 졸업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의 학구열은 계속됐다. 84년 로욜라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95년에는 미국 퍼시픽 웨스턴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졸업, 경영학 박사가 됐다. 이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E.R.P.(전사적 기업관리) 시스템의 발전 전개' 과정이 한글로 번역되어 국내 E.R.P.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국내에 온 노 박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지도사로 E.R.P. 시스템의 교육과 구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수천개의 중소기업을 컨설팅하여 한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놓은 바 있다.

21세기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

이제 노 박사는 경정본부 사장의 경험을 살려 국내에 전무했던 해양 관광산업(모터보트 경주장 및 수상장비, 요트 등)의 발전과 해외 수출 지원에 여념이 없다.

아버지를 여의고 11세 때부터 가장이 되어 온갖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링컨의 일대기와 노 박사의 살아온 길은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다.

미주 한인총대학생연합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 선봉 (2002년 2월 29일자 54면)

그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학생이었을 때 한국에서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LA 한인학생회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미주 학생운동의 선두주자였다.

LA 한인총학생회장과 재미 한인대학생연합회장을 맡아 미주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그는 각종 성명서와 함께 실권자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아울러 한국의 정신적·정치적 지도자는 김대중 선생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는 등 민주화를 염원하는 열정을 조직적인 실천에 옮겼다.

LA 마리포사 거리에서 실제로 총격 테러까지 당할 정도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더욱 거세게 민주화운동을 밀고 나갔다. 그는 학생회장으로 뿐만 아니라 미주 민주청년학생연합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반민주적 군사정부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갔다. 이와 연계해 그는 당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던 김대중 선생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복권운동을 진행하는 등 미주 학생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1982년 12월23일, 김대중 선생 내외분께서 미국에 도착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까 노심초사하던 우리 동지들은 다시 살아서 이분을 뵐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운으로 느껴졌다. 김대중 선생이 미국에 도착해 민주화운동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허탈해 있던 우리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1984년 봄, 나는 LA를 방문한 김대중 선생을 성인이 된 모습으로 21년 만에 다시 뵙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졌다. 다른 한인회 간부 두 분과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김 선생은 미국 동포들의 독립운동사를 들려주시며 독재정권의 압제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어릴 적에 보았던 모습들이 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늘 용기를 주었던 분을 미국에서 다시 뵐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더욱더 탄압 정치가 심해졌고, 당시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던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서부

지회가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함으로써 나도 인권문제연구소에 참여해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1986년, 미 연방상원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존 케리 의원이 LA에 있던 인권문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숨은 일화를 소개해 볼까 한다. 존 케리 의원은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함께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으로 한국의 민주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인데다 미혼의 젊은 의원으로 미국 사교계에서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잠시 통역을 맡겼던 여자 청년회원인 고모양에게 집요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양은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상의해 왔다. 우리는 내심 두 사람이 잘 사귀어 결혼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일종의 신념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국 존 케리 의원은 속된 말로 딱지만 맞고 말았다.

만약 그때 존 케리 상원의원이 한국인인 고모양과 결혼을 했더라도 지금처럼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 가끔씩 생각해 본다.

안산시 21세기 해양관광 사업을 연다.

(2004년 2월 29일자 55면)

모터보트 경주장 유치로 관광도시화 반월·시화공단, 세계 해양산업 중심지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마이카 시대' 다음에는 반드시 '마이요트 시대'가 도래한다.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고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수상스포츠 기구인 수상오토바이나 제트스키, 모터보트나 요트 등에 대한 국내수요도 늘어가고 있으며 수상스포츠가 활성화된 미주나 유럽국가 등에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터보트나 요트는 한 대당 5억 달러짜리가 있을 정도로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대형 선박부문에서는 수주율 1위를 자랑하는 선박강국이지만 소형선박이나 모터보트는 국산엔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부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0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 사장에 취임했던 노영철 사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터보트 경주장과 수상장비, 경주운영장비 및 매뉴얼, 경주복과 헬멧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하여 2002년 개장함으로써 일약 해양스포츠와 해양산업의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2002년 국산 모터보트를 가지고 독일에서 열린 세계모터보트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하여 8위를 기록, 유럽선수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노영철 박사는 모터보트 경주장과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과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최대 해양관광도시인 해남성(海南省)에서 모터보트 경주장과 해양레저타운(해양박람관, 선박박물관, 물 주제 박람회장, 수상호텔) 허가를 받은 삼화수상유한공사와 약 5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맺고 한국의 해양스포츠 문화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노박사는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터보트 경주장 및 해양레저타운 사업에도 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월·시화공단이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주나 유럽에서는 모터보트나 요트를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대씩 보유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자동차산업 이후 21세기 우리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안산시에 경정장(모터보트 경주장)을 유치했을 경우, 향후 10여 년 간 약 8조원의 세수와 이익금이 생기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반월·시화공단이 해양산업(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수상장비)의 중심지로 발전, 약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5백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노영철박사, 그는 누구인가

(2004년 2월 29일자 55면)

▶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실물경제통

-경영학 박사와 경영지도사로 미국에서 '도시 중소기업발전 공로상' 수상.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도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발전 전문가.

-미국에서 전공한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구조조정의 전문가로서 'IMF 탈출해법의 교과서'로 인정받은 E.R.P.(전사적기업관리) 시스템 국

내도입

-IMF 상황에서 3백억원의 만성적자 공기업인 체육진흥공단을 1천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영의 귀재'로 평가받은 바 있음.

▶국제적 감각과 전문경영 능력의 소유자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영학과 졸업. 로욜라 대학원 수료/퍼시픽 웨스턴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

-통역이 필요 없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구사 능력 보유.

-중국 국립 연변대 객원교수로서 중국 문화 및 경제 전문가.

-한서대 사회체육원 교수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

-오랜 학생운동(미국 민주청년학생연합회 상임위원장/캘리포니아 주립대 한인학생회장/재미 한인대학생총연합회 회장).

-오랜 민주화투쟁 경력 보유(미 LA지구연청회장/한국인권문제연구소 중앙이사/한미청년회의소 회장/FKN-TV 방송국 운영위원).

▶안산발전을 견인할 최적의 인물

1. 시화호 해결의 획기적 비전 제시

-안산 시화호를 생태공원화하고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경정사업을 접목, 안산시화호를 세계적인 생태환경보전지구 및 수상관광지구로 발전시킬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음. 세계모터보트대회도 목하 유치 추진 중에 있음.

2. 2백여 개의 경정 관련, 파생산업 시설 유치

-2백여 개의 경정관련 회사가 입주할 경우, 최소 1만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됨.

3. 중간층과 서민을 폭넓게 아우르는 친화력의 소유자

-검정고시로 시작, 미국 경영학 박사에 이르는 인생역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의 애환과 중산층의 불만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실천력의 소유자.

4. 만능 스포츠인-태권도 5단 합기도 8단으로 국민생활체육 전국합기도 연합회 회장을 맡아 생활체육 활성화와 합기도의 세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큰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안산시의 위상강화

-모터보트 대회장 유치로 (KID자료에 의하면) 10년간에 걸쳐 8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및 수익발생 예상.

-반월 및 시화공단의 3D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수상스키, 제트스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산업의 발전과 관련사업의 증진으로 약 5백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진 효과 창출.

안 건 번 호 : 2004자심37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2월 26일자 5면 『전북은 개혁의 텃밭』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

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전북은 개혁의 텃밭

장 세 환 전북중흥포럼 상임대표

"여전히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당선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기득권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다."

먼저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해야겠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정치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국민들의 어깨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민단체들이 정치의 감시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자생의지나 능력을 상실한 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민적 개혁요구 외면하는 정치권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노력은 본격적인 시민시대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개혁대상과 당선대상의 선정을 통해 정치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국민적 개혁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이다. 여전히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당선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기득권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만 보더라도 기존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 확인된다.

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총무협상까지 미뤄진 선거법 협상에서 민주당이 의석 하나를 놓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렬됐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선거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권선거 규탄대회가 그 증거다. 특정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지역간 분열을 유도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민족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지금도 전북을 자신들의 텃밭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초조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지난 노 대통령의 전주방문은 전국시장군수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알리는 선포식을 갖는 자리였다. 주지하다시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존재가치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전주방문은 국정수행 차원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관권선거라고 우긴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비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며 부산으로 몰려가는 한나라당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대부분 민주당 총선입지자들이 동원한 사람들이었다. 분위기도 진지하지 못했고 말도 안되는 지루한 연설이 계속되자 행사도 끝나기 전에 청중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민심 바로 읽어야 올바른 정치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의 민심은 확

연하게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비개혁적인 자신들의 행태를 합리화 시키려고 도민들을 지역정서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은 개혁의 텃밭이며 진원지가 될 것이다.

오는 17대 총선은 시민의 시대를 여는 개막식이 될 것이며 부패정치와 지역주의가 청산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 장세환 상임대표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일보 정치부장과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고 현재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39

언 론 사 : 주식회사 스포츠투데이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 명지빌딩 15층
대표이사 조 희 준

주 문 : (주)스포츠투데이가 발행한 스포츠투데이 2004년 2월 28일자 26면 『노웅래 "카메라 출동 GO!"』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스포츠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마포갑)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색 경력과 정치적 포부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노웅래 "카메라출동 GO!"

"노웅래의 카메라출동은 계속된다!"

MBC 9시 뉴스 카메라출동 팀장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노웅래 후보(47)가 '카메라'를 놓지 않기로 했다. 정치에 뛰어들었어도 지역구인 서울 마포지역의 아픈 곳, 어두운 곳, 부패한 곳을 찾아다니는 카메라 출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노씨는 최근 경선을 통해 마포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역을 누비고 있다. 노씨는 27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웅짱 TV'라는 자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은 선거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의 애환을 담는 '마포의 인터넷 방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후보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부친(노승환 전 의원)을 비롯해 4대째 마포에서 살고 있다"면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웅짱 TV를 통해 아버님의 마포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보는 "웅짱 TV가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마포 주민들이 스스로 찍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웅짱 TV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카메라를 들고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생각이다.

그러나 노후보는 카메라를 들고 '마포판' 카메라 출동을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만큼 이제 민생을 살피는 게 정치의 핵심"이라면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늘 사회의 아픈 곳을 찾아 알리려 했던 '카메라 출동'의 정신을 이제 정치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생을 살피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건의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41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3월 3일자 5면 『전주·전북 중심시대 준비해야』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전주·전북 중심시대 준비해야

장 영 달 우리당 국회의원(전주완산)

"중국, 일본과의 경쟁속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입지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어내다."

21세기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환황해권이 중요한 물류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의 관문인 우리 전북·전주는 환황해 신산업·물류시대의 중심지로써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역사적 기회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전주·전북 중심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환황해개발 핵심 2차산업 발굴

첫째, 환황해 신산업·물류시대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2차 산업을 발굴해내는 동시에 중국, 일본과의 경쟁 속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입지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신규 항공산업 유치와 자동차 기계산업 등 새로운 경제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학교, 그리고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적인 지역경제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사업의 전북권 유치, 새만금방조제 국제관광거점화, 전주지역 기계산업 테크노밸리 조성 등 중요사업의 경우 추진단계에서부터 산·학·연·관의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둘째, 전북 경제는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업개방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 통과 이후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이 대폭 지원될 전망이다. 이 예산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경쟁력을 가늠할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의 교류가 대폭 증가될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망 정비,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그리고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소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북에 산재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21세기의 상황을 놓고 '세방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유산을 찾아서 개발하는 '지방화'와 이러한 전통산업을 '세계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곧 '세방화'라고 할 것이다. 세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지원, 하향식 개발은 더 이상 지역 발전모델로 작동하지 못한다. 전주·전북 중심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 중심형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단한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고, 국민대 행정학과,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 (행정학 전공)
-제14, 15대, 16대 국회의원
-1998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총무
-2001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3 국민참여통합신당 주비위 조직위원장
-2003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 조직위원장
-現 국회 국방위원장
-現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 이사장

안 건 번 호 : 2004자심43

언 론 사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5층
대표이사 오 연 호

주 문 : (주)오마이뉴스가 발행한 오마이뉴스 2004년 2월 19일~25일자 15면 『김옥두에 도전장낸 'DJ의 입'』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오마이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전남 영암)와 관련해 특

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정치적 포부를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김옥두에 도전장 낸 'DJ의 입'

지난 한해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을 스스로 삼켜왔던 박준영 청와대 전 공보수석이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정치권에 몸을 던졌다. 상대는 동교동계 가신그룹의 핵심멤버이자 3선 의원인 김옥두 민주당의원(전남 영암·장흥). DJ와 고락을 같이해 온 두 DJ의 인물들이 공교롭게 총선에서 일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4선 고지를 노리고 있는 김옥두의원은 민주당의 호남중진이다. 김 의원은 2004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천의원으로 발표돼, 4선가도에 가장 큰 암초를 만난 상태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인 이 지역에서 여느 때 보다 물갈이 여론이 높은 것도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차분한 어조로 총선에 나선 심정을 피력했다. 또 인터뷰 내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박 전 수석은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큰 실책"이라며 "다른 것은 바꿔갈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번 치유하는데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 박 전 수석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전쟁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며 "미국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정부의 파병 방침에 강한 반감을 나타났다.

"민주당 이성적 시각 잃지 말아야"

박 전 수석은 "호남 사람들이 개발독재에 저항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가 잘 성찰하고 앞장서 가야 한다"고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았다.

박 전 수석은 이른바 한-민 공조에 대해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한나라당적 사람들"이라며 "(열린우리당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성적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어쩌면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그 말처럼 어떤 치장도 없이 담담하게 심경을 드러냈다. 인터뷰는 2월 12일 전남 영암의 박 전 수석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박준영 전 공보수석과의 일문 일답.

-총선에 나선 각오를 말해달라.

"어쩌면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인지 모른다. 입당을 제의 받았을 때 망설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출간한 '평화의 길'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북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함으로서 미국의 대북 강경 길들이기에 따라가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 바 크다.

2000년 이뤄진 남북 두 정상의 회담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무엇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 또 평양회담은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말하고 싶었다."

"평양 회담,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

-국민의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가장 보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2박3일이다. 민족이 언젠가 하나로 되자면 북한이 어떤 상대이든지 신뢰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고 민족 공동번영의 길에 나서자고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한 것은 DJ를 모시는 기간뿐 아니라 내 생애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대변인 위치에서 다 말할 수 없던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을 텐데.

"과거정권에서 비롯된 인사편중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을 영남차별로 오해한 것이 가장 어려웠다. 초기 권력기관의 40~50%를 영남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구 비례에 비춰서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IMF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 연령 이상을 명퇴 시킬 때 언론에서는 '명퇴자 중 50%가 영남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고위직에 영남이 많다보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후 사정없이 '명퇴자 중 50%가 영남'이라고 만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DJ정권이래 장·차관 어느 부서도 한 지역에 배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다 영남사람으로 임명했다. 만약 국민의 정부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법 "가장 큰 실책"

-참여정부 1년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년 10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다. 말은 많지만 참여정부 들어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한 성과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약 정도를 들 수 있다.

우선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큰 실책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강경정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국민들이 불안하다보니 소비를 안 해 다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DJ때보다 외국인이나 국내 기업의 투자가 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니 지난 한해 30대 이하에서 20여만명이 일자리 잃었다고 한다. 젊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다른 것은 바꿔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이나 경제문제는 한번 치유하려면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민주당 분당은 어떻게 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분당의 직접적 지휘자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정강정책이나 국정운영에서의 차이로 분당됐다면 나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념은 같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명분이 없는 것이다."

-지난 한해 많은 정치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호남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만큼 불신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변화의 회오리 속에 민주당은 어떻게 길을 잡아가야 하나.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단순히 DJ때문이 아니다. 민주당은 자유당 정권이래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와 개발 독재에 맞서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만약 DJ가 독재적 발상을 가지고 있거나 부패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호남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도 그런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60~70년대 개발독재 맞서서 국민자유가 요구됐다면, 지금 이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를 잘 성찰하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

"민주 경계 상대는 한나라당적 사람들"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과의 공조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는 공조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같이 하는 것일 뿐이다. 공조는 민주당을 폄하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 자민련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응징하고 경계해야 할 상대는 한나라당적 사람들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감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성적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김옥두 의원은 DJ 가신 그룹중 한사람이다. DJ와 고락을 같이 해 온 두 사람이 함께 맞서게 됐는데.

"평소 존경해 온 분이고. 온갖 고난과 탄압을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민주화와 DJ를 위해 일해 오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호남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DJ를 모셨던 사람들끼리 경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할, 고향에 대한 열정에 대한 차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이라크 파병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UN은 국제사회에 이유가 있을 때 파병을 해 왔다. 우리가 동티모르 재건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UN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그 대상이 아니다. 전쟁목표가 대량 살상무기였지만 결국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44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2월 18일, 23일, 26일자 각 14면 『무소속 옥중출마 불사하겠다』, 『총선연대 낙천대상 신중기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 당 공천은 무겁게 받아들여』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선연대의 낙천대상 명단에 오른 후보예정자중 특정 후보예정자들만의 공천 부적격 사유에 대한 해명을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인터뷰

"무소속 옥중출마 불사하겠다"

이 훈 평 의원(민주당)

(2004년 2월 18일자 14면)

지난 9일 새천년 민주당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순형 대표외 소속 국회의원 59인의 명의로 이훈평, 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특히 이훈평 의원과 관련,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건과 형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제3자 뇌물수수'라는 명목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구별되는 점을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언제나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으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혀왔다.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국정감사 증인채택 건과 형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제3자 뇌물수수'라는 명목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잘못이다"

-이 의원은 구속당한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지난 2000년 국정감사와 관련, 본인이나 민주당소속 어떤 의원도 당시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에 대해 국감증인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윤규사장을 포함 어떤 현대그룹 간부들로부터도 정 회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정에서 모든 결백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

-국민들은 이사건의 개요를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사건인가.

▲지난 2000년 당시 7,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사 사장인 대학후배로부터 현대건설의 협력사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다가 큰 적자를 보았는데 다시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현대건설 측에서 응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서 선처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래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W사가 응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했을 뿐이다. 물론 W사가 그 후에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또 D사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현대건설 김 사장에게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W사나 D사에 대해 건설공사하도급을 받게 해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정몽헌 회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힘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제외는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증인채택을 요청한 해당 의원의 양해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국회의장도 못하는 일이다. 힘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회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설사 신청이 와서 빼더라도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못 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본인 요청이 있어야되고, 해당의원의 요청도 있어야 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활동한 것은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몽헌의 정자도 나온적이 없다. 그리고 20명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선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하는 제 시간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역의원에게 '제3자 뇌물공여'라는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떤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의원은 무엇 때문에 하도급 청탁을 했는가.

▲단지 민원해소 차원이다. 민원인이 오면 전화 정도는 다 걸어준다. 어느 의원들이고 물어보라. 무슨 얘기든지 오면 민원인들 와서 부탁하면 최소한도 전화는 걸어주고 또 가서 확인하라는 얘기정도는 해주는 것이다. 만약에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도 알아봐 주지도 않더라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단지 민원이라고 강조하지만 혹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압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는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직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화 한 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민간기업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의원은 옥중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금도 변함없는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회의원을 출마하지 않겠다, 또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진 적이 없다. 나를 국회에 보내준 관악구민들의 자존심에 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지금 엄청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불출마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이라도 무조건 옥중출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 등으로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에 포함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16대 국회 기간동안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03년도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수상, 출석률 98.5%와 법안 대표 발의 11건 등(참여연대의 자료)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의정활동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이벤트성 선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총선시민연대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근거로 낙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한 것을 선정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당시 11명의 출석의원 중 9명이 찬성했다. 그런데 그 중 본 의원과 김만제 의원,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는 낙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낙천 사유를 의원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총선시민연대의 판단기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연대는 이 의원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것 말고도 음주운전 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므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처벌에 응해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신선한 충격'이라는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반성문도 게재했으며, 교육도 받았다. 이런 대응 자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하나만으로 낙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총선연대 낙천대상 신중 기하라"

박계동 전 의원

(2004년 2월 23일자 14면)

박계동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 첫마디에서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두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오욕감'이라고 표시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는 최열 박원순 정성헌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저명인사가 주도가 되어 '박계동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했는가 하면, 함세웅 송기인 김병상 신부 등은 청와대에 진정의 뜻을 전달했었다. 또 송월주, 진관 스님, 법조계의 이돈명 변호사 등도 당시 박 전 의원 사면복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만큼 그는 개혁성 면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연대 낙천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른 것은 의외라고 할만하다는 것이 박 전의원 주변의 평가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참여개혁양천시민모임 김

영진 대표도 박 전 의원이 낙천자 명단에 올라간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무심히 들어 넘기다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속에 박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순간 멍해졌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이라니... 그는 민주화운동의 선봉장이요,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의 주역이며 무엇보다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해 정치부패 척결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던 한 시대의 영웅이다."

실제 김 대표의 지적처럼 박 전 의원은 92년 총선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저지른 관권선거 비리를 한준수 당시 충남 연기군수가 박 의원을 통해 폭로했다. 그런데 그가 왜 낙천자 명단에 오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박 전 의원으로부터 들어본다.

"96년 선거법 위반 판결은 지역주의 극복하려는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낙천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당시의 심정은 어떠했는지요.

▲지난 오후 3시 차 안에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 2차 명단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천낙선 대상에 제가 올라있었으며, '총선연대에서는 2차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예상후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거친 엄격한 실사의 결과라고 밝혔다'는 말로 뉴스의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 몸이 달아오르고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오욕감이 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여기저기서 휴대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선거준비 사무실과 지역에서 저를 아끼고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총선연대는 박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의 시국강연회를 이유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저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내용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저에게 반론의 기회라도 주어졌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시국강연회를 이유로한 저에 대한 유죄판결은 누가 보아도 정치보복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판결을 정치보복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먼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제정구 이부영 노무현 김정길 이철 유인태 원혜영 그리고 저 박계동 등 소위 개혁세력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던 꼬마민주당 출신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은퇴 번복발언과 명분없는 분당으로 인해 명분을 따르느냐 아니면 실리를 구할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천도교회관에서의 '명분없는 재선보다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작고한 故 제정구 의원의 발언은 지역주의 정치에 볼모되어 끌려 다니기를 거부한 우리의 숭고한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정부가 우리를 곱게 볼리 만무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국강연회에서 한 말이 문제가 돼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시국강연회는 어떻게 열게 된 것입니까.

▲제가 95년 10월19일 노태우비자금사건을 국회에서 폭로하고 이어서 이 사건의 관련자 처벌과 진상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4000억 비자금 조성 내역을 4대 재벌기업을 비롯한 30여 대기업 총수들을 단 2일만에 액수할당식 짜집기 수사를 통해 억지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4000억의 조성내역이 율곡비리, 고속철사업, 원전발주비리, 석유비축기지공사사업 등 소위 5·6공 비리라고 불리는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비리로 조성된 검은돈으로 확신했던 저희 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자는 것이 당시 전국적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시국강연회의 파괴력을 두려워해 선거법을 이유로 사실상 원천저지에 나섰던 것입니

다. 물론 제가 주연사로서 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처벌은 내가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처벌은 박계동이 받은 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의 공소사실 1번에 적시된 노무현대통령의 종로집회 발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6년 2월10일, 종로2가 제일은행 본점(당시 노무현 지구당사 옆)에서 개최된 시국강연회에서 "이 종로에서부터 노무현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서울 시민, 희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 김대중씨의 정체 그것도 분열의 정치입니다. 김종필 씨 그는 부패의 정치입니다. 민주당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3김의 정당은 모두 쭉정이 정당입니다. 이번 4.11총선에서 한번 해 치웁시다"라고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핵심적 사유가 되어 당시 시국강연회의 주체였던 '희망물결본부'의 꼬마민주당 책임자였던 저를 상대로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발언은 현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처벌은 박계동이 받은 셈이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저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찬욱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시는 분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분열주의자"로 비난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케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이 공소장의 자료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은 전 비서관이었던 성연찬씨를 통해 100만원권 수표를 보내 벌금을 대신 내 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 끝으로 총선연대에 전할 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하시죠.

▲저 박계동은 총선연대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재판관은 죄를 선고함에 있어 아픈 마음으로 억울한 피해가 없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한 정치인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릴 권한을 도대체 누가 부여했습니까?

저는 제1회 대한민국 국민상을 수상했고, 전국기자 1380명이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독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박계동을 뽑았고, 뉴스메이커에서는 '95년의 좋은 한국인'으로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진정 저 박계동이 오늘의 정치의 무대에서 떠나야 마땅할 사람입니까?

올바른 역사인식은 있는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 / 당 공천은 무겁게 받아들여"

송 영 길 의원(열린우리당)

(2004년 2월 26일자 14면)

'송영길 구하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쾌거를 올렸다.

열린 우리당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 명단에 올랐던 송 의원에 대한 후보공천을 결정한 것이다.

사실 송 의원의 구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송 의원이 '인천총선시민연대'와 '총선연대'로부터 잇달아 낙천대상자 '경고명단'과 '낙천대상자1차 명단'에 오를 때부터 지역주민들과 네티즌,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일제히 팔을 걷고 '송영길 구하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김병상 신부, 김승묵 전 인천변호사회 회장, 최원식

인하대 교수, 양재덕 실업극복 인천본부장 등 인천지역의 명망 있는 진보인사들은 인천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경고명단' 발표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의도된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내에서도 이호웅 시 지부장과 최용규, 안영근 의원 등이 '우리가 칭찬하는 송영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송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많은 반성으로 기존 선배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송 의원은 '이라크 파병안'에 반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라크를 방문하는 등 개혁과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젊고 신선한 정치인으로 낙천대상자 경고명단에 포함된 것은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송 의원 후원회 자리를 통해 신기남 중앙위원은 "'우리에게 송영길이 필요하다'는 이 한마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임종석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뽑은 '우수의원'을 낙천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송 의원은 숨은 1순위 공로자로 시민단체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선정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당은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여 송 의원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히게 된 것이다.

송 의원은 당 구제 방침에 대해 "그동안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했다"며 "당 공천을 무겁게 받아들여 당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그가 낙천자 명단에 오른 이유와 당에 의해 구제된 정황을 그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이번에 당에서 내린 구제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됐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송 의원이 낙천자로 선정된 근거 중에는 지난 99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정치 초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동문회차원에서 주는 격려금이라 생각하고, 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 선거에 패하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면서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낙선한 선거였다. 또한 옷로비사건 등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돼 당선의 가능성도 크지 않았기에 로비 대상이 될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단지, 연세대 상대 출신의 정치인이 나 혼자뿐이었고, 송자 총장을 비롯한 연세대 상대 동문들이 같은 연세대 상대 출신인 김우중 회장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해 받은 후원금으로, 최근 벌어진 특혜를 바라는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당시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반성했으며,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재판결과에 승복했다.

-지난 99년 금품제공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것도 이번에 선정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9년 말 송년회 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느라 고생중인 한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1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10여개의 조기축구회에 축구공 1개씩을 준 사실이 있다.

당시 정치초년생으로 지역구민을 만나 소신과 공약을 전달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 보니 선거법위반행위를 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개혁과정에서 논의됐듯이 당시의 선거법 자체는 너무 불평등해, 정치인들의 초보적인 홍보활동도 금지 된 상태였다.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철학과 기준에 기초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는 선정위원들 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해 표결까지 거쳤다는 얘길 총선연대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선정위원 100명 중 찬성이 53명, 반대가 47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선정위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근소한 차이로 낙천·낙선 대상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겠다.

-선정기준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번에 당에서 구제키로 결정했으나 낙천·낙선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

▲각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의 선정이 철학과 기준에 따른 발표가 아니라 형평성과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박빙의 수도권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차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상대 후보에 의해서건, 다른 언론에 의해서건 밝혀질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국회의원이 되기 전일이고, 패배한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죄 값을 모두 치렀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나라발전, 정치개혁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발버둥치고자 하는 나 자신을 아직까지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낙천·낙선 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단체도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지적해 온 만큼 당 결정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당 나름대로 이번 구제 방침을 정하기까지 다양한 통로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고민 끝에 공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로도 시민단체가 나에 대한 낙천운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검사출신인 상대당의 당선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45

언 론 사 : 주식회사 함양군민신문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92-1
대표 강 대 옥

주 문 : (주)함양군민신문이 발행한 함양군민신문 2004년 2월 9일자 3면 『생활정치 기치, 개혁바람의 주역 "희망의 정치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

이 유 : 함양군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남 함양·거창)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선거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인터뷰기사를 이번 호(44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히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변과 경력, 얼굴사진 등을 부각 보도하고, 그 후 발행된 지면(45, 46, 47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생활정치 기치, 개혁바람의 주역 "희망의 정치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총선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경남지역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바람이 경남지역 한나라당의 아성을 얼마나 깰 것이냐.에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이강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함양·거창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예상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실하고 젊은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한 환경안전연구소 김인수 소장은 젊은 패기와 소신을 가진 시대에 부합하는 일꾼으로 부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인수 소장을 시작으로 함양·거창 지역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일부 소수에게 독점돼 온 정치를 군민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려줌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저의 신념과 온 열정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총선 출마예상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인수 환경안전연구소 소장의 포부다.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한 그는 "정치가 곧 자치가 되고, 정치가 곧 희망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의 여러 병리현상들 중 정점에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바로 정치의 왜곡"이라며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사회계층들의 요구와 갈등·대립을 문제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공론의 장을 통해 요구를 제도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늘날 정치는 문제해결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마저 지울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도내에 총선 출마예상자중 가장 젊은 세대인 그에게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지역간의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 그러한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기형적으로 왜곡 발전한 보스·계파 정치로 인해 오랫 동안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소외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키워나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 속에서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경쟁의 세계화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온갖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고실업과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농촌은 WTO의 농업말살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절망의 어두운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모든 국민의 현실인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지역정치의 단물을 잊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군민 여러분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까지 소외돼 온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세력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 참여 열기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공론화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분할 정치라는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를 걷어버리고,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 통합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시대를 향유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면한 WTO의 농업개방 문제에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성장 발전 동력을 찾아나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일에 전문 지식과 지역 발전의 열정, 젊은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지혜를 한 데 모아 살기좋은 우리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이제 자치가 되고, 희망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젊음과 전문지식을 쏟겠습니다.

〈약 력〉

-경남 거창 출생
-거창초등학교 졸업
-거창 대성 중·고등학교 졸업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안동시 건설심의위원
-안동정보대학 토목과 전임겸임교수
-바른정치실천 청년모임 대표
-푸른신천가꾸기시민모임 집행위원
-분권과 자치를 위한 청년포럼 공동대표(현)
-환경안전연구소 소장(현)
-(주) 토건테크 대표이사(현)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 교수(현)

안 건 번 호 : 2004자심46

언 론 사 : 주식회사 충청리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 2680
대표이사 민 경 명

주 문 : (주)충청리뷰사가 발행한 충청리뷰 2004년 2월 28일자 1면 『관록 홍재형 맞짱 유의권 패기 "승부는 이제부터!"』, 9면 『홍재형 유의권 "이제부터 시작하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충청리뷰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청주 상당)와 관련, 유력 후보예정자 2인의 양강 구도가 확실히 이뤄졌다며 해당 선거가 그들만의 경쟁으로 치러지는 양 추측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관록 홍재형 맞짱 윤의권 패기 "승부는 이제부터!"
(2004년 2월 28일자 1면)

홍재형 윤의권 "이제 시작하자"
(2004년 2월 28일자 9면)

도내 첫 뚜렷한 양강구도 관심 고조
관록 대 패기의 충돌, 조직력이 대세 가를 듯

청주 흥덕구가 달아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확실한 후보들이, 확실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된 홍재형의원(66·열린우리당)에 맞서 현역 지구당위원장을 물리치고 공천을 거머쥔 윤의권 미래 충북포럼 대표(47·한나라당)가 지난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들의 '맞 짱'은 60대 관록 대 40대 패기의 대결로 이미지화되면서 이미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민노당과 민주당, 한나라당이 자체 후보를 냈거나 내세울 움직임이지만 지금의 판세라면 그야말로 메가톤급 인물이 아닌 이상 홍재형 윤의권 두 후보의 틈바구니를 비집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경제정책 관료,
실물경제인 대비도 흥미

홍재형 윤의권 두후보는 똑같이 경제전문가라는 점에서 남다른 흥미를 끈다. 홍의원이 경제부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정책의 경제통으로 통한다면 윤대표는 철저하게 맨 손으로 자수성가해 기업을 일군 실물경제통으로 비교된다. 때문에 이들의 경쟁은 초장부터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시작됐다.

이곳 상당구의 선거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부양된 계기는 역시 한나라당의 단일후보 등장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두 후보가 지루한 기싸움을 계속할 때 만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재형의원의 독주가 두드러졌지만 막상 윤의권씨로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되자 분위기가 환기되는 것이다. 맞대결 구도가 가져다 주는 상승효과인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된 후 양 캠프의 움직임은 아주 기민해졌다. 본선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도 속속 캠프에 참여할 태세다.

지금으로선 두 캠프가 서로 상대의 조직력을 무시못한다. 홍의원은 현역의 프리미엄에다 그동안 수사(修辭)보다는 '내용'을 중시해 온 의정활동으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윤대표는 특유의 돌파력으로 정치 신인답지 않게 각계 각층의 골수 지지자를 꿰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주목되는 것이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후 지난 3년간 정열적으로 사회활동을 벌인 것도 지지세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민노총낙선운동,
사생활구설수는 서로 아킬레스건

홍의원의 장점은 역시 화려한 공직경력으로 무장된 '실력'과 '역할'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전의 컨셉도 '한번 더 기회를 줘 큰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정치적 중량감의 부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실천으로 보여 준 개미같은 부지런함(역할)에 정치적 중량감까지 더해진다면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의 발로인 것이다. 결국 균형되고 안정된 정치력을 바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홍의원에게 시선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대표는 '실물경제인'답게 유권자에게 '실체'로써 어필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각종 방송활동과 강연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준비된 국회의원'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회 기여활동에 힘입어 노인, 여성층과 젊은 세대에 폭넓은 매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경쟁후보를 긴장시킨다. 홍의원이 지지도의 정점에 선 방어의 입장이라면 윤대표는 이미 검증된 패기와 추진력으로 치고 올라가는 공세의 입지에 선다는 것도 향후 추이와 관련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약점은 있다. 자신을 반진보 반개혁적 인사로 낙인찍고 오랫동안 낙선운동을 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노총의 움직임이 홍의원을 불편하게 한다면, 아직 결정적인 것은 없지만 그동안의 처신과 관련, 시시때때로 나도는 구설수는 윤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젠 관록에 정치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홍의원이나, 현역 위원장과의 혹독한 예선전을 치르면서 살아 남아 잠재적 저력을 인정받은 윤대표의 '맞 짱'은 이래저래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47

언 론 사 : 강서양천신문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86-15
대표 송 문 균

주 문 : 송문균이 발행한 강서양천신문 2004년 3월 1일자 4면 『信念으로 택한 길 총선승리로 보답』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강서양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양천갑)와 관련,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그의 경력과 정견, 인물사진 등을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信念으로 택한길 총선 승리로 보답

열린우리당 양천갑 김 재 실 후보

26일 열린우리당 양천갑 경선에서 김재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양천갑 지역에 불꽃튀는 총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됐다. 김재실 후보는 특히 지난 13년간 양천 지역에서 구·시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바닥정치를 다져온 인물로 어느 누구와 경합을 벌여도 쉽지 않은 상대로 알려져 있다.

김재실후보는 1991년, 95년 제1·2대 양천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1998년 제5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를 역임하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으로 지역정치의 경험을 쌓아왔다.

지난 16대 대선 때는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서울본부 기획실장 겸 남부본부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치의 경험을 쌓았다. 또한 민주당양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등으로 당선됐으나 실제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한 아픈 기억도 갖고 있다.

현재 다이아물산(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서울대표, 신정산악회 명예 회장, 천주교 양천성당 사목회 총회장, 양천발전 포럼 이사장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파이팅! 월드컵 코리아"가 있으며 제2회 한국의 정대상, 서울특별시장상, 대한축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후보는 "1987년 목동 임대아파트의 첫 입주민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 양천 주민들이 더 잘 안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시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하향결정 반대운동에 앞장서면서 일찌감치 실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봉사하는 일꾼"으로 낙인 찍혔다는 김후보는 지역과 당을 떠나 양천 주민의 한사람으로 지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천불패 신화 다시한번 입증

김재실 후보는 구·시의원 재임 시절 칼산 공원 조성비 70억원 확보, 안양천 갈대숲 조성, 신정7동 오금리 소공원 조성, 신정2동 마을마당 조성비 5억원 배정, 서부화물터미널옆 온수공원 부지매입비 96억원 중 60억 배정 등 실질적인 업적과 양천 곳곳에 수목 8천여 그루를 식재, 푸른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월4동·목3동 재활용센터 설립, 신정1동 단독주택 하수관로 확장 등 양천의 시설개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지지와 성원이 이런 활동을 가능케 했다"며 "남들이 조직관리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꾸미는 것을 싫어해 굳이 그런 활동을 펼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거창한 구호를 남발하지 않고 나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가난한 9남매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김후보는 가뭄이 들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위해 2학년 말에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 고픈 배를 움켜쥐며 돈을 모아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준비한 젊은 시절에 대해 김후보는 가난이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해준 은인이었다고 회상했다. 못 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과 선진경영을 배우자는 일념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김재실 후보는 능률학과 경영관리를 전공으로 일본 산노 단기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학사고시 합격으로 경영학사를 취득했다.

지금은 전자부품 무역업체 다이아물산을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기업가이지만 김후보는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마음으로 느낍니다"라며 "나의 명예나 이익만 챙겼다면 애초에 정치에는 몸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한다. 정치에 대해 김후보는 "현재의 정치판을 보십쇼. 능력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의 정치판이 혼란스럽습니까? 인간적인 됨됨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라며 "경기 불황에, 청년 실업에, 산적한 국가적 해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정치판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서로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자고 불러내니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죄송스럽고 경선에 600명이나 참가해 또 345분이 저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드시 총선에 승리, 보답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이제 지역과 학연, 혈연 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반드시 판갈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재실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역과 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주주의 발전,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양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생산과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49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3월 4일자 10면 『그대에게 다가서고 싶다』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마/당

그대에게 다가서고 싶다

이 무 영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위원장

"고향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는 안식처입니다. 차가운 눈일지라도 고향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차라리 포근해집니다."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우리 고장에서 활발한 시작(詩作)활동을 했던 안도현 님의 시(詩) 가운데 최근 많은 분들이 좋아 하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중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鄕愁)"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시(詩)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는 안식처입니다.

차가운 눈일지라도 고향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차라리 포근해집니다.

지역경제발전 동력원 전무

그런데 그 고향이 어떤 이유로든 예전 같지 않아졌거나 황폐해졌다면 그 만큼 아리고 속이 상하면서도 애착의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의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는 말할 것 없고,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울산의 자동차공장, 대전의 대덕단지, 제주도의 관광산업 등 다른 고장처럼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동력원이 전무하고, 정치적으로는 분열과 배신의 먹빛으로 채색되어 있어서 쓰라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국내외에서 여러 각도로 평가를 받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 실시되는 총선거 외에는 별다른 심판의 방도가 없습니다.

고향발전 발로뛰는 인재필요

우리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는 그 어느 선거보다 이번 17대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고장을 분열과 배신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철새들을 물리쳐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전주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부분과,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사 중에 누군가는, 일신의 영달과 정치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 고장의 중흥을 위하여 발로 뛸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입니다.

맛과 전통예술로만 인식되어 있는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내세울만한 경제발전의 동력원이 없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가 "전북의 비전과 발전과제"를 제목으로 제시한 "30대 총선공약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인사들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밀면서 정치적인 말장난으로 일관합니다.

이제 봄기운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어붙은 땅을 깨고 나오는 파릇한 새싹의 힘과 의지가 필요하며, 서해 앞바다에 몸을 던질 각오로 머리 뿐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할 일꾼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우리 전라북도 입니다.

전주풍남초, 전주북중, 전주상고 졸업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명예 정치학 박사

전북지방경찰청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제54대 경찰청장(치안총감)
『비지니스 위크Business Week』지 선정〈아시아스타 50인〉
새천년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위원장
전주대, 용인대 객원교수
전주북중/ 전고 총동창회 부회장
전주상고 총동창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안 건 번 호 : 2004자심50

언 론 사 : 주식회사 스포츠투데이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 명지빌딩 15층
대표이사 조 희 준

주 문 : (주)스포츠투데이가 발행한 스포츠투데이 2004년 3월 8일자 26면 『아침형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스포츠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을)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입문동기 및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형인간 여의도 새벽 연다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회장

'몸에 밴 특유의 아침형 스타일로 정치판을 누비겠다.'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51)의 정치 새내기 행보가 이채롭다. 현대그룹이 배출한 간판 경영인답게 그의 정치적 변신 또한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 기업 CEO(최고경영자)로서 아쉬울 것 없던 그는 지난 2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출마한다. 그런 그가 최근 특유의 부지런과 아침형 스타일로 정치신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어 화제다.

이전회장은 7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 요즘 새 인생을 살듯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입문 후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180도 바꿨다고 한다. 기업에 있을 때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최우선이었지만 최근엔 지역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이나 주거, 주차문제 등에 더 눈길이 간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내고 현대캐피탈 회장으로 있을 때는 인사를 받는데 익숙했지만 요즘엔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정치에 나선 만큼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전회장의 빠른 변신 뒤에는 그가 오랜 기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왔던 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전회장의 아침형 생활 습관은 독특하기로 유명하다. 현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새벽 6시 이전에 어김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전회장이

야말로 아침형 인간의 원조격이라는 게 현대그룹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전회장은 "신입사원 때부터 새벽에 출근하는 버릇을 들여왔을 만큼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왔다"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아침 일찍 생활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그나마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실물경제 경험을 살려 노사문제, 산업정책,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1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3월 9일자 5면 『아! 안희정』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기 고

아! 안희정

우 상 호 열린우리당 서대문갑 지구당위원장

그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면회실로 들어섰다. 안경 속의 예리한 그 특유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고 말투도 여전했지만 갇혀있는 그의 심정은 복잡해 보였다.

자신으로 인해 동세대 모두가 타락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일단이 드러나는가 하면 노무현 캠프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느낌도 들었다.

17년 전 그를 처음 만난 곳도 서울 구치소였다. 야권 통합운동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두 번째 서울구치소에 갇혔을 때 그는 옆 사동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면회를 가거나 20여 분간 운동을 할 때 복도에서 스치듯 만나면서 한 두 마디 대화를 나누곤 했었다. 짧은 대화 한두 마디건만 외롭고 답답했던 구치소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던가. 생생하다.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묻자 그는 "이번엔 형이 옆방에 없다는 사실이지"라고 답했다.

우리는 모처럼 유쾌하게 웃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면회 오던 동료와 결혼했고 나는 기꺼이 그의 함재비가 되었다. 내가 재야 생활하던 10여 년간 그도 그 어떤 빛나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주변의 조롱에도 아랑곳없이 노무현 옆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날이 다가왔건만 그는 가장 비난받는 386이 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는 종합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늘 변화된 상황에서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압박하게 되어 있다. 당시의 관행과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해도 그리고 그 정도의 변화에 기여한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냐 자부하려 해도 민심은 더 엄격하다. 그리하여 안희정은 정치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젊은 정치인의 때이른 부패를 욕하는 선의의 혹은 악의의 비판자들에게 묻고 싶다.

역사가 논개에게 어차피 같이 죽었으므로 비긴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역사가 논개의 저항방법이 아마추어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역사가 논개에게 애국심은 인정하지만 더럽혀진 여자 아니었냐고 하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한나라당의 그들이 한국사회 어디에 있던 100억의 이익과 100년의 기득권을 위해 움직였을 사람들이라면 안희정은 '그곳'에 없었더라면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아갔을 젊은이다.

안희정은 정치적으로 죽었다. 과정상의 부패 때문만이 아니라 저주스런 고비용 정치를 껴안고 스스로 역사의 강물에 몸을 던졌으므로, 강물에 떨어졌으므로 죽었다.

내가 달려고 하는 금배지가 나에게 과분한 것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허영이고 사치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나도 이미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도 안다. 안희정은 말없이 나에게 이야기 해준다. 그 금배지는 불의한 시대를 안고 역사의 강물에 몸을 던진 논개의 자박(自縛)을 위한 10개의 금가락지라는 것을.

안 건 번 호 : 2004자심52

언 론 사 : 주식회사 강원일보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대표이사 최 승 익

주 문 : (주)강원일보가 발행한 강원일보 2004년 3월 6일자 7면 『폐광지역 도약의 새 전기』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기 고

폐광지역 도약의 새 전기

김 택 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신지방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

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알아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지역혁신체계와 자치역량을 배가시킨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방은 설땅이 없어지게 된다.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각기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발전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영월,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도 무한경쟁시대

첫째, 투자재원이 충분하다.

태백시민들이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낸 대정부 합의사항을 16대 국회에서 법제화했다. 4개 시·군에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만든 것에 보람을 느낀다. 2003년의 경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포함하여 4개 시·군에 지원된 금액이 적게는 82억원에서 많게는 521억원이나 되었다. 이것이 매년 10%이상 증액될 것이므로 재원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동강 화암동굴 태백산 환선굴 바다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종합리조트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위치하고 있다.

셋째, 38국도를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에 38국도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내 왕래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에서 3시간 내외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강원랜드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라고 했다.

폐광지역이 갖고 있는 구슬을 어떻게 갈고 닦아 보배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첫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일괄적으로 맡겨보자.

4개 시·군이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용역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개발, 도시개발을 해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찾아서 용역에서 건설까지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이 폐광지역 리모델링을 하였으므로 이들 나라에 폐광지역개발을 했던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가 있을 것이다.

둘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수도권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풍부한 재원 적극 활용을

수도권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건설 및 식자재업 활성화, 고용창출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5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감면, 분양가액인하,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책이다.

강원남부지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수도권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지할 수 없다.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재원으로 현금보상, 부지 무상제공, 지방세 감면, 지역주민 고용비 지원, 시설투자 및 경영자금 지원 같은 지원책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원제도, 자유무역지역내 기업 지원제도 등을 참조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연초에 정선군에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선에 맞는 대체산업을 찾고 수도권의 기업과 관공서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선군이 수도권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전부지 확보, 대상 선정, 홍보, 유치협상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하되,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영월, 태백, 삼척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기업과 관공서 유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발상의 전환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신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3

언 론 사 : 주식회사 한국콘솔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74-14
대표이사 손 대 근

주 문 : (주)한국콘솔이 발행한 주간저널 2004년 3월 8일자 24~26면 『성공적인 지방자치 행정경험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주간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창원갑)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경력, 포부 등을 선거홍보용 사진과 함께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총선을 달린다〈창원편〉

성공적인 지방자치 행정경험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열린우리당 공 인 배

(전 략)

지역민의 신임을 얻어야 큰 일도 잘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총선열기에 편승하여 현직 시·도의회 의원들과 각급 공무원들이 대거 사퇴를 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혀, 행정공백은 물론 배신감을 느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도의원직이 정계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에 지나지 않느냐"는 불평과 함께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준비에 뛰어든다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뿐아니라 국회에서도 과연 제 몫을 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81명에 달하는 현직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경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산재한 시정 업무를 뒤로한 채 중앙으로의 진출만을 욕심낸다면 이는 분명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시정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역발전에서 이제는 국가발전으로 그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이가 있어 지역민들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민배 前 창원시장. 그는 제1·2대 민선 창원시장 재임 시절 포섭력을 갖춘 행정운영과 효율적인 시정관

리로 '창원시 제2의 도약'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 총선 특별취재팀은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창원을 방문, 지역 여론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공민배 前 창원 시장을 만나 17대 총선 출마배경을 들어보았다.

'도시경쟁력 1위'

'올해의 문화도시'를 이루기까지

"당론만 있고 국론이 없는 현 정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 특정정당들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입당 동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당익을 우선시하는 지역구도를 버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그의 뜻을 피력했다.

공 전시장은 지난 7년 간 창원시정을 맡아 '도시경쟁력 1위', '올해의 문화도시' 등 수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창원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모범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 95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창원시장에 당선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행복자치시 창원건설」을 위해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 '공단지원 역할의 증대', '도농의 조화로운 개발'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공무원과 시민의 원할한 연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동제(大洞制)를 도입, 지방행정제도의 창의적 개혁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시지역 24개동을 12개동으로 통폐합하여 15개의 읍·면·동으로 구성,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과 함께 행정의 순발력을 높여 행정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현재의 창원시는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과 탄력적인 행정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는 창원이 계획도시자 산업도시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으며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경륜공단을 설립, 년간 1천억이라는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여 중앙 의존적인 기존의 시정운영을 타파하고 독자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이룰 수 있었다.

공민배 전시장은 지난 95년 민선 1기 시장취임과 함께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성산아트홀 건립, 용지문화벨트 조성, 시립도서관 건립, 늘푸른전당 개관 등 문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토요 야외 어울림마당, 아파트 음악회, 문화예술강좌 등 소프웨어적인 부분도 착실히 수행, 문화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97년 결실을 이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문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에 주는 '올해의 문화자치단체상'을 수상하면서 창원시를 공단배후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데 주력한 공 전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97년 창원시가 '도시경쟁력 전국 1위'를 차지한 이래 현재까지도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할 터

최근 열린우리당의 전략지역으로 창원(갑)지구 공천이 확정된 공민배 전 시장은 그동안 쌓아 온 시정운영의 경험을 의정활동의 전문성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력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의 해외활동을 적극 도울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기구 수립에 앞장 서 향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공 전시장은 덧붙여 "기회만 주어진다면 외교통상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폐쇄적인 사고의 틀을 변화시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민족 경제 Network를 형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켜 모국과 연계를 맺으며 현지의 자원과 구매력 등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현지가 다같이 잘사는 Win-win 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 해외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정책을 완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 전시장은 과거 추진력 있고 창의적인 시정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정치부패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큰 틀을 형성하여 당리당략의 국정에서 벗어나 여·야가 함께 실무적인 국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안 형성에 국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패턴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도 함께 밝혔다.

창원을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변모

창원은 지난 73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개발되어 현재 국제적인 기계공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공민배 전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국제적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교육, 문화, 예술, 복지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창원시가 21세기 최첨단 산업도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공단의 기계공업을 대체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신항만과 고속철을 연계할 경전철과 도로망 확충을 통해 창원을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공 전시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갑)지구의 경우 창원 내에서도 불균형적인 발전단계에 있다고 판단, 현재 농촌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 문화 인프라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동읍, 대산면, 북면 등 농촌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발축에서 벗어나 소외된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규제를 적극 풀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람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예술,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39사단을 이전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창원시민들과 함께 해 온 지난 7년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남는다"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 그는 앞으로 "창원시민의 혼과 자긍심으로 정치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되고 국민이 신명나게 참여하여 보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시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 그에게서 이번 17대 총선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4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3월 9일자 10면 『청산되어야 할 패거리문화』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창선되어야 할 패거리문화

박 영 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우리당 전북도지부 대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위원, (사)마당 운영위원,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기획위원,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연고를 따지는 우리 사회의 관행은 뿌리 깊다. 인재를 발굴하는 기업의 인사 채용부터 자그마한 물건 납품까지도 연고가 우선되는 사회다. 그 사람의 인물됨됨이나 제품의 품질 여부보다는 고향 선·후배, 고교동문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운 데다, 제품의 품질마저 의문시된다. 그저 끼리끼리 어울려 술·밥을 나누고 히히대면서 연결고리를 강화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부패가 싹트고, 능력있는 사람이 소외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연고주의·줄서기문화 고질적 병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연고주의와 함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패거리문화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다.

연고를 바탕으로 한 패거리주의는 정치, 언론, 학계,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문제는 연고주의, 패거리문화가 국가 발전의 생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부정부패의 온상인 접대문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줄을 대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접대를 해야 한다. 오늘날 후진적인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싹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결정해야 할 금융권조차 패거리에 끼지 못할까 염려하며 몰려다니다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국내 금융계는 2002년 말까지만 해도 LG카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은행마다 대출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1년 여만에 LG카드는 엄청난 부실과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LG카드에만 7조원을 빌려준 은행들은 1조 4000억원(약20%)를 떼였다. 그해 8대 시중은행 전체 순이익(6000억원 추정)의 2배를 한꺼번에 물린 셈이다. 이러한 관행은 IMF위기를 겪은 뒤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우(1999년)·하이닉스(2001년)·SK글로벌·카드채(2003년) 등 2년에 한 번 꼴로 대형 부실을 얻어맞았다. 엄정한 심사대신, 선·후배로 묶인 연고주의와 이름만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거리주의(herd mentality)'가 원인이다.

오래 전부터 패거리문화의 폐해를 지적한 강준만 전북대교수는 '인물과 사상(15권)-패거리 공화국'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패거리문화'를 질타하고 있다. 지역주의, 연고주의 때문에 선거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수사회, 문단, 언론계까지 곳곳에 패거리 문화가 점령했다며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줄과 안면으로 상징되는 연고주의 및 패거리문화는 공과 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공정한 경쟁의 룰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오는 4.15 총선에서도 '저급한 패거리주의'가 재연될 조짐이 지금부터 보이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찾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음식점마다 동문회나, 향우회 모임이 부쩍 눈에 뜨인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람을 지지하자는 발상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망국적 발상과 다를바 없다.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 기회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치혁명을 요구하는 비등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번 17대 총선은 종전의 구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책능력을 검증 받은 깨끗한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때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의 전

환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래서 유권자 혁명이 필요하다. 연고주의와 패거리문화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필요한 때다. 누가 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할 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믿음 아래 이번 총선은 연고주의와 패거리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드는 축제마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5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3월 10일자 10면 『전북을 신산업 물류중심지로』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전북을 신산업 물류중심지로

정 세 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2004년의 화두는 단연 '중국특수'다. 단순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양국 교역규모는 무려 20배나 증가해 왔으며,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대상국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중국특수'는 통계적인 관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소위 '중국 러쉬'현상은 분명 국내경기의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중국 기회론'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성장 가도 달리는 중국

한편, 중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지 지난해 9.1%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이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세대 지도체제를 안착시킨 중국이 최근 6자 회담을 주선하는 등 점차 국제 외교력까지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중국의 성장은 정점이 아니라 그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10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및 무역대국

이 될 것 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시대의 도래가 단지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경제대국 일본의 존재,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개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물류와 비지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한국의 Hub Korea 전략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근간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중국을 접하는 서해의 중심이자 5도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라는 변수가 시장규모 협소하고 여타지역에 비해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여 1차 산업 중심의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산업구조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특수'의 이면에는 그에 못지 않은 위험성 역시 잠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전북의 지리적인 이점은 오히려 전북지역 내의 제조업 공동화와 시장잠식 등 전북의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패착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對 중국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체계적 대응방안 조속 마련해야

따라서 중국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전북을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막연한 청사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중국 환황해 연안의 공업지대와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국제적인 '신산업지대'나 '광역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신산업 생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전략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환황해 시대 신산업·교역의 중심지 전북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따.

제15대, 16대 국회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
現, 열린우리당 전북도지부장
現,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안 건 번 호 : 2004자심56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0
대표이사 이 용 범

주 문 : (주)전민일보가 발행한 전민일보 2004년 3월 11일자 10면 『물, 정치 그리고 희망』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난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

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아/침/광/장

물, 정치 그리고 희망

황 인 택 민주당 전북도지부 부지부장

-제15, 16대 국회의원 총선 기획단장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부 부지부장
-(사)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전북지부 이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임 고문
-황인택 IT전북 대표
-치과의사(새론치과)

신라시대 안압지라는 연못은 물이 썩지 않게 입수구부터 여러장치를 두었다고 한다. 물을 끌어와서 철봉 박은 석구를 통과시켜 쓰레기를 걸렀고 이어서 석조와 작은 못에 머물게 해서 흙과 모래를 가라 앉혔다고 한다. 그 후에 작은 못을 넘쳐흐른 물은 3단 폭포를 이루면서 안압지로 흘러든다고 한다. 다시 이물은 인공섬에 부딪혀 갈라지면서 맴돌다가 출수구로 향하고 이런 회전은 정화작용에 그만인 것이다.

이런 이치는 사람 사회에도 통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양성과 자체정화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썩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날 공천혁명이라는 물갈이 장치를 각 당에서 부르짖고 있다. 물갈이를 해야 나라가 살고 그 물갈이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부정과 부패, 무능과 정쟁으로 얼룩진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정한 정치의 개혁, 경제의 회생, 민권의 존중, 한반도의 평화정착,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이제 제17대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제17대 국회를 구성하게 될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를 차갑게 외면하는 국민들과 직접 마주서야 한다.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지금의 정치판을 과감히 도려내라는 국민들의 충고를 어느 때보다 더 가슴깊게 새겨야한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젊은 일꾼들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만 한다.

국민은 물갈이를 원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색맞추기와 국민들의 눈치보기 수준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정한 인물을 고르기보다는 대중에게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정치권이 이런 노력을 했다는 생색을 내는데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를 찾는데 급급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얼마전 한 정당의 초선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젊고 참신한 정치신인을 선거때마다 영입하고 당의 얼굴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했다고 토로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매년 민생현안마저 팽개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눈에 불을 켜는 국회회기를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지켜보고만 있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은 열정과 패기가 필요한 때

그동안 15대, 16대 선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교훈마저도 팽개치고 이번 선거에서도 되풀이 하려고 하고 있다. 15대 총선 당시 김대중 총재의 국민의회가 참패한 것은 현역 의원 전원을 재공천했기 때문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의 젊은 후보들을 대거 공

천해 승리를 일궈냈다. 역시 16대 총선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물갈이에서 실패해 총선에서 패배했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독하다는 평속에서도 거물중진 몇 사람을 몰아내 한나라당이 승리를 한 것이다. 과감한 세대교체가 있어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선거에서도 이 같은 총선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지역감정에 기대어 한 표를 얻었던 시대는 이제 물러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역감정이 힘을 잃어가는 지금,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내부수술을 먼저 단행하고 정치는 민심이라는 그 명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7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울경제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9
대표이사 김 서 용

주 문 : (주)서울경제가 발행한 서울경제 2004년 3월 12일자 6면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절실』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기 고

성폭력 종합지원센터 절실

박 금 자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얼마 전 영국 런던에서 유명 축구팀의 선수 7명이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 선수들이라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소녀들에 대한 피해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자살등 정신적 후유증 심각

몇 개월 전 한 초등학생이 아침 등굣길에 성인 남자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 어린이는 피해를 당한 후 심한 출혈상태에서 겨우 집에 돌아와 응급차에 실려 몇 군데 병원을 전전한 후에야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이송됐다.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질 출혈과 상처가 너무 심해 봉합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나이가 어려 아직 생식기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탓에 전신마취를 해야만 질 부위의 봉합이 가능했다. 다행히 수술이 잘돼서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해 1주일 만에 가해자 두 명이 검거됐다. 가해자의 신원은 알 수 없었지만 사고

초기에 사건이 접수돼 현장검증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심각한 신체 질병이나 자살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의 피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들을 상담한 결과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피해율이 전체의 20%에 달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합하면 피해율은 44%를 차지한다.

성폭력을 전담하는 상담소의 수가 100여개를 넘어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거를 찾아내 치료·예방해주는 종합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곧 여성부에서 서울에 '아동성폭력종합센터'를 개소한다고는 하나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고 아동 피해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해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 시설 등을 갖춘 종합지원센터가 절실하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은 중요하다. 먼저 부모는 물론 어린이·유아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들과 교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예·아니오'하고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치료·예방 전담시설 세워야

셋째,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당국은 유아시설에서 성교육을 반드시 다루도록 법령 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런 강제적인 방법보다 부모님과 학교측이 유아 성교육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성폭력 피해를 다루는 상담기관은 물론 이들의 피해를 보살펴야 하는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반드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가 강화된다면 성폭력 피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8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16
대표이사 이 창 승

주 문 : (주)전북중앙신문이 발행한 전북중앙신문 2004년 3월 12일자 8면 『국가발전과 출산율』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

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제 언

국가발전과 출산율

박 영 자 열린우리당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평균 수명은 높아진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남자 72.1세, 여자 79.5세였던 평균수명은 2030년 81.5세로 늘어난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달리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출산율은 1.17명으로, 부부 한쌍이 평균 1.17명을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7을 크게 밑돌며,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일본(1.3)과 이털리아(1.25)보다 낮다.

이 결과 2019년 한국은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는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저출산-고령화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멈출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줄어든 경제활동 인구를 대신할 축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는 공적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이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 획기적 정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낳고 싶어도 부담스러운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육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수입 규모가 작다.

여기에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면서 고용불안마저 가세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만 두 살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평균 보육비 28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계속되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이유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불안정을 꼽았다.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6.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답해, 경제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출산안정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비현실적인 지원내용 때문에 여성계의 호응을 받지 못한채 자동 파기됐다.

출산안정법 제정절실

출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세 번째 자녀 양

육에 필요한 비용을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며, 어린이 수당 지급 및 출산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담았지만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보다 실질적인 출산안정법 제정은 국가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

전라북도와 기초 자치단체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국가 발전의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다.

국회 차원의 출산안정법 제정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 더 낳기' 시민 운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59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주 문 : (주)전북일보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4년 3월 16일자 6면 『대통령탄핵은 신종쿠데타』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시 론

대통령탄핵은 신종쿠데타

정 세 균 국회의원

지난 3월 12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날이었다. 야 3당이 야합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65조는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들에 대한 심판이 보통의 절차로는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잘못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선례를 이번에 남기게 되었다.

탄핵사유 소도 웃을 일

야당이 제시한 탄핵사유를 보면 실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첫째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판정과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대통령의 측근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국정수행능력 상실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국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첫째 사유인 선거법위반의 건은 사실이 왜곡되었고 과장되었으며 설혹 사실로 인정했다하더라도 탄핵사

유로는 적합하지 않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싶다라는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이 선거법위반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탄핵사유라면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 사유인 측근과 참모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탄핵사유가 될수는 없다. 오히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부정부패가 성역없이 파헤쳐지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친인척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는가를 생각해볼 때 노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가 더욱 돋보였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소위 "10분의 1" 발언을 트집잡아 탄핵사유로 운운하는 것은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대들보는 못 본 체하는' 청맹과니 격이다.

셋째 사유로 든 경제파탄 책임문제도 그렇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위헌이나 위법적인 사안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사사건건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길 수 있는지 그들의 양심에 묻고싶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는 다른 탄핵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는 국정의 혼란과 불안정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과 사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야당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당리당략을 위해 탄핵으로 내모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탄핵안 의결은 신종 쿠데타이자 정권찬탈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연산군과 광해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발의하고 의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선시대의 연산군과 광해군의 잘못과 견줄만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야당으로서 비판과 질책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나 자기당의 부정부패와 비리 감싸기에 급급하여 국회회기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자기당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자기당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막가파식 다수당 횡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다수라는 숫자놀음에 빠져 국정을 마비시킨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이번 17대 총선에서 곧바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0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3월 18일자 5면 『내가 겪은 3·12 쿠데타의 현장』 제하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

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시 론

내가 겪은 3.12 쿠데타의 현장

김 영 춘 (국회의원·열린우리당)

3월12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장,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40명은 3일 동안 계속된 농성으로 지쳐 있었다. 우리는 "날이 밝은 후의 결전을 위해 교대로 잠을 자두자"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장석 주변과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한민당의 새벽기습이 우려되기는 했으나 불침번을 세워두면 충분히 대응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왔다. 새벽 3시 50분, 국회의원들답게 점잖게 무리지어 들어올 줄 알았던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떼지어 본회의장으로 달려 들어왔다. 불의의 기습이었다. 각목과 쇠파이프만 안들었다 뿐이지 농성근로자들을 향해 달려드는 구사대 깡패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아직도 누워 있는 우리당 의원들의 가슴을 밟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채 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의장석을 지켜냈다. 김부겸 의원은 "이건 아이다 이놈들아!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외치고 엉엉 울면서 그들을 밀어냈다.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 한민당 의원들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쌍방 합의로 휴전을 했다.

아침 10시의 본회의 개회 시각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력저지를 하면 저들도 적당히 시도하다 말겠지 하는 예측은 착각이었다. 이렇게 새벽의 기습작전까지 하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비로소 생겨났다.

그 전날 밤 7시경, 정동영 의장은 본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대통령과 최병렬 대표가 형식과 절차에 구애됨없이 만나자. 밤늦게든, 다음날 새벽이든 만나서 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순형대표에게는 다른 의원을 통해서 같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지 않았다. 새벽1시까지도 연락이 없어 정의장과 나는 한민당이 대화 의사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눈을 붙였던 것이다.

소강상태로 있던 아침 6시경, 정동영 의장은 마침 본회의장에 있던 최병렬 대표를 발견하고 다가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30분만에 돌아온 정 의장은 최 대표의 강경하고 자신만만한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화는 필요없다. 오늘로서 노무현이는 끝장이다. 내일부터는 고건체제로 간다"고 최후통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날 밤 한나라당 내부 단속은 물론 자민련까지 이 쿠데타 음모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장은 마지막까지 극적 타협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아침 7시 넘어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9시50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통령 입장발표이다. 그 핵심은 아시다시피 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대국민 사과, 극한 행동의 자제 그리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요청이었다.

그러나 한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미 그들은 타협과 사태 해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려는 쿠데타세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그들은 세워 놓은 작전계획대로 움직였다.

10시 정각에 나는 국회의장석 뒤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하필 내 핸드폰이 울렸다. 김한길 기획단장이었다. "정의장을 연결해 달라" "상황이 시작되려 하는데 꼭 지금 통화해야 하나?" "그렇다. 급한 사안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단상을 내려와 의원석 앞좌석에 앉아 있는 정 의장에게 내 전화를 건네 주었고, 그 통화를 마치자 마자 국회의장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 수십명에게 둘러싸인 채

박관용 의장은 보무도 당당하게 의장석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백여명의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단상 주위를 둘러싸고 의석에 있던 우리당 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그후의 상황은 국민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보신 바와 같다.

1시간의 몸싸움과 아우성 끝에 우리당 의원들의 저항은 거의 진압(?)되었고, 의장석 단상은 국회경위들과 한민당 의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오전 11시 57분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 가결이라는 쿠데타 성공이 선포되었다. 그들이 의기양양 승리를 구가하며 빠져나간 본회의장에는 우리당 의원들의 통곡소리만 가득했다.

우리들의 눈물,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본 뜻있는 국민들이 함께 흘린 눈물은 역사가 거꾸로 후퇴하는 조국의 서글픈 현실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다. 다가올 총선에서 패배가 예정된 냉전수구세력, 부패세력, 지역주의 기생세력들이 국민의 뜻에 반해 합법의 탈을 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선거를 노무현과 반노무현의 전선으로 만들면 자신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착각했다. 국민들은 그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고 낙인찍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단죄하려든다. 그래서 3.12쿠데타 이후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과 수구기득권 세력의 대결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3월12일 밤, 반란의 주모자들은 강금실 법무장관과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해임을 논하고, 심지어 내각제 개헌과 총선연기를 언론에 흘리는 등 기고만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쿠데타는 3일천하, 길어봐야 한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실패한 반란의 끝은 반란세력의 자멸이며 청산이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이며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국민들이 그것을 확인해주는 일만 남았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3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기신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김 화 석

주 문 : (주)경인경제가 발행한 경기신문 2004년 3월 22일자 3면 『남동공단 리모델링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남동을)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형식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과 공약사항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인터뷰

"남동공단 리모델링 추진"

민주당 인천 남동乙 권태오 후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현대화시키는 등 특화테마시장으로 전환하고, 남동공단을 리모델링해 자족기능이 살아 숨쉬는 남동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민주당 인천 남동을 지역 17대 총선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권태오 후보의 말로 그는 "지역내 중소상공업 육성은 물론 특화산업 및 유통단지를 유치하고, 일산 외곽순환도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를 만나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견해는.

▲탄핵정국이 마치 무슨 국가적 대란이나 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방송사의 영향을 받은 진보세력의 세몰이로 보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인은 보수와 진보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적 소신이 뚜렷해 정도를 가는데 맞추고 싶다.

-공약으로 환경친화적인 남동을 강조했는데.

▲소래산과 인천대공원, 소래생태공원을 청정으로 묶어 녹색벨트화하는 등 특히 만수산과 장수산을 잘 가꾸기 위해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할 작정이다.

또 남동공단 직통셔틀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구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 문화·복지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 ZONE 설치하는 등 남동도서관을 건립하고, 특히 장애인 의료 및 재활센타를 건립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 지원책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 뿐아니라 구민회관과 청소년지원센터, 남동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영·유아 위탁보호시설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각오다.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대표적 사례를 몇가지만 예로 든다면.

▲영어마을과 문화마을이 동시에 들어서는 교육문화 복합단지를 유치하고, 도심재개발 촉진 및 소형아파트를 확대 보급하는 등 화물전용터미널 설립과 고등학교를 2개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진흥 및 지원법을 제정하고, 특히 청년실업대책기구를 설치와 해외취업지원과 교류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현실화에 진력할 작정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4

언 론 사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
광주시 남구 월산4동 950-7
대표이사 구 양 술

주 문 : (주)호남매일신문이 발행한 호남매일 2004년 3월 22일자 3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형식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과 공약사항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돼야"

열린우리당 염 동 연 정무조정위원장

4·15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매체에서 각 당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유권자들의 총선 표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총선과 맞물려 각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염동연 우리당 정무조정위원장을 만나 현 탄핵정국과 지역현안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 현 탄핵정국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은 현재 역사의 물꼬가 어디로 터져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탄핵이라는 돌발사태로 총선이 임박할수록 호남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탄핵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몫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잣대로 과오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최근 호남지역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보다는 단체장들이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준엄한 국민의 요구와 당연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 현재 박광태 광주시장의 구속으로 광주시 현안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소견은.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구속된 것과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한다.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구속된다고 해서 국회가 파행을 걷거나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지만 현역단체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연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변해야 지역도 발전한다

■ 최근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민주당 탈당과 관련, 전남도의회에서 사퇴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박태영 지사의 탈당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

■ 광주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노 대통령의 광주에 대한 애정은 광주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으로 표현될 것이다. 앞으로 첨단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스스로도 변화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계획이 없으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왔다.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광주경제 활로 찾기 일환으로 공기업 유치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연고성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감안해 공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지방이전에는 해당 공기업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해당공기업을 직접 찾아가 광주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광주와 전남은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이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낡은 정치세력을 청산하는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이제는 광주·전남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력이 광주·전남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힘들기 때문이다.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5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국매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주 문 : (주)전국매일이 발행한 전국매일 2004년 3월 24일자 4면 『경기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김석균 후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상록갑)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형식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을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경기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김석균 후보

반월공단을 끼고 신흥지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 상록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김석균 전 민원국장은 "정치발전이 정체돼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자금의 투명화와 1인 보스정치의 타파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노무현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노사모처럼 십시일반식의 정치인 지원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노사모를 통해 발전되기 시작한 민심정치를 현실정치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이 정체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김 후보는, "한나라당은 미래비전 제시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민의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한 당 지도부의 무사안일과 1인 보스체제에서 단 한발 짝도 전진하려고 하지 않은 정체된 시각 때문에 한나라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다선의원들의 주장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또 한나라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반성보다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 한 당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당이 겪고 있는 혼란에 몰입되면 당은 깨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치는 국민들과 정치인을 지지해 준 지역민들의 잔치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가장 최선책은 실질적인 국민참여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의 단수우세후보로 공천받기 전 일부 잡음과 관련, "공천신청자였던 김모 변호사는 지금도 (당의)공천과정에서 편법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면서 "현실정치가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승복하지 않는 자세'와 동시에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김 변호사와는 언제 어디서든 당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한나라당의 별칭이 다양하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경노당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마디로 부끄럽고 당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정치사를 돌아보면 일인보스정치가 다년간 정치계를 지탱해 왔다. 그러다보니 정치와 돈은 동전의 양면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당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데 있어서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1인보스에 의지하는 체제를 탈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공천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아 왔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정치사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당 총재는 자금을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구당을 관리하는데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소요자금대부분이 기업에서 조달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다.

-물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조달됐던 것이 현실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번 총선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자원봉사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둘째, 중앙당에서의 지역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립돼야 할 것이다. 셋째는,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지난 선거때까지는 금전이 판을 치는 선거판이었다면 제17대 총선부터는 지역잔치성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도 바뀌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다. 새천년민주당이 발의했고 한나라당도 많은 부분 탄핵에 기여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탄핵정국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충분히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대화와 타협대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전부 다 옳고 누가 다 그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돼 있는 사회를 하루빨리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탄핵정국을 선동해 일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인물인지도는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지도는 약간 열세인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김 후보께서는 제도권 입성을 장담하는가.

▲솔직히 고전중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일시적으로 오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의 거품이 서서히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정됐을때 높던 지지도가 한순간에 거품이 빠지면서 바닥을 치던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당보다는 토론 등을 통해 누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일꾼인지를 판단해 인물중심의 투표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자기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보수층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뭉칠 것으로 예상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66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국매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5-5
대표이사 박 종 필

주 문 : (주)전국매일이 발행한 전국매일 2004년 3월 26일자 4면 『지역경제 살리기 혼신의 노력 다할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구갑)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형식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을 얼굴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지역 경제살리기 혼신의 노력 다할 터

광주 서구갑 열린우리당 염 동 연 후보

광주서구갑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우리당 염동연후보(사진)는 광주·전남의 현안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운을 띄웠다.

염후보는 "낡은 보수 수구세력 한나라당과 손잡고 3.12 국회쿠데타를 획책한 민주당은 이제 호남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자행한 민주당으로는 호남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며 "호남정치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의 출세와 영달에 눈이 먼 무능한 구시대 정치인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힘. 염동연이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호남정치 풍토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으며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정치라는 염후보는 허장성세로 지탄받은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되겠으며 광주발전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 국민의 삶의 질이 다같이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소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인사분야의 호남소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여진다.

인재발굴과 기용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지만 평균 5,000달러, 지역에 따라서는 3, 4,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국가 전체가 2만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과 비교할 때 너무도 대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나를 돕고 있는 연구팀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연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유권자들은 결국 '우리당'을 선택 할 것을 기대한다.

노 대통령이 누차 밝힌 대로 그는 호남에 큰 빚을 지고 있으며 우리는 노 대통령에게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남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한 대책은.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에서 이제는 이태백까지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심하기만 하다. 호남정치권에는 지역발전을 책임질 힘있는 정치인이 없다. 지역을 경영할 정치인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원할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지금 젊은이들과 실직한 가장들까지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정치인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힘. 염동연이 책임지겠다.

건물 신축과 도로 건설로 지역발전 해냈다고 떠벌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진 빚 염동연이 받아와 지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정무특보로써 앞으로의 정국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진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되기를 바란다. 링컨 대통령도 집권초기에는 여론으로부터 질타 당하고 그가 몸담았던 공화당

으로부터도 성원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이 링컨을 우습게 보았고 심지어 자신이 임명한 장군이 그를 만나주기조차 하지 않았다.

더더구나 미국의 절반인 남부가 떨어져 나가 내전을 치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내부의 결속을 이뤄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전쟁후에는 떨어져 나갔던 남부를 끌어안으면서 대화합의 역사를 이룩한 것이다.

만에 하나 참여정부가 끝나고 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항변하고 나선다면 나는 은퇴한 노대통령 대신 그를 변호하고 그와 맞서 토론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 노무현이 대권을 잡기 전 제일 먼저 나를 만났고 나에게 경선 캠프를 책임지는 좌장의 역을 맡겼기 때문이다.

씨를 뿌릴 때 그 농부를 도왔다면 수확이 끝나고 빈 들녘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는 그와 함께 해야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그 누구도 청문회장에 나갈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확신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나를 증인석에 세운다면 기꺼이 그 현장에 나갈 것이다.

또 다른 미래의 노무현이 나타나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것을 추궁한다면 나는 노무현의 증인이 돼 당당하게 증언하고 싶다.

우리는 역사의 부름을 받아 나갔고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의 결과가 이것인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나를 꾸짖어 달라.

안 건 번 호 : 2004자심68

언 론 사 : 주식회사 내일신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55
대표이사 장 명 국

주 문 : (주)내일신문이 발행한 광주내일신문 2004년 3월 13일자 3면 『국민에게 희망주는 깨끗한 정치 하고싶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광주 광산지구)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형식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견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인터뷰

"국민에게 희망주는 깨끗한 정치 하고싶다"

김 동 철 열린우리당 광산지구당 후보

-은행생활을 접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때가 1989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정치를 하려고 평민당을 찾은 것은 아니고, 단조로운 은행생활을 벗어나 야당인 평민당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 만 5년이 지

난 뒤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비전과 철학에 눈뜨기 시작했고, 당시의 정치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그만두고 1994년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전문위원 공채시험에 응시했다. 당 전문위원이 됨으로서 이제 비로소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걷게됐다.

-평소 정치개혁을 강조했는데 구상하는 정치개혁의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개혁은 지역주의 정치, 정경유착 및 금권정치, 1인 보스와 계보에 의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는 국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고 국론통합과 국력 결집의 발목을 잡아 국가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정치권에 만연돼 있는 정경유착, 금권정치도 청산해야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정치권 비리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1인 보스와 계보에 의한 하향식 정치 역시 청산 대상이다.

하향식 정치는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5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 왔는데 지난 대선과 열린우리당 국민참여경선을 계기로 상향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이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줬으니까 유권자인 국민이 지역주의 청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서 후보를 선택하면 지역주의는 청산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치와 경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고, 사회 및 경제의 룰을 지배해 왔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과 제도를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정비하기보다 각종 규제를 만들어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며 누리기만 했다.

저는 정치가 국정을 선도해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기에 정치는 곧 경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가 개혁되어 국정을 선도해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경제발전, 국가발전도 이룰 수 있다.

-DJ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15년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 일부에서 권력의 화신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어떤 학자나 정치인보다 국가경영철학과 비전,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 IMF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도 보스 정치, 계보정치 등 과거 정치 패러다임에서 성장해 왔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의사 결정과정에서 측근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본다.

-광주·전남은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이제 광주·전남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지?

광주·전남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다. 한국 역사를 진전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와 반독재는 과거의 화두다. 2002년 광주·전남이 노무현 후보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절대적 지지에는 이회창을 반대하는 정서와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두 가지 요소가 녹아있었다. 광주·전남의 절대적 지지에 담겨있는 정치개혁이 미래의 화두다. 광주·전남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변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다.

-광주·전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소외를 당했다는 주장이 많다. 광주·전남과 참여정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호남 소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때 집중 부각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현재의 노무현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은 했지만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영남권으로의 동진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호남 역차별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호남 소외론도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의회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개혁

의회를 구성하면 호남 소외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경제가 날로 침체돼가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고 若無光山(약무광산) 是無光州(시무광주), 광산이 없다는 광주가 없다는 이 말은 제 생각이다. 광주의 45% 지역과, 생산시설이 집약돼 있는 광산의 경제를 살려야만 광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산에 위치한 4개 산단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할 생각이다. 투자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대기업과 입주업체의 불합리한 하청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 발표회를 통해 전달할 생각이다.

-남은 선거기간동안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지?

정치를 시작한 이후 줄곧 조직과 돈에 의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고 이는 나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다. 조직선거는 금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반드시 부정과 비리로 연결된다. 국민참여경선 승리 후 당원과 지역주민 앞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저를 지지하는 당원,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도 이번 선거가 인물 중심과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학력 · 주요경력〉

· 송정 서초등학교 졸업
· 광주 북성중학교 졸업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산업은행 근무
▷평화민주당,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정책 보좌관
▷통합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법제사법 전문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선 선거대책본부 상황실 부실장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1급)
▷한국석유수출입협회 회장(現)
▷「광산포럼」 대표(現)

안 건 번 호 : 2004자심72

언 론 사 : 주식회사 주간 해진신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00-5
대표이사 김 철 환

주 문 : (주)주간 해진신문이 발행한 주간 해진신문 2004년 3월 31일자~4월 6일자 1면 · 2면 『'탄핵사과 · 주요현안 군민 · 당원 여론수렴 거칠 것' 의원직 사퇴, 군수 열우당 입당 등 여론조사』, 동일자 3면 『11개 분야 113건 · 읍면 공약 42건 발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해남 · 진도)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3면에 걸쳐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탄핵사과 · 주요현안 군민 · 당원 여론수렴 거칠 것' 의원직 사퇴, 군수 열우당 입당 등 여론조사

새천년민주당 이 정 일 후보

(2004년 3월 31일~4월 6일자 1면 · 2면)

이정일 해남 · 진도 국회의원 및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탄핵이 법상으로는 타당하지만 군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실시함에 대해 수 차례 사과 발언에 이어 현 향후 정치적 행보와 국회의원직 사퇴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30일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31일께 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내용 3면)

기자회견을 통해 노대통령의 당선에 헌신적으로 뛰었던 사람으로서 탄핵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고통을 받았다며,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며, 가시덤불을 이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의 작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닌 당원으로서도 용납이 곤란하다며 쇄신파 동료와 평화민주 개혁세력 등과 함께 연대해 갈 것을 밝힌 뒤 마음적으로는 이미 탈당이지만 약 1만명 군민의 의견이나 2천여 당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당문제는 추미애의원이 대표가 되므로써 잔류키로 했다.

이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와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과 농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로 지역 미래를 담보할 정책문제가 실종된 것이 아쉽다며, 농촌문제, 지역경제, 지역정치의 수구성 극복, 노인과 여성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쌀 개방을 앞두고 농업보호정책의 완성, 식량자급목표의 법제화를 통한 쌀산업보호 대책, 통일농협의 실현 완성을 위한 대북식량지원의 법제화 등에 군민의 지혜에 따라 전력할 것"을 밝혔다.

이어 기자 질의로써 군수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탈당시 군정에 전념을 약속해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군민을 생각해 잡지 못했으며,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중립을 약속하고 열우당 입당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비수를 꽂은 것으로, 이런 언행불일치는 본인이 탄핵에 대한 사죄 이상으로 군민에게 사죄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열우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으로는 무소속으로 당선돼 주민의 요구로 55년 정통의 민주당에 민주투사는 아니지만 입당해 대선 때 노대통령을 위한 재정위원장과 5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으나 정치 현실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며, 열우당은 수구보수의 결합체라고 답했다.

탄핵 당시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을 텐데 지금 사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열우당 지지호소, 선거결과와 재 신임연계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국민 감정을 지도부에서 이해 못한 결과라는 측면에서의 사과 및 탄핵전 탄핵득표수에 못 미쳐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사과를 얻기 위한 퇴로를 두자는 입장으로, 중재노력을 열우당과 했으나 마지막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자민련 등이 가세해 예상치 못한 탄핵가결이란 결과까지 되었다고 밝혔다.

11개분야 113건 · 읍면 공약 42건 발표

민주당 이 정 일 후보 기자회견

(2004년 3월 31일~4월 6일자 3면)

이정일민주당 국회의원후보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을 통한 공약을 발표 및 탄핵정국으로 국회의원 선택에 있어 깨끗하고 성실한 지역을 도모할 능력있는 후보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주당을 끝까지 아끼겠다고 밝혔다.

선거공약 발표회는 해남의 박희현도의원과 배억만 도의원, 송지면 정권용, 현산면 김향화, 옥천면 김창환, 화산면 장호성, 문내면 김평윤 그리고 산이면 임길수군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주민소환제,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 협의회 구성, 농어가부채경감, 농어촌 교육진흥, 대체에너지 메카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13개 분야에 걸쳐 113개의 공약을 발표하고, 해남과 진도 각 면별 공약으로 42개의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정일후보는 정치분야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약속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생기면, 주민소환투표에 응해 주민의 뜻에 따라 임기 중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실시했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거부, 중대사안 결정시 군민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 등을 약속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정책금리 추가인하와 상호금융금리 3%인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지속추진과 농업정책자금 지원확대, 겨울배추 계약생산 판매를 통한 생산농민의 안정된 소득보장, 국산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수산어업분야에서는 수산업직불제,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제도도입, 해남 진도의 중장기 종합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등을 통한 관광소득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읍면 정책으로는 해남읍에는 우슬체육관의 국비지원, 해남천살리기 환경모범사업, 소도읍가꾸기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근린체육공원과 산책로 조성을, 화산면에는 공룡전시관을 국비 혹은 도비 운영의 전시 박물관으로, 문내면은 우수영복원사업과 임하교 연륙교 사장교 재 건설을, 화원면에는 화원관광단지 조속개발과 청자도요지 발굴복원을, 산이면은 군사기지 문제 원만한 해결과 황토와 청자 도요지 사업 및 철새와 농협의 조화를, 마산면은 친환경특구의 신설을, 계곡면은 휴양림의 활성화와 시설원예농업육성 지원을 밝혔다.

옥천면은 친환경 쌀농업가 가공유통지원을, 삼산면은 삼산천의 생태천으로 가꾸기와 마한문화관광개발을, 북일면은 고분문화권 보존개발을, 북평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해지와 이진성 복원을, 송지면은 땅끝권과 군곡리 패총개발, 어불도 연육교 추진 등을, 현산면은 고대산성복원 및 덕흥리 화훼단지 지원을, 화산면은 상마도 활성화와 송평 해수욕장 및 관두리산 특성화 개발을 약속했다.

진도읍은 진도천 살리기와 소도읍 가꾸기를, 고군면은 오산마한유적지 개발과 희동관광기반시설 구축을, 군내면은 조류발전소와 명량대첩지 녹진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지산면은 소포지국 친환경농업지원과 횡단도로 개설을, 의신면은 첨찰산동백군락지 조성과 생태학습관 조성을, 임회면은 팽목항의 서남해안 중심항 육성과 남도석성복원 및 민속촌 관광자원화를, 조도면은 팽목항까지 4차선화와, 옥도-상조도, 라베도-해조도간 연육교 건설을 비롯한 장기적으로 조도면과 팽목의 연도 연육화 사업의 실시, 자가발전 능력 향상, 다도해 해양국립공원화 추진 및 조도면 창유항을 국가관리 3종항으로 개발 등을 공약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3

언 론 사 : 주식회사 여수로신문
전남 여수시 신기동 56-4
대표이사 김 승 하

주 문 : (주)여수로신문이 발행한 여수로신문 2004년 4월 1일자 1·8면 『큰 등대가 되겠다는

김재출 후보(무소속)』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여수갑)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정견 및 활동 상황을 인물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큰 등대가 되겠다는 김재출 후보(무소속)

민주당의 아성에서 이름 없고 가난한 김 후보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비윤리적인 타 후보들의 경선불복과 돈과 조직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와 거대한 현실 정치의 벽과 부조리라고 말한 김 후보는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란 무한한 사회변혁에 대한 희망과 도전이 우리가 군부독재를 겪으며 가슴깊이 새기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열정이라 생각하며 고향 여수를 떠나지 않고 여수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변함없이 고향을 지키며 사랑하겠다는 그의 공약과 약속을 지켜왔다.

김 후보는 전남 여수갑지구 후보자들 중 최연소 후보로 가장 활기차고 애향심이 깊은 절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전국 1위 34%의 기독교인구를 자랑하는 여수시 교인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및 학원연합과 남녀노소와 세대를 불문하고 높은 지지를 받으며 4.15 총선의 승리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실패로 희망을 잃고 좌절과 분노로 표류하는 여수를 위해 김 후보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재유치의 깃발을 들고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 겸 정책위원장으로서 재유치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설득한 결과 1년 만에 2012년 박람회 유치를 주장했던 광주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어느 정치인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길을 김 후보는 자신의 신념과 여수시민의 참여의지와 저력을 발판삼아 꿈을 이루어낼 이 시대가 원하는 개척자, 신실하고 새로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열린우리당 3차 공모 입당과 함께 여수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가장 빠르게 기자회견 (주승용, 김성곤, 김재출 후보 3인)을 가졌으며 이날 한결같이 열린우리당 여수갑지구당 후보경선을 시민경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희비가 엇갈리며 중앙당 경선에 의한 김성곤 후보의 갑지구당 후보확정에 따라 김재출 후보는 지난 2월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 일원 곳곳에서 열린우리당 여수갑지구당 후보 공천 천막농성을 펼쳐왔다.

100% 시민참여라는 경선이념에 동참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나 시민참여의 경선은 없었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부패와 불신이 만연하는 이 땅의 풍토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곤고함 속에서도 10여년간 시민과 함께 해 온 여수사랑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김재출 후보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한국정치와 진정으로 여수의 발전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며 3차 기자회견에서 외롭고 힘든 여수갑지구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후 김재출 후보는 여서동 구)송원백화점 앞에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4

언 론 사 : 주식회사 매일신문
대구시 중구 계산동 2가 71
대표이사 정 재 완

주 문 : (주)호남매일신문이 발행한 매일신문 2004년 4월 5일자 4면 『대구간판 '西 재섭 -東 강철'』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2인을 대구 지역 「간판주자」로 부각시키면서,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의 경우 「정권 실세」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대구간판 '西 재섭 - 東 강철'

4·15 총선에서 대구지역의 여야 「간판주자」인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후보와 열린우리당 이강철(李康哲) 후보는 어떻게 될까.

이들에게 간판주자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두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5선을 바라보는 중진으로 당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구의 정치적 입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정치적으로는 신인에 가깝지만, 정권의 실세로서 대구의 정치적 색채의 다양성 확보나 지역경제 회생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당선 여부는 이번 지역 총선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재섭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 맹주로서의 위치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굳힌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오는 2007년 대선까지 열심히 노력해 대권에 도전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해 좀체 속내를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것에 비춰보면 놀랄만한 태도변화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러한 의욕과는 달리 열린우리당 서중현(徐重鉉) 후보의 저인망식 선거전략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4선의원을 다시 키워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는 대구의 정치적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 후보측은 이같은 주장에 여론이 호응할 경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철 후보는 강 후보와 다른 측면에서 존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 실세」라는 그의 힘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측은 그 단적인 예로 여권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이 있는 점을 활용, 한전등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구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이 후보의 복안대로 동대구 역세권에 건설을 추진하는 쌍둥이 빌

딩에 한전을 유치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한전의 매출액은 2002년기준 21조476억원으로 서울시 예산(2002년 12조6천635억원)보다 8조원이나 많으며 직원수는 본사·자회사를 합해 1만9천명에 달한다. 한전 이전만으로도 대구는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대구의 정치적 「고도화(孤島化)」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도 이 후보 필요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싹쓸이로 인한 폐해는 16대 선거를 통해 이미 절절히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이후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바람과 함께 주성영 후보의 지지세도 급상승하는 등 동갑지역은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어 이강철 필요론이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5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사저널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대표이사 금 창 태

주 문 : (주)시사저널이 발행한 시사저널 2004년 4월 15일자 32~33면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무의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강원 태백시·정선군·영월군·평창군)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후보자의 정견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무의미"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인터뷰/"세대 교체 열망이 한나라당 삼킬 것"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라는 팻말이 보이기까지 진부톨게이트를 지나서도 한시간 가량이 걸렸다. 인구는 15만명이 채 안되는데, 면적은 강원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태백·영월·평창·정선.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로 불리던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을 만나 탄핵 정국과 총선 이후 국정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4월2일 임계-북면-나전으로 이어지는 그의 유세 행군 틈틈이, 이동하는 차안에서 이루어졌다.

스스로 선거운동을 해 보니 어떤가?

스물네 살 때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나 자신을 위해 악수를 하는 건 처음이다. 원래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려는 성격이 아니여서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했는데, 유권자들을 만날수록 소명의식이 더 강하게 생긴다.

왜 출마했나?

회사 취직하면 로비스트라고 할 것이고, 가만 있으면 비선 역할 한다고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외국 나가려고 했더니 야당에서 특검을 통과시켜 못 나가게 했다. 가만히 있다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그보다는 고향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나, 부담이 되나?

두 가지 측면이 다있다.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걸 잘 해내겠지'라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는 유리한 면이지만,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노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가 이후보 후원회장도 맡았던데.

출마를 결심한 후 후원회장은 절대 명망가를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괜히 폐만 끼치고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다. 그러고 나서 누구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회장이 선뜻 해주신다고 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지금까지 3백만원 구해다 주셨다(웃음).

특검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쉽게 치유될지 모르겠다.

썬앤문에서 5백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진술부터가 엇갈린다. (썬앤문) 김성래씨는 63빌딩에서 나한테 직접 주었다고 하고, (대통령 고교 후배인) 김정민씨는 맨해튼 호텔에서 자기가 자기 돈이라며 나한테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처음에는 증거로 천만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더니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특검에서 내 친인척 계좌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참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청문회도 안하고 특검까지 한 사안이다. 결국 거짓으로 판명날 일을 가지고 엄청난 국고와 국력을 낭비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또다시 탄핵이라니. 수명 1개월도 안 남은 사람들이 4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말이나 되는가? 노대통령은 무척 꼼꼼하고 누구보다 준비된 대통령이다. 지난번 홍석현(중앙일보)회장이 4시간 동안 대통령을 만난 후 차에 올라타며 한 첫마디가 "대통령 잘 뽑았는데!"였다고 하더라.

이번 총선은 결국 탄핵심판론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박정희 시절에 박권상씨가 38세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했고, 고 건씨가 41세로 도지사를 했다. 박씨가 DJ 정권 때까지 KBS 사장을 했으니 이 세력이 지난 30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셈이다. 그런데 3김 투쟁과 뒤엉켜 이 보수 세력이 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자 국민들 사이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2년 박찬종 후보가 얻은 100만, 1997년 이인제 후보가 얻은 5백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에게 쏠린7백만 표(단일화 효과)가 바로 그런 변화의 추동력이다. 그런 열망이 지난 1년 노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대선자금 수사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폭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세대교체 열망을 담게 될 것이다.

정동영 의장의 60~70대 폄하 발언이 세대 갈등을 겨냥했다는 비난이 있다.

진의가 어떻든 표현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변화의 주역이 바뀌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업체 사장들은 홍위병 세대지만, 부사장은 다 미국 유학파가 장악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나선 한국의 40대도 좌우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 노선으로 무장한 전문가가 더 많다. 오히려 (학생)운동만 한 사람은 적다.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한나라당호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의석 수가 어찌 되든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나라당 구성원도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1백20~1백30 석을 얻으면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재신임 카드는 상대방을 인정할 때 의미가 있는 얘기다. 탄핵까지 한 마당에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

국민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집권 2기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리라고 보는가?

국회가 바뀌면 정부·국회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입법부가 보충되고 인재 풀이 늘어나면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데려다 쓸 것이고, 야당 신진 세력들과도 자주 만나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국회·정부의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노사 문제만 해도 단계적 이행 방안이 2백 개에 이르는데,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정책 추진이 질적으로 달라진다.

야당 의원들을 내각에 발탁할 가능성도 있는가?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국회에 나가 연설도 하고 야당 당사도 찾아가고, 상임위원회 별로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노력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대화가 통하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박근혜 의원을 장관시키려고 만나기도 했던 것이다.

언제, 무슨 장관을 시키려고 했나?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며)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최병렬 대표가 대구에 가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의 속내가 확실히 드러났다. 이젠 다 지난 얘기다(이 대목에 대해 재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더 입을 열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10년간 연구해온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을 내 지역에서 실험하고, 소속 정당을 초월한 의회 모임을 만들어 정부와 건전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

안희정-국회, 이광재-청와대의 역할 분담이 무너졌다. 안씨와는 출마 문제를 상의했나?

아직 면회를 못 갔다. 희정이는 그림자다. 희정이가 (돈 만지는 역할을) 안했으면 나나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역할이 달랐을 뿐인데, 아픔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7

언 론 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8
대표이사 서 창 모

주 문 : (주)시민일보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4년 4월 9일자 4면 『후보자 주변 썰렁…얼굴 알리기 바빠』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부천소사의 경우 양강구도라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자만 다루었고, 서울 영등포갑 지역의 경우 3개 정당 후보자들만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제목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만 게재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14조(기사제목), 동기준 제15조(사진 게재)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후보자 주변 썰렁…얼굴 알리기 바빠

김문수 "지역기반다져 당선 자신"
김만수 "탄핵역풍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 부천 소사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는 탄핵이후 부천소사지역에 양강구도를 다져왔다.

탄핵역풍으로 김만수 후보의 지지율이 50%대를 상회한 적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지율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졌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유동인구가 많은 역곡 남부역 앞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비교적 검소한 옷차림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미니 인터뷰에서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 탄핵으로 30% 이상 상대후보가 앞섰던 지지율이 10% 정도 차이로 오히려 앞서고 있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사람들이 저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지역의 경우 40대와 50~60대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특히, 50대 이상은 20% 이상 앞서가고 있고 40대도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무척 고무된 모습이었다.

그는 "20대도 분위기가 좋은데 30대 특히 여성분들의 지지가 취약하다"고 말한 뒤 "이러한 분위기는 박근혜 대표의 효과도 크다"며 "안정적이고 향수도 있고 열린우리당처럼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 점이 매우 어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박풍(朴風)'이 수도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 후보의 선거캠프관리자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워낙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마. 여긴 왜 나와서 고생을 해 괜찮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다"며 밝은 표정을 나타냈다.

60대의 한 유권자는 "정치할 때 객관적으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고 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의 한 여성 유권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 지지하는 정당도 한나라당이고 TV를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호감도 간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당과는 상관 없이 김문수 후보가 성실히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도 성실히 잘 할 것 같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가며 지지를 호소했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호응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도 이날 저녁 부천역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김 후보 유세현장에 열린우리당의 분당 발언을 하고 영화배우 명계남씨와 함께 탈당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문성근씨가 지원유세를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만수 후보는 이날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천역에서 화려한 유세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부천시를 '부천특정시'로 지정하고 '경인전철지하화', 국무총리직속 '어린이 안정청'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참신하고 깨끗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총선연대에서 뽑은 낙선대상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자체적인 조사에서 6~10% 가량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다"며 "20~30대의 지지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40~60대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선거 개시일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정확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고 김문수 후보관련 "8년동안 잘했다고들 하는데 부천지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이고 환경이 열악하다. 결국 국회에서 한 일이라곤 싸움밖에 한게 더 있냐"고 말해 상대후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측은 최근 불어오는 박근혜 바람과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과 관련 "최근 며칠동안 지지율의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예전의 지지율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고 이제껏 여론조사를 통해 나왔듯 선거마지막까지 이런 분위기가 유

지될 것"이라 말해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김만수 후보의 유세전 내내 준비된 전광판에 열린 우리당의 TV광고인 탄핵가결 장면을 보여주며 유권자에게 탄핵 가결되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은 역 주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가락으로는 기호3번을 나타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대후보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에 김만수와 김문수는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유세전만큼 활기찬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20대의 한 유권자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고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김만수 후보는 잘 몰라서 지지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 김 후보의 지역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냈다.

한 30대 여성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워낙 지역기반이 튼튼하고 또 지역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당투표에서 다른 당을 찍을 진 몰라도 후보만큼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40대 남성 유권자는 "부천지역의 40대 이상은 모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많지 않다"며 "이제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역기반을 튼튼히 했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아서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유권자는 특히 "문성근씨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유세를 나와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지역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유권자들이 김만수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단순히 김 후보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이유로 지지를 주장하는 유권자가 대다수였다.

한 40대 남성 유권자의 경우 '지지후보가 있냐'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 김만수 후보가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지지이유에 대해서도 "기존 정치권이 좀 바뀌어야 하고 탄핵가결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찍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탄핵역풍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천소사지역의 경우 현재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1인2표제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는 인물중심으로 지지정당은 정책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진화 "시민단체 당선대상 올라"
김민석 "인물·정당 나눠 평가부탁"
서울시 영등포갑

서울 영등포갑 지역은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김민석, 열린우리당 김명섭, 자민련 손석모, 민주노동당 홍승하 후보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

이 가운데 현역의원인 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수성을 장담하고 있고,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이 지역은 고진화, 김민석 두 후보의 싸움에 주목을 끌고있다. 이들은 모두 82학번으로 고 후보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김 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386 후보다.

김민석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영등포을에서 출마하지 못하고 옆 지역구인 '갑'으로 옮긴 것은 영등포 을의 민주당 박금자 후보에게 공천과정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민주당 복당 전 부터 박후보가 영등포을의 기반을 다져왔던 터여서 김 후보는 복당 후 영등포갑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겨 같은 운동권 동지끼리 싸우게 됐다.

영등포 갑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지역 공약 가운데 최대 이슈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책과 뉴타운 건설 문제. 지난 6일 오후 8시 열린우리당 김명섭 후보는 영등포시장 앞에서 거리 유세전에 한창이었다.

현역의원으로서 인문고 유치, 신길3동 윤락가 철폐,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 성사 등 그간 성과를 제시하며 재선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명섭 후보는 특목고 유치와 관련, "과학고등학교를 방림방적 이전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어 "고속철도를 영등포역에 정차시켜 서남부지역의 물류중심지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영등포역 후문,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가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다. 고진화 후보는 "오늘 시민단체에서 당선 후보로 지명됐다"면서 "하지만 두 후보는 낙선 대상에 올랐다"며 한표를 당부했다.

고 후보는 특목고 설치와 관련, "이명박 서울 시장과의 담판으로 특목고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또 "영등포 관내 학교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이고 "부족한 학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진화 후보는 여의도와 목동을 연결하는 중심권으로 영등포를 재건하겠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벤처타운 및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등포역 일대 균형발전 촉진 지구를 선정해 거듭 나는 영등포를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영등포 중앙시장 입구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1인2표제가 시행되는 이번 총선에선 인물과 정당을 나눠 평가해 선택해달라"며 '인물론'을 피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탈당 후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던 김 후보는 '이번 17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제대로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한표를 부탁했다. 그는 타 후보들과 달리 교육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교육특구형 뉴타운을 만들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평생학습지역, 문화예술교육투자지역 선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 캠프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후보가 17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교육 문제 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권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중앙시장에서 9년째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성희(39·여)씨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교육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많다"면서 "제발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8

언 론 사 : 주식회사 황강신문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1 성은강변타운 2동 201
대표이사 김 병 화

주 문 : (주)황강신문이 발행한 황강신문 2004년 4월 6일자 3면 『장날찾아 거리유세, 적임자 강조 지지호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사진만 게재하면서 그 후보의 연설회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15조(사진게재)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장날찾아 거리유세, 적임자 강조 지지호소

지날 2일부터 법률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삼가장날인 2일, 삼가 백중약국 앞에서 권욱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연설이 있었으며, 이어서 한나

라당 김영덕 후보의 선거연설원이 나와 선거연설을 했다.

선거연설의 첫날 이어서인지 열변을 토해내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없었다.

지역발전에 자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였다.

다음날 3일은 합천읍과 의령읍의 장날로 권욱 열린우리당후보는 아침 일찍 합천읍장터에서 연설회를 가진후 의령을 향해 달려가 11시 경 의령장터 입구에서 연설회를 가졌다.

권욱 후보의 연설에 앞서 김병달사회자는 『차떼기 정당에 표를 찍어서는 안되며, 합천에서 변호사를 국회로 보냈더니 법 조문에만 메여있고, 농민들의 삶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당을 지지하고, 6.25때 부친의 전사로 어렵게 살아온 권욱 후보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며,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거친 권욱 후보는 경력과 능력이 풍부한 후보임을 강조, 표를 몰아 권욱 후보를 국회로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삼가와 합천읍 장터에서 연설회를 가진 권욱 후보는 『울산-합천-군산간 고속도로 건설, 가회 월계-의령 궁유간 도로 조기개설, 대양 이계-용주팔산간 군도2호선 조기개설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황강휴양특구 레포츠시설 개발, 3.1만세 기념탑건립(삼가), 농촌문제 연구소 및 상담소 개설,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새롭게 도약하는 합천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며 합천군민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또 권욱 후보는 『김혁규 대통령경제특보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합천은 물론 의령과 함안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힘있는 국회의원,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의령에서는 박희원 자민련 후보, 조국제 민주공화당 후보, 김판식 무소속 후보, 김영덕 한나라당 후보의 연설이 각각 있었다.

특히 김영덕 후보는 합천장터 연설에서 『강력한 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들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언을 꼬집고 노인을 폄하하는 열린우리당에 지지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4일에는 신반장터에서 연설회를 가졌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79

언 론 사 : 주식회사 경남여성신문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B/D 6층
대표이사 김 영 수

주 문 : (주)경남여성신문이 발행한 경남여성신문 2004년 4월 15일자 1면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이 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대표의 선거유세 활동을 전하면서 제목을 부각시켜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여타 정당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동기준 제14조(기사제목) 각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박근혜

본격적인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구 일대를 돌면서 탄핵정국으로 움츠린 텃밭 챙기기에 공을 들였다.

박 대표 체제 이후 첫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은 이날, 대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나라당의 아성임을 실감케 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진하게 배어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박 대표에 대한 인기는 무척 높은 편이었다.

박 대표는 1일 오전 10시30분쯤 한나라당 강재섭·주호영 후보 등 대구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대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서문시장에는 박 대표의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박 대표가 시장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상인들까지 가세해 박 대표를 환영했다.

이날 박 대표가 다가서자 지지자와 상인들은 'I LOVE (아이 러브) 박근혜', '장하다 육영수 여사의 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 박근혜!'를 연호하며 악수를 청했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박근혜 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힌 하트 모양의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40~50대 여성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무척 높았다. 박 대표가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동할 때는 200~300여명의 상인과 지지자들이 따라 다녔고, 시장 상가 2~3층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박 대표를 환영했다. 박 대표는 상가에서 손을 흔드는 상인들에게 역시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박 대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먹고사는 문제'를 거론하며 민생해결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재래시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어디서나 먹고사는 문제로 근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싸우는 정치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해 지지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나라당이 보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고 "결국 지금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사과하고 반성해 한나라당이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대표들과 면담을 마친 박대표는 사무실을 빠져 나오려 했지만 몰려든 지지자와 상인들로 복도가 막혀버렸다. 결국 박 대표는 수행원들에게 업힌 채 사무실을 빠져나와야 하는 '즐거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문시장 방문을 마친 박 대표는 동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서 "좋은 정치를 하다 보면 전국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거대여당, 아찔한 일...급진적 모험주의적 여당 될 것"

박 대표는 "지금까지 예상대로라면 열린우리당이 200석을 훨씬 넘을 것 같다"면서 "200석이 넘으면 여당 하나에 하나마나한 야당 몇 개가 쪼개져 있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거대여당 견제론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특히 "만약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지난 1년동안 여당 행태로 볼 때 급진적·모험주의적·인기영합적인 행보로 또다시 이후 4년을 보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가 제 역할을 하느냐에 국운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북구 매천시장과 남구 봉덕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또 자신의 출마지인 달성군 선관위에 들러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화원시장을 잠시 찾은뒤 곧바로 박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낮 12시44분 발 KTX(고속철도) 차량에 몸을 실었다.

3. 경고문 게재결정

안 건 번 호 : 2004자심28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는 전북도민일보 2004년 2월 18일자 11면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제하의 칼럼과 관련해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전북도민일보 11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라.

이 유 : 당위원회는 전북도민일보가 2004. 1. 26.자 11면에 제17대 총선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경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함에도 (주)전북도민일보가 2. 18.자 11면에 또다시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은 당위원회의 「경고」결정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당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과문」게재의 전단계인 「경고문」게재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全北春秋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김 태 식 국회부의장

요즘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 등 각종 비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도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두 가지 핫이슈 - 이라크 파병문제와 FTA협정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그에 관한 소론을 밝히고자 한다.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나

먼저, 이라크파병문제다.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다수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국익의 최우선 과제임을 내세워 이라크에 대한 제2차 전투병 파병안을 155:5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 파병안의 내용이 갖고있는 문제점-예산상의 문제, 이라크측의 주권문제, 부대편성 내용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그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부의 파병결정과 우리국회의 소몰이식 파병안 동의를 보면서 국익이란 이름의 우리의 선택이 지나치게 전략개념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전술개념에 충실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내 자신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거

기서부터 우리의 안보가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경제가-수출시장확보, 컨츄리리스크개선(국가신인도), 해외자본유치와 이자부담경감, 심지어 전후복구시장의 특수경기 참여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듯이 모든 우리의 국운개척은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의 틀 위에서 가능하다는데 크게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존중의 문제는 시장경제논리에서 보면 비교역적 상품가치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현실국제정치에서 시장경제논리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그러한 현실인식과 기회주의적 판단은 다분히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등 원칙과 철학에 대한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문제해결을 민족사적 숙제로 안고있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민족사적 생존전략의 수립은 개별전투에서 이기는 전술개념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FTA 협정에 대한 비준의 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방경제로의 이행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의 기조로 삼고 있는 우리가 FTA 체결협정만을 그 대의에서 벗어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방적으로 동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엄연한 사실은 시장경제의 논리 -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가격메카니즘 속에서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 비교역적 상품(농산물)에 대한 일정분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자구노력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대응논리의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농민과 함께 투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서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7개월씩이나 늦추어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임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정글법칙 대비한 경국지책

정부와 또다른 경제계의 일각에서 FTA가 비준되어야만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유지되고 우리의 공산품 수출시장이 보장된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온 것은 농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폭발하고 식량안보나 환경의 보존 등 공익적 기반이 파괴될 때를 포함한 민족경제 생존전략수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소홀히 하면서 단기처방으로서의 전술개념에만 매달리는 과오를 범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험준한 계곡을 헤매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쯤은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강대국 시장논리의 정글 법칙에 진정으로 대비할 줄 아는 경국지책 이야말로 한 시대를 담당해야 할 정치인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난 이라크 파병안과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모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의 결정을 놓고서는 자괴의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전북도민일보 2004. 2. 18.자 11면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란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를 적용, 경고한다.

경고문 게재결정에 따른 보도문

전북도민일보 : 『경고문』 제하의 기사
(2004년 3월 16일자 11면)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전북도민일보 2004. 2. 18.자 11면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2. 26.자 11면 '지역인재풀시스템이 필요하다', 2. 27.자 11면 '여성의 정치참여 없

이 정치개혁없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란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를 적용, 경고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30, 2004자심31 병합

언 론 사 : 주식회사 서울일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9
대표이사 박 진 석

주 문 : (주)서울일보가 발행한 서울일보 2004. 2.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11면, 동년 동월 25.자 11면, 동년 동월 26.자 11면, 동년 동월 27.자 11면, 동년 3. 2.자 11면 『국민의 선택과 변화』라는 저서의 광고와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7면에 게재된 위 저서에 대한 분석과 소개기사와 관련해 (주)서울일보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일보 11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라.

이 유 : 서울일보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평택갑)와 관련해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11면, 동년 동월 25.자 11면, 동년 동월 26.자 11면, 동년 동월 27.자 11면, 동년 3. 2.자 11면에 제17대 총선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연속적으로 광고하고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7면에 위 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홍보성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 경력 등을 이틀 연속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각 위반】

이에 당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문」게재의 전단계인 「경고문」게재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광고 - 국민의 선택과 변화 (자심30)

(2004년 2월 23일자 7면, 2월 24일자·25일자·26일자·27일자 각 11면, 3월 2일자 11면)

80년대 격정의 시기에 학생 활동을 주도하다 시대의 역경에 밀려 渡美한 후 미국American University 국제학생회대표를 역임하고 미 공화당 전당대회 한국

국회의원 전당대회 통역 및 수행비서와 미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대책본부 인턴 등과 한국자유 총연맹 청소년 대표 등을 두루 거치며 선진국에서 정치를 익힌 젊은 학술가로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현실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되짚어본 이시대의 필독서

대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금 16대 대선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은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국민적 축제가 되지 못하고 '전장'으로 인식 되어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보다 성숙한 정치 발전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다.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변화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읽었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당선자는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야하고, 낙선자는 공인으로서 당의 후보로서 겸허히 반성하고 자신의 패배를 정치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 정치는 특정개인의 영향력에서 좌우되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정책 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序文 중에서

- 저자약력

김 성 수

· 경기 오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 미국 Americian Univ. 정치학 학사
· 미국 Marym ount Univ. 인류학과 석사
· 미국 USC 정치학 석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서출판 亦樂(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310-80(주)지시코 별관 3층 전화 02-3409-2058, 정가: 12,000원)

'국민의 선택과 변화' (자심31)

(2004년 2월 23일자 7면)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

총선을 앞둔 지금 지나간 선거를 되짚어 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7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6대 대선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한양대 연구교수 김성수 박사의 「국민의 선택과 변화」-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도서출판 亦樂)에서 출판 되어 화제다.

김성수 박사는 경기도 평택(송탄)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던 중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와 미국 남가주대학교(use)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이론에 관심을 두고서 정치이론과 현실정치의 괴리에 대한 고민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16대 대선에 대한 분석도 이런 고민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책에서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한국정치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은 지난 과정을 하여 정치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성의 바탕 위에 발전할 수 있으며 16대 대선이 끝나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으나 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이나 분석의 글은 많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고 과정의 추적과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적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선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가 승자와 패자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정치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는 선거를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읽는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국민의 선택,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분석과 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

저자의 말대로 "16대 대선 과정 및 결과의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수많은 희생과 오랜 산고 끝에 탄생시킨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의 커다란 과제를 안

고 있는 한국정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국민경선을 통한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후보단일화,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증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주요 선거 정책과 공약, 그리고 대선 선거 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16대 대선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가지 사건 및 사회, 경제, 정치, 국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지율 변화의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저자는 지난 16대 대선의 의미를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1장 '국민경선과 당내 후보선출', 5장 '인터넷 영향과 국민 참여'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것이며, 나머지 부분인 제2장 '후보 단일화', 제3장의 '정책과 공약', 제4장 '지지율 변화' 부분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책에서는 16대 대선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매체의 등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인적 동원 중심의 정치형태를 온라인상의 토론과 비판 문화로 바꾸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았던 20, 30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어가던 시대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린 만큼 국민의 소리와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눈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변화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읽었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서출판 역락 발행, 270쪽:12,000원 02-3409-2058)

한국정치현실 · 民意소재

(2004년 2월 24일자 7면)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

총선을 앞둔 지금 지나간 선거를 되짚어 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7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6대 대선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한양대 연구교수 김성수 박사의 「국민의 선택과 변화」 -16대 대선의 정치학적 분석-(도서출판 亦樂)에서 출판되어 화제다.

김성수 박사는 경기도 평택(송탄)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하던중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와 미국 남가주대학교(use)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이론에 관심을 두고서 정치이론과 현실정치의 괴리에 대한 고민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16대 대선에 대한 분석도 이런 고민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책에서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한국정치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은 지난 과정을 하여 정치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성의 바탕 위에 발전할 수 있으며 16대 대선이 끝나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으나 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이나 분석의 글은 많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고 과정의 추적과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적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선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가 승자와 패자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점 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정치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선택과 변화]는 선거를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읽는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국민의 선택,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분석과 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

저자의 말대로 "16대 대선 과정 및 결과의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수많은 희생과 오랜 산고 끝에 탄생시킨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국민경선을 통한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후보단일화,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증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주요 선거 정책과 공약, 그리고 대선 선거 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16대 대선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가지 사건 및 사회, 경제, 정치, 국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지율 변화의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저자는 지난 16대 대선의 의미를 '적극적인 국민 참여의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1장 '국민경선과 당내 후보선출', 5장 '인터넷 영향과 국민 참여'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것이며, 나머지 부분인 제2장 '후보 단일화', 제 3장의 '정책과 공약', 제4장 '지지율 변화' 부분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책에서는 16대 대선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매체의 등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인적 동원 중심의 정치형태를 온라인상의 토론과 비판 문화로 바꾸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았던 20, 30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어가던 시대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린 만큼 국민의 소리와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눈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변화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읽었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서출판 역락 발행, 270쪽: 12,000원 02-3409-2058)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서울일보가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11면, 동년 동월 25.자 11면, 동년 동월 26.자 11면, 동년 동월 27.자 11면, 동년 3. 2.자 11면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연속적으로 광고하고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7면에 위 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홍보성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 경력 등을 이틀 연속 게재한 데 대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등을 적용, 경고한다.

경고문 게재결정에 따른 보도문

서울일보 : 『경고문』 제하의 기사
(2004년 3월 17일자 11면)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서울일보가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11면, 동년 동월 25.자 11면, 동년 동월 26.자 11면, 동년 동월 27.자 11면, 동년 3. 2.자 11면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서를 광고금지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연속적으로 광고하고 ▲2004. 2. 23.자 7면, 동년 동월 24.자 7면에 위 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홍보성 소개 및 분석과 함께 인물사진, 경력 등을 이틀 연속 게재한 데 대해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등을 적용, 경고한다.

안 건 번 호 : 2004자심33, 34 병합

언 론 사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주 문 : (주)전북도민일보는 전북도민일보 2004년 2월 26일자 11면 『지역인재풀시스템이 필요하다』, 2월 27일자 11면 『여성의 정치참여없이 정치개혁 없다』등 제하의 칼럼과 관련해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전북도민일보 11면에 별지 목록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라.

이 유 : 당위원회는 전북도민일보가 2004. 1. 26.자 11면에 제17대 총선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경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함에도 (주)전북도민일보가 2월 26일, 27일자 11면에 또다시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각 위반】은 당위원회의 「경고」결정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당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동일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과문」 게재의 전 단계인 「경고문」 게재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기사내용

▌태조로▐

지역인재풀시스템 필요하다 (자심33)

김 동 전 전북지역사회연구원 이사장
(2004년 2월 26일자 11면)

지금 우리나라 실업 인구중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1% 늘어날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의 고용탄성치를 측정한 결과, 1997년 말 외환위기 전 평균 0.33에서 작년에는 0.16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재 키우는 풍토 필요

고용 탄성치는 경제성장률과 취업증가율의 관계를 수치화한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똑같은 경제성장을 해도 작년의 취업자 증가 비율이 외환위기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일자리 창출이 올해의 최대 경제운용 방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힌바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만 늘리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투명한 일자리 공개되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막연하게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구체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느라고 사교육비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해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3,4학년생 4천343명을 조사해서 밝힌 대학생 취업 사교육 현황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학생 사교육 현황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3%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1인당 연평균 취업 사교육비는 127만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연평균 취업 사교육비는 4학년생 235만원, 3학년생 113만원, 2학년생 99만원이었다. 이제 사교육비는 유·초·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지경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 스스로가 키워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참으로 필요하다.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 사고방식으로 중앙 우선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지금은 지방분권의 시대이다.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대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회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낀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자녀를 먼저 지방대에 보내 공부하게 하고, 지역의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외국이나 중앙에서 찾지 말고 지방대를 졸업한 우리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여 그들의 대학교육이 취업준비가 아닌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기업연계시스템 구축

해마다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3만 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최근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계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실업자 2명중 1명이 도내를 떠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내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들에 대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역 인재의 데이터베이스'와 '지역의 투명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지역인재풀(Pool)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인재들에게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일자리가 있으며, 그곳에 가면 장래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방 기업과의 연계시스템의 사전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이 지방의 기업에 취업하고 지방의 기업이 지역의 인재들을 선택하는 '지역인재의 선(善)순환 구조'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태조로▐

여성의 정치참여없이 정치 개혁없다 (자심34)

박 영 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년 2월 27일자 11면)

'차 떼기'로 일컫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비정상적 행태는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 회의감을 키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돈' 등식 깨야

대기업의 정치 헌금은 다름아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비열한 짓이나 다름없다. 이익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정치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품가격에 정치 자금을 전가할 게 뻔하다. 국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부당한 정치 자금까지 감당하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의 손을 빌어 정치 자금을 전달했을 뿐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정치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

연일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거물급 정치인의 연이은

검찰 소환 장면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치=돈'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상적인 정치제도가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안되지만 자연스럽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자행되어왔다. '차 때기'는 바로 그 정점의 일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국내 재벌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씩 대선 자금을 강취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말이 좋아 정치헌금이지 강탈이다.

물론 이는 정권 교체에 대비한 기업의 보험 가입이라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행과 문화를 조장한 정치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왜 우리 정치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남성 중심의 마초이즘을 빼놓을 수 없다. 접대와 돈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은 돈 정치라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돈 정치로 얼룩진 이 때 정당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외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구습과 관행을 버리고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유독 정치권만 정체를 고집한다면 정치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여기에 여성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흐름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모성애는 부패 정치청산에 소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여성이 전체 유권자의 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72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하다.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활발하다. 또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다는 사실은 여성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자원의 배분이기 때문에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배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당연하다.

여성 구색맞추기에 활용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전달되지 못했던 것은 여성 정치인들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가 필요해서 여성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정치의 장에서 여성은 남성중심의 정치를 정당화하는데, 혹은 구색 맞추는 데에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중심의 부패한 정치문화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오는 4.15 총선은 부패한 정치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선거 혁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이익을 정치에 전할 수 있는 가교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으로 여성후보들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당의 지원 여부는 그 정당의 개혁성과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전북도민일보 2004. 2. 18.자 11면 "국익의 선택-전술적 잣대를 경계한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고정칼럼란에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결국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를 적용, 경고한다.

경고문 게재결정에 따른 보도문

〈2004자심28 경고문 게재결정에 따른 보도문 참조〉

제2장 시 정 요 구

시정요구인이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비일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발부 받아 사법처리 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1
시정요구인 : 이 성 구 (서초갑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피시정요구인 : 내일신문
접 수 일 : 2004. 2. 27.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서울 강남권 선거사범수사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13일자 23면)

내 용 : 검경이 선거사범 엄단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권 유력 공천후보자들의 불법선거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유력 여당 공천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가 하면 등반대회 참석경비를 제공받은 수백명의 유권자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초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이 모씨가 모 산악회에 개최한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비일체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초서는 공천신청자, 산악회장 등을 비롯해 등반대회에 참석한 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지금까지 50여명을 수사한 상태다. 경찰은 향응을 제공한 이씨는 물론 등반대회에 참석한 유권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등이 경비제공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시정요구이유

내일신문은 2004년 2월 13일자 『서울 강남권 선거사범수사 본격화』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모 산악회에서 개최한 등반대회에 참석해 경비일체를 제공하여, 서초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았으며 시정요구인과 등산에 참여한 전원이 사법처리 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시정요구인은 향응이나 경비를 제공했거나 서초서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4년 2월 13일자(석간) 내일신문 사회면 23면에 보도된 『서울 강남권 선거사범수사 본격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초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이모씨가 등산대회에 참석해 경비일체를 제공하여 경찰이 향응을 제공한 이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인 이성구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내일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3월 3일자 23면)

내 용 : 2004. 2. 13자 내일신문 사회면 23면에 보도된 『서울 강남권 선거사범수사 본격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초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이 모씨가 등산대회에 참석해 경비일체를 제공하

여 경찰이 향응을 제공한 이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인 이 모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시정요구인에게 35,467,000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2
시정요구인 : 이 기 하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국민일보
접 수 일 : 2004. 4. 3.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17대총선 등록후보자 내역』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2일자 13면)
내 용 :

(도표 생략)

(단위 : 천원)

선거구	당 이 름	나이	직 업	재 산	병역	납세액	체납액	전 과
오산	한 이 기 하	39	직업전문학교장	1080036	필	67803	35467	없음
〃	민 임 창 열	59	정당인	1102900	필	52,330	0	1건
〃	우 안 민 석	37	대학교수	216889	필	12,829	0	없음

(도표 생략)

시정요구이유

국민일보는 지난 4월 2일자 13면 『17대총선 등록후보자 내역』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과거 체납세액을 3546만 7000원이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수원세무서장 발행증명서를 통해 현재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4년 4월 2일자 13면에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이 35,467,000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6일자 2면)
내 용 : 4월 2일자 13면에 게재된 '17대 총선 등록 후보자 내역' 표에서 한나라당 이기하(경기 오산) 후보의 체납액이 3546만7000원이라고 기록됐으나 이는 선관위가 체납내역 총액을 현 체납액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이 후보는 현재 체납액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인에게 35,460,000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3
시정요구인 : 이 기 하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동아일보
접 수 일 : 2004. 4. 3.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7대 총선 누가 나오나』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2일자 D2면)

내 용 :

(도표 생략)

▲ 오 산

(단위 : 만원)

이 름(나이)	정 당	경 력	병 역	재 산	납세액	체납세액
이 기 하(39)	한	삼성 C&C 대표	현역	10억8003	6780	3546
임 창 열(59)	민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기록없음	11억290	5233	-
안 민 석(42)	우	당 중앙위원	장교	2억1688	1282	-

(도표 생략)

시정요구이유

동아일보는 지난 4월 2일자 D2면 『17대 총선 누가 나오나』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과거체납세액을 3546만원이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수원세무서장 발행증명서를 통해 현재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4년 4월 2일자 D2면에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이 35,460,000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6일자 A7면)

내 용 : △2일자 D섹션 '17대 총선 누가 나오나' 표 중 D2면 경기 오산 한나라당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은 3546만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시정요구인에게 35,467,000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4
시 정 요 구 인 : 이 기 하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중앙일보
접 수 일 : 2004. 4. 3.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후보 20% 5년간 세금 100만원도 안내』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2일자 5면)

내 용 :

(전략)

체납 세금 많은 후보자

*1일 오후7시 현재

순위	정 당	지역구	성 명	체 납 액(원)
1	자민련	인천 연수	이경자	6억9811만1000
2	한나라당	구리	전용원	6억8201만5000
3	자민련	구미갑	박준홍	1억7538만4000
4	자민련	은평을	임왕혁	1억233만9000
5	한나라당	구미을	김태환	9858만3000
6	한나라당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5868만7000
7	자민련	김해을	안석호	5850만
8	한나라당	오산	이기하	3546만7000
9	민주당	용인갑	류희성	3247만6000
10	자민련	대구 달서병	김부기	2925만9000

*5년간 본인 및 직계가족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분임

(후략)

시정요구이유

중앙일보는 지난 4월 2일자 5면 『후보 20% 5년간 세금 100만원도 안내』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과거체납세액을 3546만원이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수원세무서장 발행증명서를 통해 현재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4년 4월 2일자 5면에 경기도 오산 한나라당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이 35,467,000원으로 체납 세금 많은 후보자 8위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기하 후보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5일자 2면)

내 용 : 4월 2일자 5면에 게재된 체납 세금 많은 후보자 표에서 한나라당 이기하(오산)후보가 3546만 7000원을 체납해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선관위가 체납내역 총계를 현 체납액으로 잘못 처리해 빚어진 오류로 李후보는 현재 체납액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정요구인에 대해 여타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보도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사항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5
시정요구인 : 김 성 진
(인천시 연수구 민주노동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인천연수저널
접 수 일 : 2004. 4. 7.
처 리 결 과 : 경 고

보도내용

연수저널 : (1) 『국내 최대 노인센터 연수구에 건립되나』 제하의 기사
(2004년 3월 31일자 2면)

내 용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부지로 옥련동 194번지 석산 주변 일대가 검토돼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구에 따르면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종합문화센터는 총 17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검사를 마치고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 남구, 계양구 등 4개구 5개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 추진중인 노인종합문화센터에는 작품전시관과 영화관, 건전무도장, 수영장, 볼링장, 이·미용실, 노인전문병원 등과 잔디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산책로, 정자와 옥외시설이 들어서는 고급 시설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 시설 운영에 유·무료 프로그램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 효친 사상과 노인계층의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석산 주변은 남동, 부평, 서구 등 구도심과 송도신도시로 대표되는 신도심이 연계되는 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교통 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어 시에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지역에 노인종합문화센터가 유치된다면 지역내 현안

문제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석산 일대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춘동 주민 김모씨는 "석산일대는 개발의 필요성은 매번 제기돼 왔지만 방향은 잡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며 노인종합문화센터의 유치를 통해 석산일대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련동 주민 이모씨는 "옥련동에는 20여개 가까운 크고 작은 경로당과 노인정이 있지만 공원이 부족해 노인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부족했다며 노인종합문화센터를 유치해 낮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바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황우여 국회의원은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과의 면담에서 노인종합문화센터와 관련 옥련동 유치를 강력히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 제하의 기사 (2004년 3월 31일자 7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달라진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한다고 보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에 후보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후보 나름대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각 후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해 지난 선거의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넘어 표심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후보 - 사이버 여론 존중, 어린이 홈페이지

황우여 후보 사무실에서는 지난 2월 홈페이지를 재 오픈하며 사이버 철학이라는 글을 통해 외형적 활동을 과시하기 보다 내실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동일한 ip로 하루에 100번을 들어오더라도 단 한번의 카운트가 적용되게 해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를 세는 다른 사이트와는 차별을 두고 사이버 여론을 청취하는데 노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홈페이지 안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적인 활동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한편 어린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http://www.hwy.pe.kr/

▲민주당 정종열 후보 - 탄핵 반대, 인권 운동가로서의 모습

민주당 정종열 후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정종열의 인권이야기라는 홈페이지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이트에는 인권상담실, 정종열 민주화운동, 시민인권연구센터 등이 있고 갤러리와 동영상 자료실에서는 그 동안 언론에 비춰진 인권 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담아 유권자들로부터 인권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로서 표현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내 입장인 탄핵지지와는 반대로 법조인으로서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http://www.jyjeong.com/

▲열린우리당 고남석 후보 - 지역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열린우리당 고남석 후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온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고남석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다른 후보들의 평면적인 홈페이지 관리와는 달리 팝업 창을 통해 고남석 후보가 지역정치인으로서 활동해온 모습을 알리고 있다.

또한 카테고리를 간단 명료하게 해 인터넷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도 쉽게 들어와 볼 수 있게 했다.

http://www.namseok.com

▲자유민주연합 이경자(http://www. leekj.pe.kr/) 후보는 여성문인으로서의 모습과 지역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홈페이지에 담고 있고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http://ilovejin.org/)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가로 인천에서 뛰어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무소속 최용식 후보(http:// www.yeonsuman.com/)는 전직 영자 신문 기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어마을캠프와 영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홈페이지에 담고 있다.

(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본지 주최 연수구 후보자 합동토론회』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7일자 1면)

이번 토론회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한나라당 황우여 후보와 열린우리당 고남석 후보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예술의 전당 유치와 입지선정 문제였다. 연수구와 인천시의 문화 진흥을 위해 예술의 전당 유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에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듯 했으나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황우여 후보는 교육은 완결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진흥화해서 연수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송도 유원지 내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500억, 시비300억, 특별교부금 등 총 천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황후보는 예술의 전당 사업은 1천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고 적어도 5만명의 고용효과를 낸다며 관계 기관과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을 맞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남석 후보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나 제반의 유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장점을 먼저 설명하고 황후보의 앞서 제안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석산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 흉물스럽게 나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폭포를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예술의 전당 형태로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남석 후보의 예산과 유치에 대한 집권 여당에 이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후보는 예산 문제는 여당이라서 많이 주고 야당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예술의 전당과 관련 무소속 최용식 후보는 황우여 후보가 국립예술의 전당을 인천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이라며 건물만 짓고 인천에 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 구월동에 있는 인천 종합문화회관도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만 지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정요구이유

1. 2004년 3월 31일자 2면 『국내 최대 노인센터 연수구에 건립』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후보에 대한 부각 보도를 한 데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2004년 3월 31일자 7면 『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는 여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를 사용해 고딕체로 소개해줄 것을 요청한다.
3. 2004년 4월 7일자 1면 『본지 주최 연수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는 토론회 쟁점이라고 보도된 '예술의 전당'에 관한 내용은 네 후보의 쟁점사안이 아니었음에도 1면에 황우여 후보가 발표한 국립 예술의 전당 조감도와 함께 게재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1. 2004년 3월 31일자 (82호) 『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 기사에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측 홈페이지 기사 내용을 다시 싣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싣지 못한 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http://ilovejin.org)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가로 인천에서 뛰어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지난 2004년 4월 7일자 1면 기사내용 중 '토론회 쟁점' 기사는 네 후보의 쟁점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면에 게재한 것에 대해 독자들과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경고 결정문

주　　문 : (주)인천연수저널이 발행한 연수저널 2004년 3월 31일자 2면 『국내 최대 노인센터 연수구에 건립』, 2004년 4월 7일자 1면 『본지 주최 연수구 후보자 합동토론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한다.

신청취지 : 1. 연수저널 2004년 3월 31일자 2면 『국내 최대 노인센터 연수구에 건립』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후보에 대한 부각 기사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바란다.

2. 연수저널 2004년 3월 31일자 7면『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http://ilovejin.org)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가로 인천에서 뛰어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의 기사를 게재하라.

3. 연수저널 2004년 4월 7일자 1면『본지 주최 연수구 후보자 합동토론회』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제목 : 편파보도에 대한 사과글, 내용 : 지난 2004년 4월 7일자 1면 기사내용 중 '토론회 쟁점' 기사는 네 후보의 쟁점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면에 게재한 것에 대해 독자들과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사과 말씀드립니다.】를 게재하라.

이 유 : 1. 연수저널 2004년 3월 31일자 2면『국내 최대 노인센터 연수구에 건립』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노인센터 건립이 구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후보의 공약사항과 연관된 활동을 보도하는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2. 연수저널 2004년 3월 31일자 7면『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측이 2004년 4월 13일자에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보도문을 게재하겠다고 답변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시정요구인의 요구가 받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수저널 2004년 4월 7일자 1면『본지 주최 연수구 후보자 합동토론회』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황우여 후보가 발표한 국립 예술의 전당 조감도 등까지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1, 3의 사항에 대해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기준 제2조(형평성) 각 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연수저널 :『정정』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14일자 7면)

내 용 : 지난 82호 7면 '후보자들 사이버 선거전 치열'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 관련 내용이 고닥체 처리가 않됐기에 다시한번 게재합니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http://ilovejin.org/)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가로 인천에서 뛰어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정요구인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부유세 도입과 부산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이 기사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6
시정요구인 : 채 선 수(부산시 금정구 자민련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부산일보
접 수 일 : 2004. 4. 12.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부산일보 : (1)『금정산 고속철 관통 여야 바뀐 '갑론을박'』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9일자 8면)

내 용 : 5명의 후보가 참석한 7일 금정구 총선 시민패널과 후보 간 이슈 토론회는 이날까지 진행된 토론회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참석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후보자들은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이슈별로 피아 구분을 달리하며 '5인 5색'의 주장을 펼쳤다.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과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이헌재 패널의 첫 질문부터 찬반 의견

이 엇갈리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는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방송사의 탄핵보도가 드라마처럼 매일 방영되면서 한나라당이 지지율 하락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다른 후보들이 '국가 앞잡이인 방송이 혼란을 가중시켰다'(채 후보), '방송의 실질적 주인은 정부나 기업 등에 있는 것 같다'(노 후보)며 박 후보를 지원했다. 그러자 KBS 간부 출신인 박원훈 후보는 '편파보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반격을 가했다. 민노당 김석준 후보도 '국민여론 반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박 후보를 엄호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채 후보와 박승환 후보가 공영성 훼손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방송 독립을 위해 통합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당의 17대 총선 후보 공천 작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편이 다르게 갈렸다. 채·노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온 박승환, 박원훈 두 후보를 겨냥하며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밀실야합 공천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방송사 편파보도에서 설전을 주고 받았던 박승환 박원훈 두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승환 후보), '영입된 케이스로 밀실야합공천은 아니다'(박원훈 후보)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며 방어막을 쳤다.

부산 인구와 기업체의 역외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떠나고 이에 따라 인구도 줄어든다'고 나름대로의 정답(?)을 제시했으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박승환 후보는 '대기업 본사와 공기업의 부산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김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원훈 후보가 '부산 해양특별시 승격'을 아이디어로 내놓자 '서울특별시 폐지'를 주장한 노 후보가 '지방자치에 어긋난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금정산 자락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훼손 대책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

◇이슈 토론 내용 요약

이슈 \ 후보	한나라 박승환 후보	우리 박원훈 후보	자민련 채선수 후보	민노 김석준 후보	무소속 노창동 후보
공영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과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심의위원회 활성화 ·편성권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시급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공영방송 공익성 확보되어 있음 ·탄핵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려면 편파성이 입증돼야 ·수신료 더 올려야 하고 수신료를 통해 방송 통제해선 안돼	·수신료는 국민이 내지 말아야 ·공영방송 의무 기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이 편파·왜곡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	·방송위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광고의존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높여야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 징수 바람직	·방송위원회 제 기능 확보에 노력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수신료 인상해야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한 재정을 통해 가능
부유세 도입과 부익부 빈익빈 해소방안	·부유세는 건전한 부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 ·재산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시급 ·세원별로 과세기준 확실히 해 불로소득 등 징수해야 ·기업체 과다 토지 보유분, 개발이익은 세금으로 환원 필요	·조세저항 야기할 수 있어 부유세 신설 반대 ·부동산, 조세 부분만 제대로 되면 해결 가능 ·열린우리당에선 2006년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검토 ·내년부터 재산세 시가 반영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각 ·부유세 도입보다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야 ·형평성에 맞는 조세행정 시급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인식 전환 필요	·토지 건물 주식 금융자산 선박 회원권 등 10억 이상 소유자에 대해 초과분 과세 ·종합토지세 2~3%까지 과세 필요 ·공시지가 현실화 통해 11조원 가량 추가 세수 확보 가능 ·확보된 세수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활용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부유세 도입 검토할 필요 있지만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 종토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건축 확대해 주택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이슈 \ 후보	한나라 박승환 후보	우리 박원훈 후보	자민련 채선수 후보	민노 김석준 후보	무소속 노창동 후보
17대총선 각당 공천작업 평가	·상향식 공천, 참여 경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님 ·공천심사위 통한 객관적인 노력과 정치신인 발굴 노력 평가받아야 ·공천 결과 승복해야	·열린우리당 공천, 경선과 종전 공천방식이 3대 7비율 ·어려운 곳 가보라는 당 결정에 영입된 케이스 ·밀실 야합 공천 주장은 사실 왜곡	·보스 정치, 계보 정치로 국민 선택권 좁아져 ·상향식 공천 표방해 놓고 밀실야합 공천 ·현 정치제도 아래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가 가능한지 의문	·당에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경선에 포함시킨 것은 편법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과정이 가장 바람직 ·민노당은 비례대표도 당원들이 직접 참여 선출	·주민 참여가 배제된 공천 및 영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상향식 표방 불구, 중앙에서 결정한 것은 무효 ·잘못된 정치 관행 타파를 위해 무소속으로 세 번째 출마
위기의 부산항 해결방안	·제조와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항만 개발 계획 수립 ·항만 물류 결합 위해 법 제도 지원 필요 ·도로망과 외국인 주거단지 등 후속 지원책 강구돼야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해 기능 활성화 ·장비 현대화, 항만 노동시장 유연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강구돼야 ·항만 배후도시, 경제특구에 특혜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경인지역 화물이 광양항을 이용함에 따라 부산항 물류 위기 도래 ·선박 등록제 개선, 해운세제 개편 등 제도 정비 필요 ·선박 투자자 회사 유치해야	·종합 물류 정보망 구축, 복합물류단지로 발전해야 ·항만공사 역할 강화와 함께 생산성 제고돼야 ·항만 마케팅을 위한 전략 개발 필요	·항만 물류업계 노사관계 유기적인 개선이 중요 ·항만 인프라 구축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원활한 물류를 위한 도로 철도 항공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 필요
인구 및 기업체 역외유출 대책	·대기업 본사, 정부, 공사, 관공서 부산 유치 유도해야 ·금사 공단 기존산업과 함께 IT산업 개발해야 ·부산대 부설 연구소, 중소기업 지원센터 유치 필요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하면 행정수요 및 일자리 창출될 것 ·1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부산 이전 유도 필요 ·금사공단 문제는 구로공단 벤치마킹을 통해 대안 모색해야	·지가 안정 및 원만한 지원책 강구돼야 ·기업 재정지원 외 조세 등에도 메리트 필요 ·지방 세수 확보가 최우선적	·부산 중소기업 재정적·기술적 지원, 부산 배출 인력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고용 보조금 지원 ·IT,영화산업에 치중함으로써 전통적인 제조업 무시 풍조 우려 ·부산대 기술력과 정부 지원, 지역기업 간의 클러스터 구축 필요	·청년층 유출 심해 노인인구 비율 광역시 중 높은 편 ·서울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 특별시 제도 폐지해야 ·지방혁신 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책 마련
금정산 훼손 대책과 고속철 통과관련	·개발론자 주장에 시의 규칙, 조례 등을 통해 확고한 방침을 마련해야 ·경부 고속철 새로운 노선 변경은 힘들듯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환경보존 및 정확한 공사를 위한 감시 필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상업지역 및 시설을 확충해야 ·경부고속철은 향후 기술적인 발전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더 검토해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포동,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 필요 ·재정자립도 확립 위해 아파트 건립은 찬성 ·노포동 고속철도 종점화 시켜야	·고층 아파트 건설로 금정산 훼손, 도로체증, 열섬 현상, 미관 훼손 문제 야기 ·초고층 아파트 건축 원천규제 조례 마련하고 열섬 방지 위해 옥상 녹화해야 ·고속철 관통 막는 일이 최우선으로 환경 안전문제 해결되지 않아	·건축법 조례 마련 등 법적 정비 필요 ·경부고속철 통과 반대, 대안노선 찾아야 ·기존선도 있고 울산 경주로 우회하는 것도 대안

이 벌어졌다. 박승환 후보는 '정책 입안자의 보존 의지와 확실한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노 두 후보도 '초고층 아파트 건축 원천규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박원훈 후보는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활성화할 방향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으며, 채 후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정산 고속철 관통에 대해서는 여야의 후보가 뒤바뀐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나라당 박 후보가 '정책방향이 결정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박 후보는 '이미 결정했지만 환경평가 등 검토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 김·채 두 후보는 '고속철 관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후보는 '대안노선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기의 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승환 후보와 김 후보는 '항만에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해 제조와 물류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원훈 후보는 '다국적 해운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부유세' 도입은』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9일자 8면)

부유세 도입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쟁점이었다. 이 지역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출마한 때문인지 패널들의 시민이슈 조사 때 질문이 많았고, 이를 토론이슈로 정했다.

후보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렸다. 민노당 김 후보와 무소속 노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부과했으면 부유세가 필요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집권 후 세금문제에 대해 흐리멍텅해졌다'면서 '부유세를 통해 11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 그 재원을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신을 폈다.

무소속 노창동 후보도 '부의 심각한 편중을 막기 위해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소득의 은닉, 도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법안을 만들 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두 후보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 박 후보는 '부유세 도입은 건전한 부축적을 저해할 수 있고 이념적 문제도 수반할 수 있다'면서 '기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불로소득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김 후보는 한나라당 박 후보로부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조세 방향이 바뀌어가는데 부유세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나라당 박 후보는 무소속 노 후보로부터 '부유세가 자본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각각 받았으나 기존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시정요구이유

1. 2004년 4월 10일자 『금정산 고속철 관통 여야 바뀐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같은 일자 『'부유세' 도입은』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만이 불로소득세 도입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시정요구인이 가장 먼저 주장했다.

3. 시정요구인의 부산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부산일보 2004년 4월 9일자 8면 『금정산 고속철 관통 여야 바뀐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중 시정요구인이 수신료 분리징수권에 관하여 공영성 훼손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2. 부산일보 2004년 4월 9일자 8면 『'부유세' 도입은』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불로소득세를 신설하고 불로소득자를 조세행정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후보자 중 제일 먼저 주장하였으나 마치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가 이야기 한 것처럼 기사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3. 부산일보 2004년 4월 9일자 8면 『금정산 고속철 관통 여야 바뀐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이 부산항에 관하여 발표한 내용이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부산일보 2004년 4월 13일자 12면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로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으므로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가 수용되었다 할 것이다.

2. 부산일보 2004년 4월 9일자 8면 『'부유세' 도입은』 제하의 기사에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한 3명의 후보 중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의 견해만을 게재하였다. 이에, 시정요구인은 토론회에서 부유세 도입 반대를 제일 먼저 주장하였으므로 시정요구인의 견해를 게재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판단해 보건대 3명의 후보 중 한나라당 후보의 견해만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문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피시정요구인이 「이슈 토론 내용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유세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적시한 것을 고려하면 시정요구인의 의사표현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부산일보 2004년 4월 9일자 8면 『금정산 고속철 관통 여야 바뀐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에서 「이슈 토론 내용 요약표」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부산항에 관한 발표를 게재하였으므로 기사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요구인의 1항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2, 3항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후 보도문

부산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13일자 12면)

내 용 : 지난 9일자 8면에 게재된 '금정구 시민이 슈토론회' 내용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와 관련, 자민련 채선수 후보는 수신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바로잡습니다.

시가 28억원짜리 건물을 시정요구인 부친 명의의 재산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7
시정요구인 : 이 성 헌 (서대문갑 한나라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한국일보
접 수 일 : 2004. 4. 12.
처 리 결 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우상호·이성헌 '대학표심 잡기' 재대결』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8일자 A6면)

내 용 : 서울 서대문 갑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선후배 사이인 한나라당 이성헌,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간 리턴매치로 주목받는 지역. 당초 현역 의원인 이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탄핵정국 이후 판세가 급격하게 우 후보쪽으로 쏠리면서 박빙의 접전지역으로 바뀌었다.

대학가인 지역 특성상 유권자 13만4,000여명 가운데 2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 후보가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이 두텁다는 점 때문. 그러나 이 후보도 젊은 층 고정 지지자가 많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평이다.

연세대 앞을 지나는 경의선 이전 문제가 초반 쟁점이었으나 선거전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 후보측이 이 후보의 재산 문제 등을 집중 문제삼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경의선 도심 관통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했던 이 후보는 복개사업 착수 결정 등 복개화를 지원

하고 있는 반면 우 후보는 "현실가능성이 없다"면서 "아예 걷어 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 아버지 명의의 시가 28억짜리 건물도 쟁점이 된 상태. 이 후보측은 "아버지는 전주 이씨 양도공파 대표자격일 뿐이고 등기부상 소유주도 종친회"라며 "축재 운운은 모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 후보는 "세금 신고 땐 아버지 재산을 포함시키면서 재산 신고는 본인만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부자 동시 출마'로 관심을 끌었던, 김상현 의원의 아들 영호씨가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민노당 정현정 후보는 27세의 참신성을 무기로, 자민련 박종원 후보도 녹색 환경벨트 조성 등 실생활 위주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시정요구이유

한국일보는 2004년 4월 8일자 『우상호·이성헌 '대학표심 잡기' 재대결』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28억원짜리 건물이 시정요구인 부친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이기에 경고조치 및 사과문(반론보도문)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8일자 30판 종합 A6면 『우상호·이성헌 '대학표심 잡기' 재대결』 제목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의혹과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성헌 후보 부친인 이동보씨는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고 사실은 전주이씨 양도공 종중이 소유자이며 (등기부에 종중 대표자로 병기돼 있음에 불과한 것이며 종중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재의 방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우 후보측은 '이 후보가 속한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중의 건물'까지도 문제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첫째, 이동보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둘째, 이것이 선거기간 중 경쟁후보에 악용되어 (적어도 악용될 소지를 만들었음) 이성헌 후보에 피해를 입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는 신성한 민주정신을 훼손하였으며 셋째, 더불어 전주이씨 양도공 종중의 명예까지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시정요구후 정정보도문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13일자 A6면)

내 용 : 본보는 8일자 A6면 '우상호·이성헌 대학표심잡기 재대결' 제목 기사에서 '이 후보 아버지 명의의 시가 28억짜리 건물도 쟁점'이라고 보도했으나 등기부 확인 결과 건물 명의는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중으로 돼 있고 이 후보 아버지 명의가 아니어서 바로잡습니다.

입후보자 지상토론회와 유세동향 보도에서 시정요구인을 제외시켜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8
시정요구인 : 김 영 진
(경남 양산시 민주노동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양산신문
접 수 일 : 2004. 4. 12.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양산신문 : (1)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제하

의 기사 (2004년 4월 2일자 2, 3면)

내 용 : 출마의 변 (2면)

김양수 (한나라당)

저희 한나라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단행했으며, 새 지도부 선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중략)

전덕용 (새천년 민주당)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진흙탕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헌정 50년이 되어도 지역감정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지역주의 정치, 1인 보스정치, 권력에 줄서기 하는 정치, 갈등과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 건국이래 최대국가위기인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과거 민족 민주화운동에 몸바쳐 싸웠던 민족혼을 되살려 이대로는 안되겠다.

(중략)

송인배 (열린우리당)

17대 국회는 '차떼기'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의 관행들을 끊고, 국민에게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중략)

김동주 (무소속)

개인의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탄핵정국으로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산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중략)

김정희 (무소속)

양산에는 양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양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산에 무엇이 필요한 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중략)

나오연 (무소속)

양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단없는 양산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깨끗한 정치인인 본인이 입후보해야 한다는 당원·당직자와 양산시민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후략)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 (2면)

김양수 : 젊은 도시 양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위성도시가 아닌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첨단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략)

전덕용 : 1. 고속철 울산역을 연결하는 양산, 울산간 준고속도로 건설 2. 노포동지하철, 덕계, 서창, 울산간 경전철 건설 부산, 울산, 양산 지자체간 경전철 협의체 구성.

(중략)

송인배 : 양산이 특정시대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게 준광역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정시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중략)

김동주 : 1. 쾌적한 시장경제와 소상공인이 근심없는 경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의 자율경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에 솔선수범, 소상공인의 지원혜택 강화입법 추진, 실업대책에 주력.

(중략)

김정희 : 경제(양산의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양산의 경제 인프라를 구축)

(중략)

나오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들, 예를 들어 양산 물금의 신도시개발사업과 웅상지역의 제7호 국도의 8차선확장 및 서창지구 서편 및 동편의 우회도로건설, 웅상에 대규모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3면)

3. 국회에 대한 민심이 실추됐다. 국회 진출한다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정치소신)

□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43세)

▶국회가 민심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략)

□ 새천년 민주당 전덕용 후보(54세)

▶국회가 국민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헌정 초유의 탄핵사태도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정치는 모름지기 종합예술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대립과 정쟁으로 타협과 존중이 실종된 국회였다.

(중략)

□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35세)

▶새로운 정치는 국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선 과거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제정에 앞장서겠다.

(중략)

□ 김동주 후보(59세)

▶지금 이 나라는 정치가 실종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은 나라를 불안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작금의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략)

□ 김정희 후보(43세)

▶국회에 대한 민심이 실추된 부분은 정당간의 이기주의와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지 못한 국회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양산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할 때 항상 민의의 수렴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도 뚜렷한 제 정치적 소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공학전문가로서의 배운 바를 후회없이 양산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나오연 후보(71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2) 『제17대 총선 후보 지상토론(2)』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9일자 3면)

〈정치소신〉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예측되는 결과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김양수=지금의 시점에서 헌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존중해야 한다.

(중략)

▲전덕용=예측할 수 없다. 가결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국가적 비극이다. 열우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 없는 여당의 역할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지리멸렬 내분에 휩싸일 것이다.

(중략)

▲송인배=헌재에서 부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어떻게 결정하던지 간에 예상되는 국민적 혼란과 분열이 문제이다.

(중략)

▲김동주=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야 3당이 제시한 세가지 사항이 탄핵사유로 경미하다고 본다. 기각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또 한번의 이합집산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략)

▲김정희=헌재의 법률적 판단문제이다. 공정한 판결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사법권 조차도 판결결과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도마위에 올라가야 하는 사법권의 권위마저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정치인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중략)

▲나오연=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가·부간에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후략)

(3) 『후보들 표심잡아 거리로…시장으로…』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9일자 11면)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는 1일 양산지역의 당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 갖고 "경제학과 도시학을 전공하고 실무를 통해 검증받은 도시경제전문가로서 신흥경제도시 양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

휴일인 3~5일 웅상과 서창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양산을 살리려면 경제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

6일 양산시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

8일, 장이 서는 덕계시장을 찾아 개인유세를 통해 "웅상지역 국도7호선을 비롯한 우회도로 개설 추진 등 경제회생에 따른 정책"을 피력.

◆…민주당 전덕용 후보는 2일부터 양산시장과 터미널 인근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조기 이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

6일 오후엔 웅상에서 개최된 자신의 후원회에 참석, 교육자 출신인 자신을 부각시키고 "정직한 전덕용이 양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역설.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는 2일부터 거리유세를 통해 '노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인구 50만 자립도시를 '특정시대, 양산'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

6일 양산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자신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

◆…녹색당 이성경 후보는 휴일인 3~5일 웅상지역 장백아파트단지에서 유세를 갖고 "도로 상하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웅상지역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약.

6~8일, 시내 곳곳현장을 찾아가며 '근로자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강조하며 "20년 경력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와 서민의 대변자로 가슴 시원한 정치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무소속 김정희 후보는 2일부터 본격적인 표몰이에 돌입. 김 후보는 이날 웅상지역 거리유세를 통해 웅상의 숙원사업인 7번국도의 우회도로 확보와 관련 "이미 오래전에 설계를 해 놓았다"며 "이 도로 교통신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통 문제해결하겠다"며 토목환경공학 전문가임을 내세웠다.

3일엔 양산시를 유세차량으로 이동하며 "특목고를 유치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건설될 경부고속전철 울산역에 통도사의 역명을 찾겠다"고 지지를 당부.

휴일인 5~6일, 물금·범어 등을 이동하며 "신도시에 쾌적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아이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초 중 고등학교를 증설하겠다"고 공약사항을 피력.

7일, 동면을 찾아 "동면지역 그린벨트를 정비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무소속 김동주 후보는 2일 터미널 앞에서 1천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유세를 갖고 "양산발전에 적임자는 김동주"라고 지지를 호소.

또 김 후보는 시내를 순회하며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뚝심있는 추진력으로 양산발전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다"며 3선 의원으로 추진력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하기도.

이어 휴일인 3~5일 웅상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돌며 "웅상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부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웅상까지 연장하는 데는 중앙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김동주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

◆…무소속 나오연 후보는 3일 범어 지역을 시작으로 유세차량과 LCD 방송차량 홍보를 시작.

이날 오전에는 하북 지산, 서리, 신평, 내원사입구, 오후에는 반회, 터미널, 북정 지역을 이동하며 홍보.

특히 LCD 방송차량에서 틀어주는 영상물을 통해 나 후보는 취미가 유도라며 양산을 공격하는 청년들을 한판 업어치기로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나이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기도.

4~6일 연휴기간엔 원동, 물금시장과 동면 등지 길거리유세에서 "나야말로 진정한 한나라당 후보이며, 비록 젊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소장파들이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지만, 당선되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구하는 등불이 될 것"임을 밝혔다.

시정요구이유

양산신문은 지난 4월 2일자 2, 3면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과 4월 9일자 3면 『제17대 총선 후보 지상토론(2)』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시정요구인에게 토론회 참가요청이나 참가여부를 물어오지 않았고, 4월 9일자 11면 『후보들 표심잡아 거리로…시장으로…』 제하의 기사에서는 시정요구인에 대해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시정요구인을 유세동향 취재에서 제외시키는 불공정보도를 반복했다. 따라서 양산신문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및 주의·경고 등의 제재 조치, 타 후보와 같은 크기의 기사 내용을 동일 지면에 게재할 것을 청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사과문

본지는 지난 2004년 4월 2일자 2, 3면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과 4월 9일자 3면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2)』, 11면 『후보들 표심잡아 거리로…시장으로…』 제목의 기사에서 양산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대상으로 입후보자 지상토론의 형태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양산시 선거구에 입후보한 민주노동당 김영진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 2, 시행규칙 제45조의 2에 의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쟁력있는 입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 지상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은 것은 본지의 명백한 불공정보도라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사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본지는 양산신문 주최 대담 토론회 참석 요구에 승낙서를 보내는 등 지역구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 김영진 후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차례에 걸친 본지의 불공정보도로 인해 김영진 후보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양산신문 2004년 4월 2일자 2, 3면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제하의 기사와 2004년 4월 9일자 3면 『제17대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2)』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피시정요구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시정요구인을 제외하여 토론회를 개최, 기사화 하였는 바, 사과문 등의 제재조치와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후보들과 같은 크기의 기사 내용을 동일 지면에 게재하라.

2. 양산신문 2004년 4월 9일자 11면 『후보들 표심잡아 거리로… 시장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8명의 후보 중 시정요구인을 제외한 7명의 후보에 대한 유세동향만을 보도하였는 바, 사과문 등의 제재조치와 다른 후보들과 같은 크기의 기사 내용을 동일 지면에 게재하라.

이　　유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신문의 지면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시정요구인인 양산신문은 답변서에서 위 규정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 참석할 인물 선정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관한 규정인 제82조 2 제4항 제3호를 준용하여 참석자를 선별하였다고 한다.

판단해 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 3명, 직전선거인 제16대 총선 출마자 중 득표율이 5%가 넘는 2명, KBS 여론조사결과·부산일보·경남신문 보도를 참고로 하여 인물 적합도를 감안한 후보 1명 등 총 6명의 후보를 토론회 참석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토론회 기사와 관련하여 토론회 참석 기준에 대한 설명과 제외된 후보자에 대한 이유를 적절히 적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더 부합하다 할 것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위는 아니라고 본다.

2. 시정요구인은 양산신문 2004년 4월 9일자 11면 『후보들 표심잡아 거리로… 시장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8명의 후보 중 시정요구인을 제외한 7명의

후보에 대한 유세동향만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해 보건대 피시정요구인이 유세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정요구인에게 송부하라고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인은 보도자료를 피시정요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결과, 시정요구인의 유세동향이 기사지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피시정요구인이 밝혀왔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요구인의 1, 2항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요구인 아내 명의의 건물에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보도하고 타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자임을 부각시켜 피해를 입었다.

안 건 번 호 : 2004시심9
시정요구인 : 이 성 헌 (서대문갑 한나라당 후보자)
피시정요구인 : 문화일보
접 수 일 : 2004. 4. 13.
처 리 결 과 : 기 각

보도내용

문화일보 :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하의 기사 (2004년 4월 10일자 8면)

내 용 : 연세대 총학생회장 선후배 사이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가 두 번째로 맞붙는 서울 서대문갑 선거구는 서로가 우세를 주장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는 우 후보가 탄핵 역풍 등에 힘입어 10%가량 앞섰으나 선거초반 불거진 '노(老)풍'과 '박근혜 효과'로 이 의원이 맹추격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선 학생회장 선배인 이 의원이 우 후보를 1300여표 차로 이겼었다. 이 의원은 "탄핵 역풍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후보는 "선거초반 7%가량 앞섰던 지지율이 이젠 고착화됐다"고 맞받아쳤다.

이곳에서도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경기도 송탄시 아내 명의의 건물 2채는 처갓집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아내가 투자해 지분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재산(6억1000만원)보다 부채(8억3000만원)가 더 많다고 신고했다.

우 후보는 "전과 2개는 모두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괜한 오해'를 차단하는데 애썼다. 아버지(김상현 의원)가 내리 5선을 기록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호 후보와 자민련 박종원, 민주노동당 정현정, 무소속 고은석 후보도 표밭을 갈고 있다.

시정요구이유

문화일보는 2004년 4월 10일자 8면 선거관련 특집 시리즈 기사에서 시정요구인 아내 명의의 건물은 수십년간 보유해오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껴 12년전 지은 건물로서 이에 대한 의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증식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반면, 전과기록 보유자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고 대비시킴으로써 기사의 공정성을 잃었기에 이에 대한 경고조치 및 정정보도문을 요청한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4년 4월 10일자 8면, 『희망찾기 4·15 D-5 격전 50곳 '도덕성'이 판세를 가른다〈7〉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송탄시 이 후보 아내 명의의 건물"은 특별히 논란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사실의 과장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기각 결정문

주　　문 :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문화일보 2004년 4월 10일자 8면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4년 4월 10일자 8면 『재산증식 의혹-전과기록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시정요구인의 경우 아내 명의로 된 건물 2채와 관련하여 재산증식 논란이 있으며 우상호 후보의 경우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공방이 있다며, 이에 대한 두 후보가 주장하는 해명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아내 명의의 건물 2채는 12년 전 과도한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융자를 받아 지은 것으로서 재산증식에 전혀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요구인과 대비하여 경쟁 상대인 우상호 후보의 경우 전과기록 공방이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각성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기에 경고조치와 함께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판단해 보건대 시정요구인은 아내 명의로 건물 2채가 있고 우 후보는 전과기록이 있어, 두 후보간에 재산증식 의혹과 전과기록 공방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하여 기사에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후보의 해명기사를 충분히 게재하였다. 그리고 우 후보의 경우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반드시 우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관해 다룬 해당 기사의 제목을 『재산증식 의혹』 대신 『재산증식 논란』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에 더 부합하다 할 것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위는 아니라고 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정요구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사건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5부 선거기사심의 관련 법규 및 서식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 선거기사심의기준
- 서 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

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 (설치 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기 등)

①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 (회의 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 (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정기간행물 제출)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기간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구독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안건)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①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 (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 · 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특례절차)

신속한 심의 ·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 (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 (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집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 (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객관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 (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 (사실보도) ①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 (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뷰 기사)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기고)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 (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진 게재) ①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게재시 가능한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 고

제16조 (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시 정 요 구 서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시정요구대상	⑤정기간행물명		⑥대표자 성명	
	⑦보도일자 및 지면		⑧소 재 지	
	⑨보도내용		⑩전화번호	
시정요구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주 소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전화번호		
피 청 구 인	⑦성명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주 소		
	⑨대표자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소 재 지		⑫전화번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정기간행물명				
	⑭보도일자 및 지면				
	⑮보 도 내 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397-3114 • 언론피해상담 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 / FAX:051)759-7084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제일빌딩 5층)
053)763-0020 / FAX:053)763-0021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 / FAX:062)676-0361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 / FAX:042)525-0779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 (송림빌딩 2층 204호)
031)211-9027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 / FAX:033)255-2879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 (동산빌딩 302호)
055)263-1787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 FAX:064)726-320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04년 6월 25일 인쇄
200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영 식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의실 심의2팀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대표)397-3114
언론피해상담 : 397-3000, 3010, 3100
FAX : 397-3029, 3049, 3069, 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